

2008 연구보고서 - 3

# 근로장려세제(E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조선주 · 김영옥 · 정진욱 · 임병인 · 이선행

KWADI

---

##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 : 조 선 주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영 옥 (본원 선임연구위원)

정 진 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 병 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선 행 (본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발 간 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소득과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08년 1월 1일 시행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50%를 넘어서고,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의 근로빈곤율은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의 측면에서 개인의 사회활동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지원의 방식으로 2009년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조세·재정정책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괄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여성경제활동촉진 및 근로복지를 위한 제도로서 정착, 발전하는데 필요한 정책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본 연구결과가 여성의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함은 물론이고, 여성경제활동촉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로서 개선 및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원내의 자문위원과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노력하신 연구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 연구요약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빈곤층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 경활빈곤층 중에서는 51.2%, 근로빈곤층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임. 특히 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 가구의 규모는 여성가구주 중 25%를 차지하며, 절대빈곤선의 1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여성 한부모 가구주 가구의 37.4%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여성빈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차별현상과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 이러한 여성의 경제자립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회활동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조세·재정정책은 이러한 실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해옴. 이 중 중산층·서민층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방법으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시행됨.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소득과약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그러나 지금까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심층적 다룬 연구는 거의 없음. 그간 조세·재정정책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괄적 연구였으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또한 저소득층 근로유인에 관하여는 실증연구보다 개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임.
- ☐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장려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즉, 노동공급의사 결정)와 근로시간(노동공급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음. 이에 가구단위의 정책집행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성별에 따라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음. 또한 여성 가구주 및 '2차 소득자로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에 더 중점을 두었음. 이에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개선 및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먼저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발전과정, 관련 이론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함. 각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각국의 제도 현황과 국내외 실증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현황과 여성이슈와의 관계를 분석함.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은 아직 지급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공급모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함.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제언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장려세제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추정된 실증분석 결과 등을 가지고 세미나 등을 개최함.

□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임. 첫째, 국내외 각국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국가별 EITC 사례를 분석하였음. 둘째,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여성이슈를 분석함. 셋째,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한 축약형 방정식을 제시함.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여성에게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인가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 측면으로 나누어서 실증분석하였음. 넷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여성경제활동촉진 및 근로복지를 위한 제도로써 정착, 발전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2. 이론적 논의와 주요 실증연구

- EITC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가격효과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EITC 유형 제도가 근로자에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노동공급이 결정됨. 이론적으로 EITC 유형제도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거나 불확실함.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장려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시간 공급은 대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EITC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이전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실효임금(effective wage)의 증가를 이유로 하여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임. 이와 동시에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 않는 이유도 작용함.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론적인 예측과 달리 EITC의 노동공급효과가 계층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즉, EITC가 저소득계층의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실증연구(Browning, 1995; Kusters, 1993)와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Eissa & Liebman, 1996; Meyer & Rosenbaum, 1998)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EITC가 종합적으로는 노동공급량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연구(Ellwood, 2000; Liebman, 1998; Scholz, 1997)도 주장되고 있음. 따라서 실증연구에 의해서도 EITC와 노동공급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여성의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다수의 연구(Blank, et al., 1999; Dicket et. al., 1994)들이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에 동의하고 있음. 이 연구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 EITC 제도에 의해 복지급여 대신 취업을 하도록 유인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저학력(혹은 저소득) 기혼여성에 한정하여 검토하였음. 대상을 저학력 기혼여성에 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동 집단의 여성들은 EITC의 직접적 수급자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임. 그 결과, 미국의 EITC 확대가 저소득 기혼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낮춘다는 Edgerton(2002) 및 Eissa & Hoynes(1998), 유지영·정영순(2007)의 선행연구와 영국의 WFTC가 근로시간이 짧은 편부모의 근로의욕을 강화시키는 한편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근로시간을 감축시킨다는 Blundell, Duncan, Meghir, & McCare(1999, 2000)의 선행연구가 있었음.

### 3. 국가별 EITC 운영사례

- 현재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7여개국이며, 동 제도는 각국의 사회여건과 관련제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 및 도입목적에 따라 제도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면세점을 설정하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그 면세점 수준이하라면 정해진 기준액만큼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임. 미국 정부는 1975년에 이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제도적 보완을 거듭하여 옴. 미국에서의 EITC는 미국 내 저소득근로계층이 부담하고 있었던 사회보장세의 보전을 통해, 저소득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음. 현재 운영형태는 최대급여 연 4,716달러 수준임(2007 회계연도 기준).
- 영국의 근로장려세제는 1988년에 도입된 'In-Work benefit'의 형태를 띤 FC(Family Credit)로 대표되며, 1999년에 FC를 보다 확장하여 WFTC를 도입함. 2003년에는 이 WFTC를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개편하고 기존의 아동수당과 실업수당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WTC가 미국의 EITC와 다른 점은 점증구간이 없고, 수급자격이 연간 근로소득이 아닌 주당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에 비해 점감률이 높은 편이고 급여액 수준 또한 높다는 것임.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추가급여가 지급됨.

- 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인 PPE(Prime Pour l'Emploi)는 기존의 최빈층 생계지원제도인 RMI가 가지고 있었던 근로유인에 대한 저해현상을 해결하고, 수혜대상자들의 취업유인구조 설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2002년에 시행되었음. PPE의 특징은 평탄구간이 없다는 것과 점증-점감구간의 소득상한 및 하한이 최저소득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으로 말미암아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일제 근로자 소득의 30% 미만인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가 배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즉, PPE는 시간제 근무자보다 전일제 근무자를 우대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벨기에의 근로장려세제인 Credit d'impôt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되었음. 급여체계는 미국 EITC의 유사한 형태이나 프랑스의 PPE처럼 최소소득기준이 적용됨.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급여액 수준이 낮고, 적용소득 범위도 좁은 것이 특징임. 벨기에의 Credit d'impôt 수급대상이 가구단위로 결정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개인단위로 수급대상이 결정된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임. 이에 따라 자녀 및 가족 관련 수급요건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여지급의 시차로 인한 근로유인 제고효과가 미흡해 도입 3년 만인 2005년에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전환됨.

#### 4.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과 여성이슈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2대 사회안전망(기초생보, 사회보험)이 차상위 계층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는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제공'의 크게 두 가지이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증가와 관련 근로유인제공의 취지는 매우 중요함.
- 2008년 1월 1일 제도시행시(2008년 12월 19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적용대상 조기확대에 관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할 것) 근로장려금의 수급대상은 당해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이며, 거주자와 생



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임. 또한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어야 함.

-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구단위 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급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적용범위가 점증구간(phase-in range), 평탄구간(flat range), 점감구간(phase-out range)으로 구분되는데, 연간근로소득이 0~800만원인 경우 급여액은 근로소득의 10%이며, 800만원~1200만원인 경우 최대급여액이 80만원, 1,200만원~1,700만원인 경우 (1,700만원-근로소득)의 16%임.
- 우리나라는 근로장려세제 도입과정에서 여성가구주 및 한부모 가구, 여성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 따라서 근로장려세제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여성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양성 평등한 근로복지연계제도로써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효과, 급여지급단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인 빈곤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상자 범위가 너무 협소하며, 지급하는 금액과 1년에 1회 지급하는 시기의 문제 등의 이유 때문임.
  - 둘째, 소득과약을 제고의 측면에서 EITC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임. 따라서 EITC를 통한 소득과약률의 재고보다는 면세점 인하의 효과와 맞물려 소득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음.
  - 셋째, 여성의 저임금 노동의 양산을 우려하는 측면임.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로 유인제고, 소득과약률 제고 등의 효과를 가질 것이며, EITC로 인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저임금노동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5.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과 여성 노동공급효과

-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효용함수로 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였음.
-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다른 자료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아직 1차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일반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류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함.
-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가구단위로 데이터를 뽑은 후 가구주와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노동공급함수를 성별로 추정하였음. 분석의 대상연령은 15-64세임. 배우자의 유무와 성별에 따라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또 다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함(<표> 참조).

〈표〉 분석유형 구분

	그룹의 특징		그룹
여성	배우자가 있는 유형(type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group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group2
	배우자가 없는 유형(type2)		group3
남성	배우자가 있는 유형(type3)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group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group2
	배우자가 없는 유형(type4)		group3

□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참가유무의 측면(extensive margin)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나 편모가구에는 무관한 관계가 나타남. 분석의 대상을 15세에서 55세까지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음. 이는 편모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했다는 다수의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이 밖에 대도시거주여부, 18세미만의 아동 수, 배우자의 임금 등은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의 측면(intensive margin)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연간 임금이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1% 증가할 때, 연간 근로시간이 약 138시간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반면,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나 편모가구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를 줄임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경제활동참가유무의 측면(extensive margin)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과 그룹3(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인 그룹2에는 무관한 관계가 나타남. 그룹3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국복지패널과 다른 결과임.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가장인 경우는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 밖에 18세미만의 아동 수,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여부 등은 맞벌이 가구 여성 및 편모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의 측면(intensive margin)에서 여성의 경우, 그룹1(배우자가 있고 (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과 그룹3(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의 근로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인 그룹2에는 무관한 관계가 나타남. 그룹3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국복지패널과 다른 결과임.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이 많이 샘플링 된 한국복지패널과 도시가계조사를 원자료로 샘플링한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의 차이라고 보여짐.

## 6. 여성친화적 근로장려세제(EITC)로의 발전방안

- 실증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구 내 남, 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외국의 다수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편모가구와 여성가장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과는 달리 저소득 맞벌이 가구 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추정모형에서 고려되지 못한 다양한 제약요인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실제의 여성가장가구(그룹2)와 편모가구(그룹3)의 노동시장 참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효과가 미약한 것은 적용대상자를 일부 근로빈곤층으로 제한(부부합산연간소득 1,700만원 미만)하면서 최대적용소득구간과 점증률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결과로 보여짐.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전반적인 효과는 여성들의 취업 및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소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여성 근로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 및 근로유인강화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최대적용소득구간을 연장하여 수급가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급가구를 세분화하여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정책방향을 전제로 할 때, 근로장려세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소득층 여성의 실효임금(effective wage)증가 효과(근로의욕고취), 빈곤감소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보다 현실화해야 함. 제도 도입초기 급여 상한액인 연 80만원의 현금 급여는 탈빈곤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므로 빈곤감소와 소득재분배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이 일정액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근로장려세제의 세부설계와 관련하여서는 가구의 유형 및 개인의 유형(예, 맞벌이 가구 내 여성, 홀벌이 가구 내 여성, 편모인 여성 등)에 따라서 급여체계를 차등화하여 이들 가구의 2차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감소 효과를 완화시켜야 할 것임.
- 셋째, 이와 아울러 2차 소득자로서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인 단위의 소득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고려해야만 함.
- 넷째, 근로장려세제가 여성 한부모 가구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도 요구됨.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여성근로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등 경제·사회적 측면의 지원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5
3. 주요 연구내용 .....	8
II. 이론적 논의와 주요 선행연구 .....	9
1. 이론적 논의 .....	15
가. EITC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15
나. EITC 제도와 여성의 노동공급 .....	17
2. 외국의 선행연구 .....	21
가.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	21
나. 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	23
3. 국내의 선행연구 .....	25
III. 국가별 EITC 운영사례 .....	29
1. 미국 .....	31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	31
나. 미국 EITC의 개념 및 성격 .....	32
다. EITC 급여체계와 발전과정 .....	33
라. 운영형태 .....	37
2. 영국 .....	38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	38
나. WTC(Working Tax Credit) .....	39
3. 프랑스 .....	43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	43
나. PPE(Prime Pour l'Emploi) .....	44
4. 벨기에 .....	46
5. 소결 .....	47
 IV.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과 여성이슈 .....	49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현황 .....	51
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	51
나.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체계 .....	53
다.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산정방식 .....	55
라.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효과 및 쟁점사항 .....	60
2. 근로장려세제와 여성 이슈 .....	66
가. 여성 근로빈곤의 현황과 특성 .....	67
나. 여성가구주의 빈곤 현황과 특성 .....	71
다. 여성의 근로빈곤과 한국형 EITC .....	75
 V.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과 여성 노동공급효과 .....	79
1. 여성 노동공급함수의 도출 .....	81
2. 자료의 특성 .....	85
가. 한국복지패널 .....	85
나. 한국노동패널 .....	100
3. 변수의 설명 .....	116
가. 한국복지패널 .....	116
나. 한국노동패널 .....	118
4.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 .....	120
가. 개요 .....	120
나. 한국복지패널의 추정결과 .....	122
다. 한국노동패널의 추정결과 .....	141

5. 소결 .....	162
<b>Ⅵ. 여성친화적 근로장려세제(EITC)로의 발전방안 .....</b>	<b>169</b>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	171
2. 정책 과제 .....	177
 ■ 참고문헌 .....	 181
 ■ Abstract .....	 189



## 표 목 차

<표 II-1> EITC 구간별 이론적 노동공급효과 .....	17
<표 II-2> WFTC가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결과 요약 .....	25
<표 III-1> EITC 제도의 변화 .....	35
<표 III-2> 미국 EITC의 급여산정기준 변화추이(1975-2003) .....	36
<표 III-3> 영국 WTC의 구성요소와 급여액(2007년 기준) .....	40
<표 III-4> 연소득에 따른 WTC 급여액(2008-2009년 기준) .....	42
<표 III-5> 연소득에 따른 CTC와 WTC 급여액(2007-2008년 기준) .....	42
<표 IV-1> 근로장려급여 산출식 .....	56
<표 IV-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의 산식 .....	59
<표 IV-3> 근로장려금 산정표 .....	59
<표 IV-4> 근로장려세제 단계적 확대방안 .....	59
<표 IV-5> 취업/실업/비경활 인구 중 소득계층별 분포 .....	70
<표 IV-6> 근로빈곤집단의 혼인상태 분포 .....	70
<표 IV-7> 가구주 성별 연령별 빈곤가구 비율 및 빈곤률 .....	72
<표 IV-8> 빈곤 여성가구주의 고용형태별 분포 .....	73
<표 IV-9> 여성 한부모의 소득계층별 분포 .....	75
<표 V-1> 유형별 분포-복지패널 .....	86
<표 V-2>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복지패널 .....	87
<표 V-3>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자녀수 분포: 여성-복지패널 ...	88
<표 V-4>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자녀수 분포: 남성-복지패널 ...	88
<표 V-5> 유형별 연령분포-복지패널 .....	89
<표 V-6> 유형별 학력분포-복지패널 .....	90
<표 V-7> 유형별 거주지역 및 18세 미만 아동수의 분포-복지패널 .....	91
<표 V-8>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의 분포-복지패널 .....	92
<표 V-9> 연근로소득 분포-복지패널 .....	93
<표 V-10> 배우자의 연근로소득 분포-복지패널 .....	94

<표 V-11> 부부합산 연근로소득의 분포-복지패널 .....	95
<표 V-12> 연근로시간의 분포-복지패널 .....	96
<표 V-13> 복지패널 전체의 일반적 특성 .....	97
<표 V-14> 복지패널 여성의 일반적 특성 .....	98
<표 V-15> 복지패널 남성의 일반적 특성 .....	99
<표 V-16> 유형별 분포-노동패널 .....	100
<표 V-17>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노동패널 .....	101
<표 V-18>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자녀수 분포: 여성-노동패널 ·	102
<표 V-19>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자녀수 분포: 남성-노동패널 ·	102
<표 V-20> 유형별 연령분포-노동패널 .....	103
<표 V-21> 유형별 학력분포-노동패널 .....	104
<표 V-22> 유형별 거주지역 및 18세 미만 아동수의 분포-노동패널 .....	105
<표 V-23>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의 분포-노동패널 .....	106
<표 V-24> 유형별 취업상태 분포-노동패널 .....	107
<표 V-25> 연근로소득 분포-노동패널 .....	108
<표 V-26> 연근로시간 분포-노동패널 .....	110
<표 V-27> 배우자 연근로소득 분포-노동패널 .....	111
<표 V-28> 부부합산 연근로소득의 분포-노동패널 .....	112
<표 V-29> 노동패널 전체의 일반적 특징 .....	113
<표 V-30> 노동패널 여성의 일반적 특징 .....	114
<표 V-31> 노동패널 남성의 일반적 특징 .....	115
<표 V-32>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복지패널 전체 .....	117
<표 V-33>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복지패널 여성 .....	118
<표 V-34>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복지패널 남성 .....	118
<표 V-35>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노동패널 전체 .....	119
<표 V-36>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노동패널 여성 .....	119
<표 V-37>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노동패널 남성 .....	120
<표 V-38> 분석유형 구분(여성) .....	121
<표 V-39> 분석유형 구분(남성) .....	121
<표 V-40> 전체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23

<표 V-41> 여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23
<표 V-42> 남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24
<표 V-43> 여성의 그룹별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25
<표 V-44> 남성의 그룹별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25
<표 V-45> 전체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	127
<표 V-46>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	128
<표 V-47> 남성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	129
<표 V-48> 여성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	130
<표 V-49> 남성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	131
<표 V-50> 여성의 그룹별 경제활동참가 추정결과-복지패널:15-55세 .....	132
<표 V-51> 남성의 그룹별 경제활동참가 추정결과-복지패널:15-55세 .....	133
<표 V-52> 전체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34
<표 V-53> 여성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35
<표 V-54> 남성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36
<표 V-55> 여성 그룹별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38
<표 V-56> 남성 그룹별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	139
<표 V-57> 여성의 근로시간 추정결과-복지패널:15-55세 .....	140
<표 V-58> 남성의 그룹별 근로시간 추정결과-복지패널:15세-55세 .....	141
<표 V-59> 전체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	142
<표 V-60> 여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	143
<표 V-61> 남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	143
<표 V-62> 여성 그룹별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	144
<표 V-63> 남성 그룹별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	145
<표 V-64> 전체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	146
<표 V-65>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	147
<표 V-66> 남성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	148
<표 V-67> 여성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	150
<표 V-68> 남성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	151
<표 V-69> 여성의 그룹별 경제활동참가 추정결과-노동패널:15-55세 .....	152
<표 V-70> 남성의 그룹별 경제활동참가 추정결과-노동패널:15-55세 .....	153

<표 V-71> 전체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	154
<표 V-72> 여성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	155
<표 V-73> 남성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	156
<표 V-74> 여성 그룹별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추정결과-노동패널 .....	158
<표 V-75> 남성 그룹별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추정결과-노동패널 .....	159
<표 V-76> 여성의 근로시간 추정결과-노동패널:15-55세 .....	160
<표 V-77> 남성의 그룹별 근로시간 추정결과-노동패널:15-55세 .....	161
<표 V-78>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의 경제활동참가 비교 .....	164
<표 V-79>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의 경제활동참가 비교: 여성그룹별 .....	166
<표 V-80>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의 근로시간의 비교 .....	166
<표 V-81>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의 근로시간의 비교: 여성그룹별 ·	167

## 그 림 목 차

[그림 I -1]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진행도 .....	7
[그림 III-1]	미국 EITC의 급여체계 .....	34
[그림 III-2]	미국의 EITC(2005) .....	37
[그림 III-3]	영국의 WTC (2006) .....	41
[그림 III-4]	프랑스 PPE (2005) .....	45
[그림 IV-1]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체계(재정경제부, 2007) .....	54
[그림 IV-2]	근로장려급여 체계 .....	56
[그림 IV-3]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체계 .....	58
[그림 V-1]	유형별 분포 비율-복지패널 .....	86
[그림 V-2]	유형별 연령분포 비율-복지패널 .....	89
[그림 V-3]	유형별 학력분포 비율-복지패널 .....	90
[그림 V-4]	유형별 거주지역 분포 비율-복지패널 .....	91
[그림 V-5]	유형별 18세 미만 아동수 분포 비율-복지패널 .....	92
[그림 V-6]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 분포 비율-복지패널 .....	93
[그림 V-7]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복지패널 .....	94
[그림 V-8]	배우자의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복지패널 .....	94
[그림 V-9]	부부합산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복지패널 .....	95
[그림 V-10]	연근로시간 분포 비율-복지패널 .....	96
[그림 V-11]	유형별 분포 비율-노동패널 .....	101
[그림 V-12]	유형별 연령분포 비율-노동패널 .....	103
[그림 V-13]	유형별 학력분포 비율-노동패널 .....	104
[그림 V-14]	유형별 거주지역 분포 비율-노동패널 .....	105
[그림 V-15]	유형별 18세 미만 아동수 분포 비율-노동패널 .....	106
[그림 V-16]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 분포 비율-노동패널 .....	107
[그림 V-17]	유형별 취업상태 분포 비율-노동패널 .....	108
[그림 V-18]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노동패널 .....	109

[그림 V-19] 연근로시간 분포 비율-노동패널 .....	110
[그림 V-20] 배우자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노동패널 .....	111
[그림 V-21] 부부합산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노동패널 .....	112

#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3. 주요 연구내용	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소득과약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08년 1월 1일 시행의 첫발을 내딛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급격히 감소했다가 그 후 조금씩 증가하여 2004년 49.8%를 지나 이제 50%를 돌파하여 2006년 50.3%, 2008년 현재 50.2%(여성가족부, 2007)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50% 수준을 맴돌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적절하게 마련된다면 향후 10년 간 여성경제참여율 60% 수준(네덜란드 56%, 캐나다 62.1%, 덴마크 74.7%; ILO, 노동통계연감, 2006)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환금융위기 이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빈곤층(근로능력자)의 규모는 약 132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전체 빈곤층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 경찰빈곤층 중에서는 51.2%, 근로빈곤층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이다(노대명 외, 2004). 특히 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 가구의 규모는 여성가구주 중 25%를 차지하며, 절대빈곤선의 1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여성 한부모가구주 가구의 37.4%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빈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차별현상과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차이, 사회보장체계에서의 불평등한 지위, 가부장적 가족구조 및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 등과 연동된 빈곤의 여성화<sup>1)</sup>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여성이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인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임시고용<sup>2)</sup>에서 여성이 증가하는 현상은 여성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1)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용어는 1970년대 말 피어스(D. Pearc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빈곤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해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2) 임시고용의 여성화란 여성의 고용이 저임금·비숙련의 시간제 영역에서 증가하는



#### 4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고 해고당할 수 있어 여성을 쉽게 실직상황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 2005년 여성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67.1%이며, 이중 상용직은 25.6%, 임시직은 30.2%, 일용직은 11.3%이다. 남성취업자와 비교할 때 임시직과 일용직은 13.8%, 2.8%가 높았으나 상용직은 15.5%가 낮았다. 여성의 시간제 노동은 정규직 노동자에 적용되는 각종 급부(퇴직금, 월차 및 연차 등의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만 정규직 임금은 60%에도 못 미치는 임금조건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이혼 증가, 여성 단독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이혼율은 결혼대비 이혼율이 1975년에 5.8%, 1985년 10.3%, 1995년 17.1%로 10년간격으로 2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2003년에는 54.8%로 3배로 급상승하였다.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5년에는 40.6%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혼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시 여성이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장기결혼지속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자립과 지위향상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세·재정정책은 이러한 실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제개편의 2대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중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으로 경제활력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정부의 중요한 추진분야로서 중산층·서민층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방법 중 하나인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시행되었다.<sup>3)</sup>

---

현상을 일컫는다.

-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서민층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방법은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근로장려금 도입, 취약전 아동 교육비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혼인·장례비, 소득공제 확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스톡옵션 과세 특례 폐지임(2006.8. 재정경제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05.7.12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공청회를 거쳐 '05.8.18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EITC 도입 결정이 되었다. '06.6.22 『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후 '06.8.21 EITC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며, '06.9.2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되어 '06.12.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되었다. '08.1.1부터 근로장려세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09.9.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1단계 급여인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조세·재정정책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괄적 연구였으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유인에 관하여는 실증연구보다는 개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즉, 노동공급의사 결정)와 근로시간(노동공급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제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설계되어있다. 따라서 여성 가구주 및 '2차 소득자로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에 더 중점을 두어 가구단위의 정책집행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성공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시행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재정의하고,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개선 및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발전과정, 관련 이론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외의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각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자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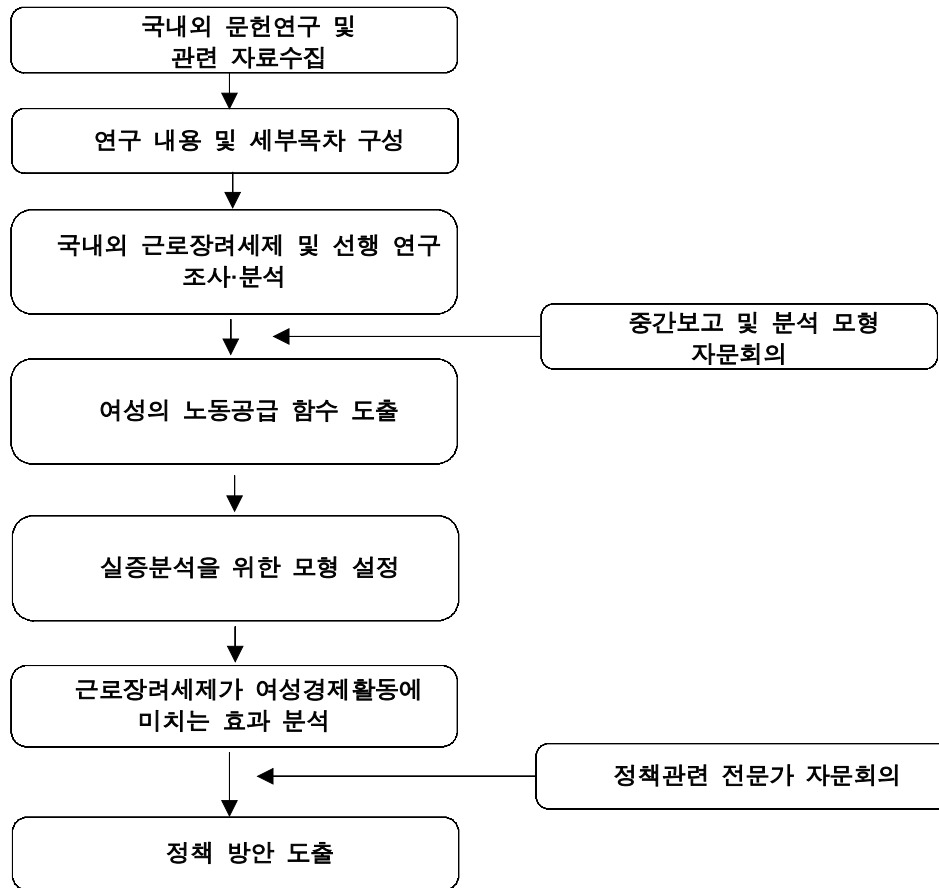
## 6 근로장려세제(E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수집하였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각국의 제도현황과 국내외 실증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현황과 여성이슈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였다. 여성의 노동공급모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축약형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장려세제(E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효용함수로부터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고,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표본선택편의와 노동시간과 임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고려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이 적용대상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제언을 위해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근로장려세제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추정된 실증분석 결과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연구수행과정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진행도

### 3.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에서는 국내외 각국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선행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EITC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EITC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 운영체계, 급여산정방식 등을 정리하고, 한국형 EITC 도입의 쟁점사항과 빈곤여성가구주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은 아직 지급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한 축약형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여성에게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인가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 측면으로 나누어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분석된 여성이슈 및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세제가 여성경제활동을 촉진·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정착, 발전하는데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 II

### 이론적 논의와 주요 선행연구

1. 이론적 논의	15
2. 외국의 선행연구	21
3. 국내의 선행연구	25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sup>4)</sup>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면세점을 설정하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그 면세점 수준 이하라면 정해진 기준액 만큼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EITC에 대한 논의에 앞서 EITC 도입 이전에 이루어졌던 각 제도 및 그 제도들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ITC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소득세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부의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sup>5)</sup>는 EITC의 기초 논리와 함께 파생될 문제점까지도 시사하고 있다. NIT는 1960년대 미국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제안의 목적은 복지제도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면서도 동등한 정도의 혜택을 저소득층에게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부의 소득세제의 적용방법은 소득신자고자의 신고액이 일정 수준의 면세점을 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고, 반면에 면세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면세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조세환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NIT는 Milton Friedman이 제안한 이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론적 보완과 더불어 그에 관한 실증연구도 다수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NIT에 대한 실증연구는 주로 부의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었다. 세제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분석 도구는 세제가 경제주체의 예산선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NIT나 소득보전의 경우 노동공급이 0인 부분에서 예산선이 점프하여 수평선이 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반면, EITC의 경우 노

4) EITC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보전제도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2005년 8월 명칭 공모를 통해 당선된 ‘근로장려세제’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 100조의 2에 명시된 우리나라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제도를 지칭할 때는 ‘EITC’로 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지칭할 때는 ‘근로장려세제’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다.

5) NIT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주장은 Friedman(1962)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당시의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그 대체방안으로 NIT를 주장하였다. NIT의 장점으로 첫째, 행정적 측면에서 복지기관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둘째, 복지제도에 내재된 근로비유인(work disincentives)을 감소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다.

노동공급이 0인 곳에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보다 가파르게 되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노동공급에 미치는 NIT의 실증연구는 각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노동공급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변수들의 성격과 종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NIT에 대한 실증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68년부터 1982년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가장 충실한 표본으로 4차례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연구결과에 의해 부의 소득세제에 대한 부의 효과를 우려해 실제 정책으로는 도입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NIT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던 이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들의 결과는 NIT의 도입이 노동공급과 가족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에 대해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NIT의 도입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앞서 전술한 바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염려로 인해 부의 소득세제는 도입되지 않았다(안중범·송재창, 2000; 전영준, 2004).

EITC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NIT의 논의는 다음에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먼저, EITC는 저소득계층 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는 부(-)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현금이나 쿠폰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방법이 아닌 조세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NIT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6)</sup>

반면에, EITC는 NIT와는 달리 급여체계가 점증구간과 평탄구간, 그리고 점감구간의 세 구간으로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NIT의 경우, 급여구간은 모든 수혜자에게 점감구간만이 적용된다.

EITC의 이 같은 차이점이 NIT가 가지고 있었던 근로에 대한 비유인 발생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고, 이 결과 미국에서 1975년에 NIT대신 EITC를 도입하게 되었다(자세한 논의는 III장의 1절 참조).

6) 단, EITC는 개인과세단위가 아닌 가구과세단위임.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과거에 부의 소득세제와 같은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이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이한 점에 기반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적부조제도는 절대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야 공적부조제도는 최저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와 복지가 연계된 생산복지(workfare)라는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 결과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주목표로 삼았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의 모든 사회공적제도 논의는 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당 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에 저소득층의 저소득 원인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수급자의 근로유인 저해라는 도덕적 해이와 복지의존도 증가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복지프로그램이 단순히 저소득층의 당장의 빈곤을 임시로 처방하여 저소득 탈출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근로유인을 줄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EITC는 근로의욕 제고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1975년에 미국이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TC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많은 논의들과 함께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2008년부터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지원국(2007.10.1)을 신설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최초의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이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08년도의 소득신고액이다.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과세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세제가 지급되며, 2008년 현재 추산으로는 2009년 약 31만 가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의 ‘생활보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하면서 공적부조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EITC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①그 동안 소득과약이 미흡한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과약인프라가 확충되어 사회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②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내용 외에 본장에서는 EITC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제도 비교 및 그 동안의 관련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EITC에 대한 기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의 여성노동공급효과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급여산정기준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공급효과(산업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등) 및 근로자의 빈곤탈피효과를 중심으로 정리·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되는 EITC에 대해 도입배경, 제도의 특성 및 제도시행의 효과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EITC 도입의 이론적 효과와 주로 노동공급과 관련한 주요국가의 실증분석결과 및 EITC와 여성노동공급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EITC 유형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즉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시면서 동시에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빈곤상태를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EITC가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설계된 제도와 노동공급 간의 상관관계를 높이는 것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 점은 근로장려세제를 이제 막 도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미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유사 제도가 해당 국가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국가들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던 EITC 유형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의 대부분은 EITC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ITC 제도와 노동공급과의 실증연구를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 경제이론을 통해 동 제도가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I. 이론적 논의

### 가. EITC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노동공급과 관련한 근로자의 선택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한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을 공급할 것인가(노동시간)를 결정한다.<sup>7)</sup> 첫 번째 과정인 노동시장 참가여부 결정을 ‘extensive margin’상의 결정이라 하고, 두 번째 과정인 노동공급시간 결정을 ‘intensive margin’ 상의 결정이라 한다(Meyer, 2002).

기초적 경제이론 중 여가와 소득 간 개인선택에 있어서 가격효과란 개념을 도입하는데, 여기서 가격효과란 개인선택에 있어서 임금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효과란 노동의 상대가격인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공급에 변화를 주는 효과를 의미하며, 소득효과는 상대가격의 변화에 의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변하고, 이 실질소득의 변화가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개인선택에 있어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간단한 예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질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대체효과). 반면에 이러한 소득증가는 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소득효과).

노동공급에 대한 개인선택과 마찬가지로 EITC 유형 제도의 노동공급 분석도 가격효과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EITC 유형 제도가 근로자에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노동공급이 결정된다. 이론상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느 소득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EITC의 세 구간에 대해서 각각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근로자의 소득이 매우 낮아서 점증구간에 속한 경우, 실질임금의 상

7) 따라서 노동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계약 및 유인양립 계약을 고려하여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승으로 인해 대체효과는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질소득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득효과는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게 된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서로가 반대이므로 이 같은 경우의 노동공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만약 저소득층의 경우 여가가 정상재로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실질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효과 보다는 대체효과가 커져서 노동공급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여가의 가치가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면 EITC형 제도가 노동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소득구간이 평탄구간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실질임금에는 변화가 없고 따라서 소득효과만이 작용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자의 소득이 점감구간인 경우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EITC 유형제도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거나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시간 공급은 대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EITC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근로자는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다가 EITC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이전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실효임금(effective wage)의 증가를 이유로 하여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 않는 이유도 작용한다.

즉, 이상을 요약하자면 EITC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효과는 경제학적 이론에 기초한 예측과 실증분석에 의한 사례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가 시사 하는바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가 상이한데, <표 II-1>에서 보여주듯이 점증구간에서는 양의 대체효과와 부의 소득효과가 발

생하며, 고정구간에서는 대체효과는 없고 부의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점감구간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부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표 Ⅱ-1〉 EITC 구간별 이론적 노동공급효과

급여구간	대체효과	소득효과	종합
점증구간	+	-	미정
고정구간	0	-	-
점감구간	-	-	-

이론적 결과에 따르면 EITC의 수급자들이 어떤 구간에 주로 속해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EITC 수급자의 15% 정도가 점증구간에 속하고, 25%는 고정구간에, 그리고 60% 정도가 점감구간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Ventry, 2000). 이론적 분석과 미국의 소득 구간별 비율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EITC 실시에 따른 노동공급효과는 이론적으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즉 위에서의 논의는 주로 가구당 소득자가 한 명인 홀벌이가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개별 근로자의 노동공급행위가 아니라 주소득자-부소득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참가율·노동공급시간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나. EITC 제도와 여성의 노동공급

사례연구에 의하면 EITC 유형 제도는 여성들의 노동공급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근로장려세제가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2005년 1.08명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제

외하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노동공급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여성 노동공급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가 출산율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만약 현재의 출산율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50년 노인 부양률(65세 이상/15-64세 인구비율) 69%로 미국 32%, 일본 72%, 독일 49%, 프랑스 46%, 영국 39%와 비교할 때, 일본에 이어 OECD 최고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연금·건강보험 부담으로 인한 재정위기, 정치·사회적 미래지향성 결여 등으로 국가차원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여성들의 생활과 육구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생활과 가정 내에서 양육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조하는 정책은 자칫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출산율을 낮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동 제도가 출산친화적인 정책인가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근로와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정책이 여성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 등의 가정생활이 근로활동에 지장 받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는 여성이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남녀평등의 이념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이 제안되었으나, 최근에는 여성뿐 아니라 부모에 동일하게 일과 가정의 책임을 분담하고 둘을 조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맞벌이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가정생활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여성을 위주로 입안되고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의 목표는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등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것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효임금을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직접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 감소

노동공급에 있어서 여성의 기회비용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출산, 양육의 즐거움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 등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기회비용을 모두 줄여주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며,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대표적인 정책 예로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 수 있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과 노동시장 경험 단절의 손해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출산 여성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급 혹은 무급의 휴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출산은 여성의 활동 단절을 가져와 노동시장과 관련한 비용을 초래한다. 이에선 일을 그만둠으로 생기는 소득손실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축적에 대한 보상을 놓치며, 일을 하지 않는 동안 급격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남녀의 임금격차를 일부 설명해준다(Gronau, 1998; Korenman & Neumark, 1992). 모성 휴가의 수당액과 기간은 나라별로 다양한데, 미국의 경우 12주의 무급휴가가 제공되는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많은 휴직·휴가 제도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이유로 휴가 및 휴직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직·휴가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휴직 이후 동일한 직급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휴직을 이유로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이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도록 노동시장에의 밀착성을 높여주므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크게 기여한다. 고용주 측면에서 보면, 숙련 노동자의 노동 단절에 의한 손해, 임시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비용, 연금비용 등으로 인해 일시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숙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더욱 직장 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의무사항이든 고용주에 의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전가되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이러한 의무사항의 부담이 클 때, 고용주는 이를 임금이나 고용 등의 조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결국은 특정 그룹에게 혜택을 주려 했던 제도가 그 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Gruber(1994)에서 지적하듯 고용주에게 출산의료혜택을 의무화하면 고용주는 출산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의 미혼 여성에 대한 고용을 줄이고 그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하는 인센티브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모성(부모)휴직이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주나 직장 동료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고안되어야 한다.

#### □ 실효임금 증가

자녀를 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시간당 임금률에서 자녀 양육에 드는 시간당 비용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액수를 여성이 노동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효임금률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효임금률의 상승은 그 자체만으로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출산 및 양육으로 노동시장 경력 단절을 가져오게 될 경우의 기회비용을 확대시켜 노동시장 부착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은 자녀수나 양육비 및 교육비에 연계하여 실효임금률을 늘려주는 방안을 포함한다.

출산친화적 세제<sup>8)</sup>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공제를 제공하거나 보전세제를 제공함으로써, 유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자녀공제는 재회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느껴지기 어렵지만, 잠재적으로 출산장려를 지향하고 있어 출산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 친화적 세제를 통해 받는 급여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로는 미국의 자녀양육 보전세제(CCTC : Child Care Tax Credit)와 영국의 자녀 보전세제(CTC : Child Tax Credit)가 있다. 미국의 EITC와 영국의 WTC는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시장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보전 세액이 자녀수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므로 출산 친화적이

8) 안중범 외(2006)는 출산친화적 세제로 공제제도에 가구원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할 수 있다. 영국의 WTC는 보육 항목을 따로 두어 자녀 양육비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동 프로그램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로그램에 대한 Blundell et al.(2000)의 연구나 미국 프로그램에 대한 Scholz(1996)의 연구가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의 CDTC(Children and Dependent Tax Credit)와 같이 자녀의 보육비용을 세제를 통해 환급해주는 제도도 노동시장을 통해 자녀비용을 줄여주어 실효임금률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물론 이들 제도 모두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조건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나, 여성의 노동시장활동 및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설계한다면 여성의 노동공급을 장려하면서 출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외국의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EITC 제도와 노동공급과의 실증연구를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하였다. 먼저, EITC의 노동공급효과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 가.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앞서 분석한 이론적인 예측과 달리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은 EITC의 노동공급효과가 계층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EITC가 저소득계층의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실증연구(Browning, 1995; Kusters, 1993)와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Eissa & Liebman, 1996; Meyer & Rosenbaum, 1998)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EITC가 종합적으로는 노동공급량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연구(Ellwood, 2000; Liebman, 1998; Scholz, 1997)도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실증연구에 의해서도 EITC와 노동공급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다수의 연구(Blank, et al., 1999; Dicket et. al., 1994)들이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에 동의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 EITC 제도에 의해 복지급여 대신 취업을 하도록 유인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EITC 유형 제도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 된 미국과 영국에 대한 실증연구 개관을 통해 실제로 EITC 유형 제도가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 미국

미국에 대한 대표적 실증연구 결과로 Meyer(2002)가 있다. Meyer는 1990-96년 기간 동안의 EITC 확대가 편모 가구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알아보기 위하여 각 가구를 학력과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eyer의 분석에 의하면 EITC 제도의 확대는 저학력 혹은 저소득·유자녀 편모 가구의 취업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학력 및 고소득 편모 가구의 노동시간 감소는 이론상의 예측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Meyer(2002)를 포함해서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EITC가 취업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노동공급시간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Eissa & Hoynes(2005)는 편부모가구에 노동시장참가효과(participation effect)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로 'intensive margin'의 탄력성이 실제로 낮아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신축적인 노동공급시간의 선택이 어렵다는 점, 측정상의 문제, 그리고 EITC와 근로소득세의 혼재로 인한 납세자들의 EITC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한편, Eissa & Hoynes(2005)는 양부모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서 대부분 평탄-점증구간에 위치하고 노동공급시간을 소폭 줄임에 따라 이론 예측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 간에 급여차이를 둔 EITC 제도의 변화가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로서 Hotz et al.(2006)이 있다. Hotz et al.(2006)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역패널자료를 이용하여 EITC가 저소득·유자녀 편모 가구의 취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EITC 수급자 중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편모의 취업률 증가가 1인 자녀를 둔 편모의 취업률 증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2인 자녀 편모와 3인 이상 자녀 편모 간의 취업률 변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EITC가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Hotz et al.은 보여주고 있다.

## □ 영국

영국에 대한 대표적인 실증연구로서 Leigh(2005)가 있다. 그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fixed effects) 분석방법을 통해 1999년 WTC(Working Tax Credit) 개혁(급여확대 및 점감률 인하)의 효과(개혁 후 15개월 동안)를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한 분석을 통해 그는 WTC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은 계층의 고용률, 근로시간, 근로소득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부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WTC의 확대가 미국의 EITC와는 달리 노동공급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점감률의 인하가 실제로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추론하였다.

반면에 Blundell(2006)은 급여수준이 미국의 EITC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W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전반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실증연구 결과에 대해 영국 근로자의 노동공급탄력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WTC와 관련 제도들의 관계 및 가족수당 확대 등의 제도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저학력 혼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동 집단의 여성들은 EITC의 직접적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ITC 수급은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에 대해 가구 안에서 공동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Hotz & Scholtz(2002) 역시 남녀 모두 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EITC의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대상을 저학력(혹은 저소득) 기혼여성에 한정하여 EITC가 빈곤탈피 및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 □ 미국

Edgerton(2002) 및 Eissa & Hoynes(1998)는 실증분석을 통해 EITC 확대는 저소득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낮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의 ‘근로유인 왜곡효과(distortion of work incentive)’가 나타나기 때문이다(Eissa & Hoynes, 1998). 기혼여성이 속한 가정의 소득이 점감구간에 속할 경우, 남성의 근로소득은 유지하고, 부차적인 소득자인 자신의 근로소득을 줄여 EITC의 혜택을 최대화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 만약 평탄구간에 속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줄이거나 변화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들이 결과적으로 근로유인의 왜곡효과, 즉 노동시장 참여나 증가에 대한 억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EITC의 도입으로 편모의 노동참가율이 73.0%에서(1985-1987년)에서 2.8%p 증가한 75.8%였으며(1989-1991년), \$1,331만 규모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소득 향상에 기여한 반면,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별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고 여성의 노동 참여 의사는 남편의 의사에 종속되는 경향이 커 전반적으로 점감 구간에 놓인 가구의 기혼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남편의 노동공급은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Eissa & Hoynes, 1998).

유지영·정영순(2007)은 미국의 1991-2002년 March CPS 자료를 사용하여, 1993년을 기점으로 1996년까지 점진적으로 있었던 클린턴 정부의 EITC 확대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ITC가 저소득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EITC 최대급여액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저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은 약 15.4%, 취업은 약 19.6% 가량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 □ 영국

WFTC는 근로시간이 짧은 편부모의 근로의욕을 강화시키는 한편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근로시간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부부 중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남편의 근로시간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Blundell, Duncan, Meghir, & McCreedy(1999, 2000)는 납세자를 편부모와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로 구분하여 노동공급 함수를 추정하고 그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한 결과 이와 같은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WFTC가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결과 요약

(단위: %)

집단의 특성	노동참여율 변화	평균 근무시간 변화
편부모	2.2	0.75
결혼한 여자(배우자가 일함)	-0.57	-0.18
결혼한 여자(배우자가 일하지 않음)	1.32	0.46
결혼한 남자(배우자가 일함)	-0.30	
결혼한 남자(배우자가 일하지 않음)	0.37	

자료: Blundell, Duncan, & Meghir(1999, 2000).

## 3. 국내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EITC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2000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형 EITC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형 EITC형 제도 도입 및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소득세제를 포함한 관련제도 정비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수행·진행 중이다.

먼저 여성의 노동공급 및 조세지출 등과 관련된 주요 국내 선행연구로는 먼저 김현숙·성명재(2006)의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탄력성 추정, 시나리오별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맞벌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기혼여성의 보

육비용 지출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때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을 연구한 김현숙·원종학(2004)은 문헌연구를 통해 OECD를 위주로 한 보육료 보조금과 세액공제제도를 국제비교하였으며, 여성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보육료 보조금 지급의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병목·장용성(2005)은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부부균형분석을 통하여 소득세 및 공적연금제도가 노동시장 참가율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실시한 김영순 외(2003)의 연구는 문헌연구와 외국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저소득층 근로유인정책의 이론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4가지 유형을 범주화하여 각각의 세부내용 및 효과성을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연구로서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EITC 제도의 선진국 운영사례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안종석(2005), 임봉욱(2006), 한국노동연구원(2005) 등의 관련연구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EITC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입의 전제조건과 관련 제도들과의 조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론분석 혹은 시뮬레이션기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실정에 맞는 EITC 도입형태를 제시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안종범·송재창(2006)과 전영준(2004)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EITC 추진단 발주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정책연구들로서 김재진·박능후(2005)와 전병목·이상은(2006)이 있다. 김재진·박능후(2005)는 EITC형 제도의 해외사례 및 국내 근로빈곤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EITC의 도입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도입방식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병목·이상은(2006)의 경우에는 김재진·박능후(2005)보다 더욱 구체화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한국형 EITC가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로 결정된 후, 그 시행안에 대한 제도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한 연구로서 이상은(2007)과 전영준(2007)이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EITC와 다른 사회보장사업의 연계를 통한 정책 모색이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유한욱·박창균(2007)의 자활근로사업과 EITC를 연계한 효과적인 정책모색 연구이다. 유한욱·박창균(2007)은 이 독립적인 두 제도가 모두 차상위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자활의욕 혹은 근로의욕 제고라는 유사한 정책목표 하에 시행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지막 유형의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조건변화에 따른 정책모색이다. 이상은(2007)과 강병구(2007)의 연구가 있는데, 먼저 이상은(2007)은 급여조건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소득에 따른 급여체계 변경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하였고, 강병구(2007)의 연구에서는 2004년 급여를 기준으로 한 성별 가구주의 노동공급효과를 노동패널을 통하여 계량분석하였다.

# III

## 국가별 EITC 운영사례

1. 미국	31
2. 영국	38
3. 프랑스	43
4. 벨기에	46
5. 소결	47



현재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7여개국이며, 동 제도는 각국의 사회여건과 관련제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 및 도입목적에 따라 제도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주요국들의 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이유에서 EITC 유형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EITC 유형 제도의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미국

###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정된 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 경험 때문이다.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 내 빈곤 문제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사회 안정으로서의 빈곤문제 해결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고하게 되었다. 미국은 절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차원의 공공부조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당시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조제도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DI(Disability Insurance), 유자녀 저소득 편부모가구를 위한 소득보조제도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그리고 빈곤층의 영양섭취를 지원하는 Food Stamp 등이 있다.

대공황 이후 전쟁과 전후 호황기로 인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지만 1960년대의 각종 사회문제로 인해 미국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복지제도의 모색이 필요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라는 슬로건 아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보다 확대되었는데, 이 당시 사회복지제도 하의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재정부담은 커진 반면 미국의 빈곤률은 12-15% 상태에서 담보하는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시스템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실례로 제도 도입 이후 노동공급이 10-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의 만성적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의 사회복지 제도는 수급자격을 편부모 가구로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족해체의 유인을 심어주게 되었다.

노동공급의 감소, 복지제도에의 고의존이라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케 되었고,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요소가 가미된 근로연계복지제도가 모색되었다. 그 결과 근로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EITC가 1975년에 도입되었다. 미국 정부는 EITC 이외에도 1988년 'Family Support Act' 제정을 통해 고용알선 준비 프로그램인 JOBS(Job Opportunity and Basic Skills Training)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미국은 이후에도 사회여건의 변화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복지정책 관련연구를 다수 진행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6년 노동공급 증대, 복지 의존도 감소, 가족해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를 제정하여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 정책과 연계되어진 EITC가 대폭 확대되었고, AFDC가 폐지되는 대신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ies)라는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TANF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복지정책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복지제도의 수급에 있어서도 시점 선택 유인 장치를 두어 제도시행에 효율성을 꾀하려는 목적을 두었다. TANF 제도 하에서는 수급기간이 평생 5년 이내로 제한되었고, 2년 내에 직장을 갖거나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로조건이 부여되었다. 한편, 'Work First', 'Human Capital Development' 등의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Medicaid도 확대되었다.

#### 나. 미국 EITC의 개념 및 성격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면세점을 설정하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그 면세점 수준이하라면 정해진 기준액만큼 조

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미국 정부는 1975년에 이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제도적 보완을 거듭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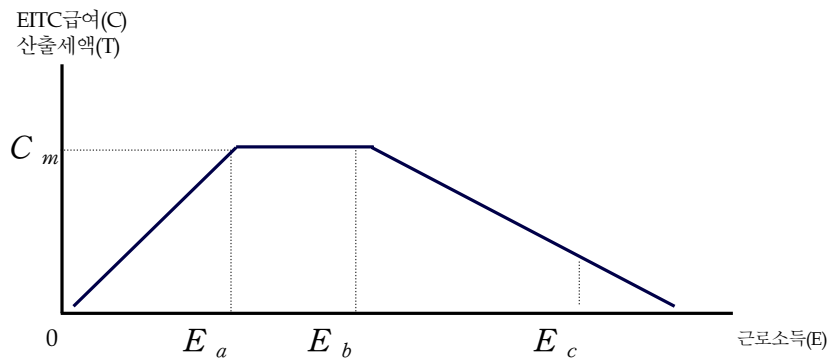
EITC에서 의미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에는 피용자가 받는 임금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포함된다. 따라서 EITC 제도 하에서는 저소득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도 이 제도의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세무당국에 신고 되는 근로소득에 기초하여 미국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사업자에게 EITC 급여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EITC가 조세제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조세제도에 EITC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실질적으로 EITC에 의해 급여액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영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언제나 정부로부터 현금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ITC가 조세제도라기보다는 공적부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EITC를 저소득근로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보장제도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EITC 급여를 부의조세(negative tax)로 파악하여 적극적 의미의 조세제도로 분류하는 경향도 있다.

#### 다. EITC 급여체계와 발전과정

미국에서의 EITC는 미국 내 저소득근로계층이 부담하고 있었던 사회보장세의 보전을 통해 저소득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소득세법 하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면세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사회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세는 부담하고 있었고,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세부담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카터 정부는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세부담 논란의 해결책으로서 사회보장세제에 면세점을 설정하는 대신 저소득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장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서 1975년에 EITC를 도입하였다.

EITC가 최초로 도입되었던 시기에는 부양자녀를 가진 가구의 \$0~4,000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였다(Ventry, 2000). 도입 초기에 10%의 환급율을 설정한 이유는 이 수준이 그 당시 10% 내외이던

사회보장세율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도입 초기의 EITC에는 점증구간(\$0~4,000)과 점감구간(\$4,000~8,000)만이 존재하였으나 초기에 이러한 구간의 설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 또한 점증구간과 점감구간의 변화점에서는 급여의 변동이 컸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1979년에는 평탄구간을 도입하여 평면구간이 설정되었다. 이 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환급액이 증가하지 않는 구간인 동시에 점증구간의 마지막 점에서 받는 최고 급여액이 지속되는 소득구간이다. 1978년 이후의 EITC의 급여체계 구간에 대해서 간단히 도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Ⅲ-1]에는 점증구간(0~  $E_a$ ), 고정구간( $E_a$ ~  $E_b$ ), 그리고 점감구간( $E_b$ ~ $E_c$ )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1] 미국 EITC의 급여체계

이 세 가지의 구간으로 나뉘어지는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각 구간에서의 임계치와 점증구간 점감구간에서의 증가율과 감소율은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계속 변화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사회여건을 반영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을 11%에서 14%로 상승시켰고 점증구간도 보다 확대시켰다. EITC의 가장 큰 확대는 1993년 총괄예산조정법(OMBA93)에 의한 것이었다. 총괄예산조정법에 의한 EITC에서는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급여증가율이 19.5%에서 40%로 상승하였고, 최대급여수준도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점감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점증구간에서 급여증가율을 40%로 설정하고 점감구간에서

는 급여감소율을 21%로 설정하여, 급여증가율보다 급여감소율을 더 작게 하였다. 아래의 표는 미국의 EITC 제도의 변화를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표 Ⅲ-1〉 EITC 제도의 변화

구 분	1975년	2005년	비 고
최대급여액	400 달러	4,400 달러	11.0배
최대 적용범위	8,000 달러	37,263 달러	4.7배
적용 가구	620만 가구(8.5%)	2,100만 가구(18.6%)	3.4배
예산 규모	12억5천만 달러(0.38%)	380억 달러(0.89%)	30.4배

주: ( )는 전체 가구·예산대비 비율, 적용가구 및 예산규모는 1975년과 2005년 비교치

1991년부터 EITC는 가구의 자녀수에 비례하여 각 구간의 임계치와 급여증가율 및 급여감소율을 상이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다 유리하게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였다. 1994년부터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녀를 가진 가구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환급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다자녀 양육 가구에 유리한 EITC 제도 시행은 미국에서는 아동수당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아 미국에서 EITC는 단순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의 아동수당 등 다른 목적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귀속소득부터 맞벌이 가구는 독신근로자 가구보다 적용범위가 \$,1000 늘어나게 되었다.

〈표 Ⅲ-2〉 미국 EITC의 급여산정기준 변화추이(1975-2003)

(단위: \$, %)

연 도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	최대 급여액	평탄 구간	급여 감소율	점감 구간
1975-78			0-4,000	10.00	400	-	10.00	4,000-8,000
1979-84			0-5,000	10.00	500	5,000-6,000	12.50	6,000-10,000
1985-86			0-5,500	11.00	550	5,500-6,500	12.22	6,500-11,000
1987			0-6,080	14.00	851	6,080-6,920	10.00	6,920-15,432
1988			0-6,240	14.00	874	6,240-9,840	10.00	9,840-18,576
1989			0-6,500	14.00	910	6,500-10,240	10.00	10,240-19,340
1990			0-6,810	14.00	953	6,810-10,730	10.00	10,730-20,264
1991	아동 1명		0-7,140	16.70	1,192	7,140-11,250	11.93	11,250-21,250
	아동 2명 이상		0-7,140	17.30	1,235	7,140-11,250	12.36	11,250-21,250
1992	아동 1명		0-7,520	17.60	1,324	7,520-11,840	12.57	11,840-22,370
	아동 2명 이상		0-7,520	18.40	1,384	7,520-11,840	13.14	11,840-22,370
1993	아동 1명		0-7,750	18.50	1,434	7,750-12,200	13.21	12,200-23,050
	아동 2명 이상		0-7,750	19.50	1,511	7,750-12,200	13.93	12,200-23,050
1994	아동 0명		0-4,000	7.65	306	4,000-5,000	7.65	5,000-9,000
	아동 1명		0-7,750	26.30	2,038	7,750-11,000	15.98	11,000-23,755
	아동 2명 이상		0-8,425	30.00	2,528	8,425-11,000	17.68	11,000-25,296
1995~2001년까지 수급요건의 변동 없이 각 구간별 임계치만 상향 조정								
2002	single	아동 0명	0-4,910	7.65	376	4,910-6,150	7.65	6,150-11,060
		아동 1명	0-7,370	34.00	2,506	7,370-13,520	15.98	13,520-29,201
		아동 2+	0-10,350	40.00	4,140	10,350-13,520	21.06	13,520-33,178
	joint	아동 0명	0-4,910	7.65	376	4,910-7,150	7.65	7,150-12,060
		아동 1명	0-7,350	34.00	2,506	7,370-14,520	15.98	14,520-30,201
		아동 2+	0-10,350	40.00	4,140	10,350-14,520	21.06	14,520-34,178
2003	single	아동 0명	0-4,990	7.65	382	4,990-6,240	7.65	6,240-11,230
		아동 1명	0-7,490	34.00	2,547	7,490-13,730	15.98	13,730-29,666
		아동 2+	0-10,510	40.00	4,204	10,510-13,730	21.06	13,730-33,692
	joint	아동 0명	0-4,990	7.65	382	4,990-7,240	7.65	7,240-12,230
		아동 1명	0-7,490	34.00	2,547	7,490-14,730	15.98	14,730-30,666
		아동 2+	0-10,510	40.00	4,204	10,510-14,730	21.06	14,730-34,692

주: 1) single - 독신가구 또는 근로소득자 1인 가구, joint - 맞벌이 가구

자료: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04 GREEN BOOK, U.S. GPO, 2004, p.13-38.; Dep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EITC: for Use in Preparing Returns, 각년도. 재구성

## 라. 운영형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EITC 제도의 운영형태를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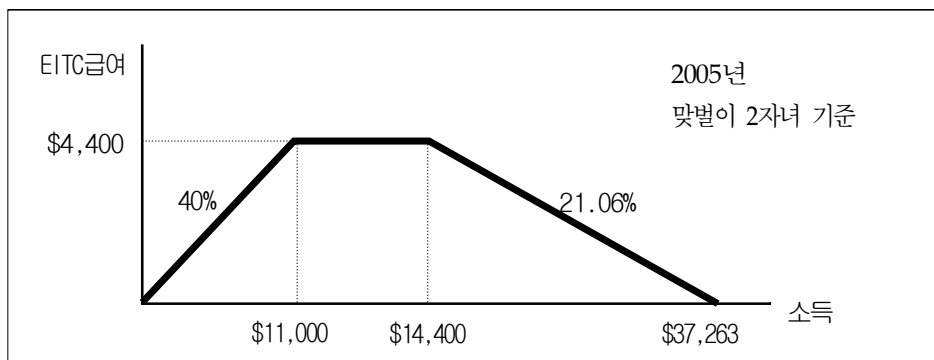
### □ 급여지원 단위

EITC의 급여는 가구단위로 지원된다.

### □ 최대급여와 최대적용 소득

2005년 맞벌이 가구·2자녀 부양기준으로 최대급여 연 4,400 달러 수준, 최대적용 소득은 연 37,263 달러이다. 2005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EITC 총 신청 금액은 397억 달러이며 총 환급액은 346억 달러이다. 이 때 소득증가에 따른 급여증가율을 나타내는 점증률은 40%, 점감률은 노동유인 저해효과를 고려하여 이 보다 낮은 21.06%수준이다.

200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적용소득은 연 4,716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하나 둔 홀부모의 경우에는 33,241달러, 자녀가 하나인 부부인 경우에는 35,241달러이다. 최고 2,853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자녀는 둔 독신부모의 경우 37,783달러이고, 부부인 경우에는 기준액이 39,783달러이다. 최고 4,716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림 Ⅲ-2] 미국의 EITC(2005)

## □ 선급 가능

해당자녀가 있고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소득공제대상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 대신 매달 해당 세액공제에 따른 환급금을 선불로 월급에 가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W-5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금이 지불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에 따른 혜택에 가산되어 선불 지급된다. 이 선급액은 연방세, 주정부세, 의료보험 혹은 소셜 시큐리티 등 어떤 원천징수 항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07년 과세기간에 고용주가 지급할 수 있는 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1,712달러이다.

## 2. 영국

###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제2차 세계대전과 전쟁 이후 전후복구문제와 전쟁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책 등 사회적 혼란에 빠진 영국은 빈곤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빈곤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빈곤을 사회경제적인 요소로 간주 한 영국은 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베버리지보고서’는 보편성, 피보험자의 구분, 정액급여, 정액기여, 급여의 적절성, 행정의 통합 등 6가지 국가보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영국은 가족수당 법, 국민보험법, 국민산업재해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및 아동법 등이 제정하였다.

한편 복지제도의 방만한 운영은 노동공급의 감소는 물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고, 1970년대 말 대처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나친 국가책임주의를 비판하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처정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실업 및 빈곤률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대상자 수도 급증하면서 복지재정 부담도 가중되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급증한 실업자 및 사회복지 대



상자들을 근로활동에 참여시키고 복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8년에 들어선 블레이 정부에서는 ‘제3의 길’이라고 하여 새로운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내세웠는데 이 중 특히 근로연계복지를 더욱 강조하였다. 블레이 정부에서의 근로연계복지 예로서 취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제개혁, 최저임금제 도입, 저임금 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취업여성을 위한 탁아시설 증대 등이 있다. 또한 블레이 정부는 1988년에 도입되었던 근로연계복지 형태의 가족공제(Family Credit)제도를 1999년에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로 발전시켰다. 한편, 1998년에는 국민 최저임금제(National Minimum Wage)도 제정하였다. 또한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에는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에 중점을 둔 뉴딜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근로복귀보너스, 취업장려금, 육아지원보너스, 직업알선 등의 각종 근로 유인 프로그램들도 도입하였다.

영국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기회를,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계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블레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복지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소득이전 시스템을 복지에서 노동으로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복지제도에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면서 저소득계층의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사회적 불평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의 책임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2003년 현재 영국은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WFTC와 다수의 아동장려금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CTC(Child Tax Credit)와 WTC(Working Tax Credit)의 2원체제로 개편하였다. CTC하에서는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한편, WTC는 종전의 WFTC와 같이 주당 16시간의 근로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 나. WTC(Working Tax Credit)

영국의 근로장려세제는 1988년에 도입된 ‘In-Work benefit’의 형태를 띤 FC(Family Credit)로 대표되는데 FC의 수급요건으로는 ①근로조건으로서 주

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자녀조건으로서 취학연령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 ③소득조건으로서 가구순소득이 일정액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에 FC를 보다 확장하여 WFTC를 도입하였다. WFTC 하에서는 이전의 FC에서 보다 자녀수당이 확대되었고, 점감률도 70%에서 57%로 인하되었다. 2003년에는 이 WFTC를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개편하고 기존의 아동수당과 실업수당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부담을 절감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빈곤아동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관련 수당 등이 중요한 소득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완되어 있다.

WTC의 급여는 가구단위로 지급된다. WTC 제도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내용에서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요건에서 미국과는 달리 최소 근로시간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양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 그 이외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급여수급에 있어서 필수요소로 하고 있다. 한편, 급여산정방식은 연소득 £5,220까지 최대급여액을 지급하고, 이후 구간은 37%씩 급여 감소(점감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WTC 제도는 보육료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자녀보육료의 70%(주당 £300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I-3>는 WTC의 구성요소와 급여액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2006년 기준 WTC 최대급여액은 연 £3,875로 설정되었으며 수혜 대상가구는 135만 가구(2004년), 소요예산은 연 £47억(2004년)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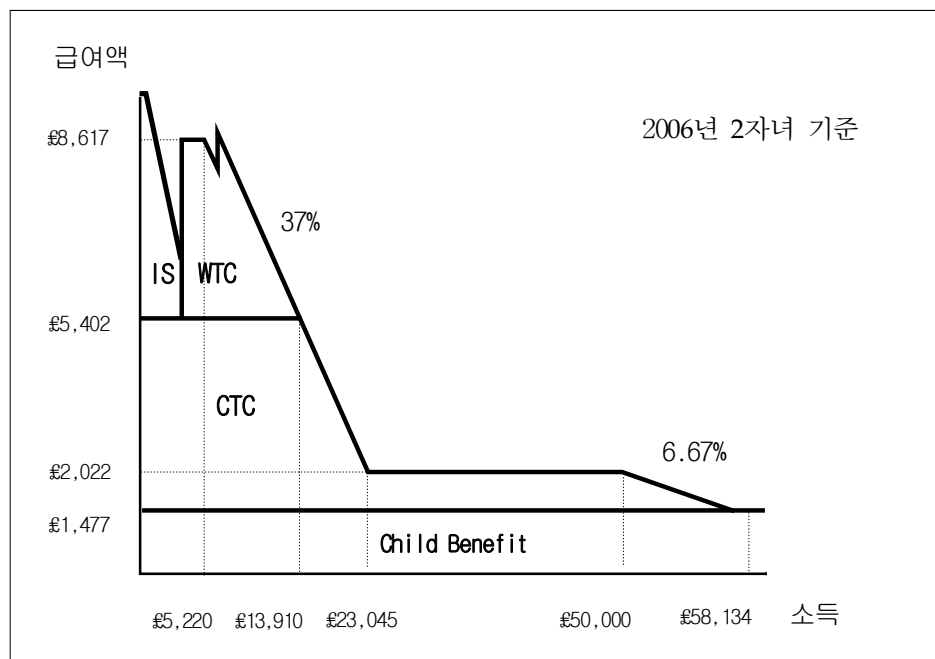
〈표 III-3〉 영국 WTC의 구성요소와 급여액(2007년 기준)

구성요소	지급액(연간)
기본요소	£1,665
부모(편부모) 요소	£1,640
30시간 이상 근로	£680
장애요소	£2,225

주: 장애가 없는 경우 최대급여액은 3,985파운드.

자료: HM Revenue & Customs,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April 2007., 유한욱·박창균(2007) 재인용.

급여수급 요건에 근로시간 요건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 이외에 WTC가 미국의 EITC와 또 다른 점은 점증구간이 없고, 수급자격이 연간 근로소득이 아닌 주당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에 비해 점감률이 높은 편이고 급여액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이다.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추가급여가 지급된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 \* IS(Income Support) : 최대급여 연 £4,540
- \* CTC(Child Tax Credit) : 최대급여 연 £3,925
- \* Child Benefit : 첫째 아동 연 £884, 둘째 이후 연 £593

[그림 Ⅲ-3] 영국의 WTC (2006)

2008-200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아이가 없는 가구의 경우 WTC의 급여는 연간소득에 따라 <표 Ⅲ-4>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연소득이 £8,612인 경우 25세 이상 미혼(single), 주당30시간 근로한 경우는 £1,685급여액을 지급하고, 이후 구간은 점차 감소한다. 연소득이 £8,612인 경우 25세 이상 기혼(couple), 주당 30시간 근로한 경우는 £3,455급여액을 지급하고, 이후 구간은 점차 감소한다.

〈표 Ⅲ-4〉 연소득에 따른 WTC 급여액(2008-2009년 기준)

연간소득(£)	25세 이상 미혼(single), 주당30시간 근로인 경우 WTC	25세 이상 기혼(couple), 주당30시간 근로인 경우 WTC
8,612	1,685	3,455
9,000	1,530	3,300
10,000	1,140	2,910
11,000	750	2,520
12,000	360	2,130
13,000	-	1,740
14,000	-	1,350
15,000	-	960
16,000	-	570
17,000	-	180
18,000	-	-

2007-2008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아이가 있는 가구의 경우 CTC와 WTC의 급여는 연소득에 따라 <표 Ⅲ-5>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연소득이 £5,000인 경우는 주당 16에서 30시간까지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연소득을 포함하는 기준이며, £8,295는 적어도 아이가 있는 가구의 성인 1명이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이가 많을수록 급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편모 또는 부부가 두 자녀를 두고, 연소득이 £10,000이고, 주당30시간 근로한 경우는 £7,635급여액을 지급받는다.

〈표 Ⅲ-5〉 연소득에 따른 CTC와 WTC 급여액(2007-2008년 기준)

연간소득(£)	아동 1명	아동 2명	아동 3명
5,000	6,205	8,295	10,380
8,612	6,090	8,175	10,265
10,000	5,545	7,635	9,725
15,000	3,595	5,685	7,775
20,000	1,645	3,735	5,825
25,000	545	545	3,875
30,000	545	545	1,925
35,000	545	545	545
40,000	545	545	545
45,000	545	545	545
50,000	545	545	545
55,000	210	210	210
60,000	-	-	-

### 3. 프랑스

####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변천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와 자율적인 법인체가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운영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담당하여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1980년대까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방정부들이 재량적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부조를 위한 재정과 행정기능을 담당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사회보장 입법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골격의 구축과 세부규칙의 제정, 그리고 감독 및 통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빈곤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와 실업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프로그램 확대는 프랑스 전체의 빈곤문제 해결과 대응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아래 1987년 로카르(Rocard) 정부는 장기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전체적 차원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RMI(Revenue Minimum d'insertion)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RMI 제도는 실업 상태의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통합계약이라는 절차를 삽입함으로써 수급자와 국가간의 관계를 국가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즉, 이 통합계약에는 빈곤탈출을 위한 기초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정수준의 근로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RMI 수급대상자는 일정 소득 미만의 25세 이상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서, 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에 참가하겠다는 '편입계약(contrat d'insertion)'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조건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어 제도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기술수준이 낮고 비교적 저임금인 비숙련근로자들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인 RMI 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2001년에는 EITC 유형 제도인 PPE(Prime Pour l'Emploi)가 도입하였다. PPE의 급여는 가구단위로 지급된다.

#### 나. PPE(Prime Pour l'Empl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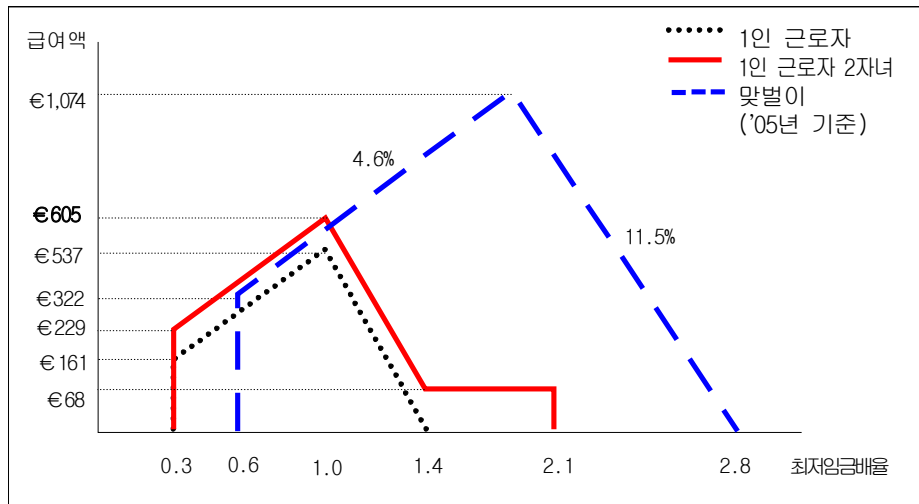
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인 PPE는 기존의 최빈층 생계지원제도인 RMI가 가지고 있었던 근로유인에 대한 저해현상을 해결하고, 수혜 대상자들의 취업유인구조 설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2002년에 시행되었다. 2005년 현재 기준으로 PPE 수혜가구는 약 940만 가구이고, 총 소요예산은 25억 유로에 달한다.

PPE 제도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연간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최대급여액을 지급하는 한편 최소 소득구간을 설정하여 근로유인을 제고시키게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최소소득구간의 설정은 비생계형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PPE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평탄구간 없이 점중·점감 구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녀부양 가구에는 추가적으로 아동 1인당 정액급부(1자녀 당 연 €34)를 지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급여 산출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0.3배(연 € 3,507) 이하 소득 : 지급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 0.3배~1.0배(연 € 11,689)소득 : 점중률 4.6% 적용 (최저임금 1.0배 소득 수준에서 최대급여 연 €537)
- 최저임금 1.0배~1.4배(연 € 11,689~€ 16,364) : (연 € 16,364-실제 소득)×11.5%
- 최저임금 1.4배~2.1배(연 € 16,364~€ 24,547) : 아동 1인당 정액급부(연 €34)

참고로 최대급여 수준은 아동 2인 기준 연 €605이다. 아래의 그림은 PPE 제도를 간략히 도시하고 있다.



[그림 Ⅲ-4] 프랑스 PPE (2005)

즉, PPE의 급여구조는 평탄구간이 없는 점증-점감체제로, 최저임금소득(전일제 근로자 기준)의 30-100%인 소득구간에는 4.6%의 점증률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소득 100-140% 소득구간에는 11.5%의 점감률이 적용된다.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공공부조 급여, 재산소득 등은 급여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한편, PPE의 특징은 평탄구간이 없다는 것과 점증-점감구간의 소득상한 및 하한이 최저소득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으로 말미암아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일제 근로자 소득의 30% 미만인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가 배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하면, PPE는 시간제 근무자보다 전일제 근무자를 우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4. 벨기에

벨기에의 근로장려세제인 Credit d'impot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되었다. 급여체계는 미국 EITC의 유사한 형태이나 프랑스의 PPE처럼 최소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급여액 수준이 낮고, 적용소득 범위도 좁은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도 Credit d'impot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자영업 및 농업 소득도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이 최소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평균소득의 13%수준 이하인 소득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벨기에의 Credit d'impot 수급대상이 가구단위로 결정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개인단위로 수급대상이 결정된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과세단위와 일치하고,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2차 소득자(second earner)중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유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 및 가족 관련 수급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급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한 것은 수급단위가 과세단위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혼벌금(marriage penalty)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부소득자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유한옥·박창균(2007)).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소득구간의 조정 없이 최대급여액만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점증률과 점감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의 최대급여수준은 540유로였으며, 점증률은 40%, 점감률은 14%였다. 따라서 2002년 도입된 Credit d'impot는 급여수준만 계속 상승하고, 급여지급의 시차로 인한 근로유인 제고효과가 미흡해 도입 3년 만인 2005년에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5. 소결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 중요제도를 살펴보았다. 선진국들의 각 제도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저해 및 이에 따른 복지의존도 증가이다. 대부분의 최저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양자 간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충급여’의 형태를 띠며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한계세율이 100%임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급여체계 하에서는 근로의욕 저하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많은 주요국들은 기존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유인을 강화하거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EITC 형태의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보충급여’라는 사회보장급여의 원초적인 한계로 인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복지의존도 증가와 함께 빈곤 함정 상존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인 복지의 개념을 근로연계복지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혹은 기존의 최저생활보장제도상의 근로유인을 보장하거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EITC형 소득보조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벨기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급여액 수준이 낮고, 적용소득 범위도 좁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Credit d'impôt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자영업 및 농업소득도 모두 적용되는 점은 우리나라가 대상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설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수급단위가 과세단위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marriage penalty) 등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2차 소득자(second earner)중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유인에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제도의 설계시 당초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점차 개선·발전해 나아가야하며, 아울러 시간제, 전일제 근로자 등에 대한 상이한 효과, 여성이 가구내 2차 소득자로서 종사하는 취업형태, 종사상의 지위 등에 관한 효과 등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반영하는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 IV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과 여성이슈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현황	51
2. 근로장려세제와 여성 이슈	66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즉, 정책목표, 도입배경, 운영체계, 급여산정방식을 개괄<sup>9)</sup>하고, 근로장려세제 도입상의 효과 및 쟁점사항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현황

### 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 1)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 부족으로 빈곤에 처한 전통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있다.

특히, 차상위 근로빈곤층<sup>10)</sup>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과 질병, 실직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기준으로 이들 차상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36.7%, 고용보험 27.7%, 산재보험 59.7%, 건강보험 98.2%로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차상위층의 상당수가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의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OECD 각국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활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빈곤 가능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며,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최현수, 2004).

근로장려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들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빈곤탈

9) 본 연구는 2008년 1월 1일 제도시행시 공표했던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참고로 「2009년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2008. 12. 19)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적용대상이 조기확대 되었다(지급액: 연 80만원→연 120만원, 적용대상: 무주택자→1주택자, 부양자녀 2명 이상→1명 이상).

10)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계층

출을 돕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대한소득지원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근로활동참여로의 능동적인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2) 정책목표

근로장려세제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합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2대 사회안전망(기초생보, 사회보험)이 차상위 계층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는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성격을 띤다.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보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현상을 타개하고 이들에게 사회보장시스템을 대체하는 근로유인책을 적용한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급여 혹은 부의 근로소득세(NIT) 성격의 생계급여로는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를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제공’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목표<sup>11)</sup>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지원정책으로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소득계층별, 대상 특성별로 체계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완성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지원을 목

11) 본 내용은 2007년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근로장려세제 해설’의 일부와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이상은(2007), 최현수(2003, 2004, 2007)등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로 한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가 수급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야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인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근로유인의 제고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저해하는데 반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연계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게 됨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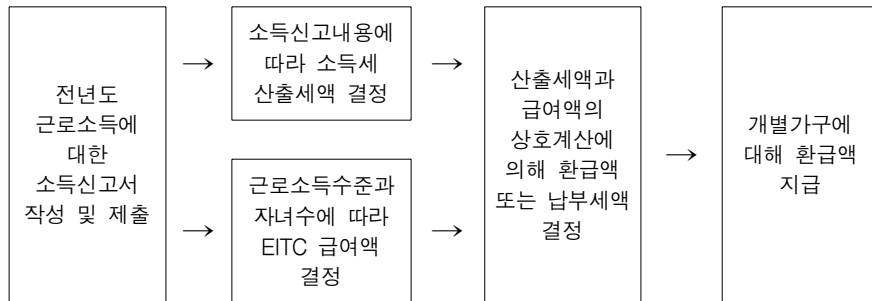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해준다.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세원투명성의 제고는 적정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적정 부담 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체계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등 운영체계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운영방안 및 구체적 지침의 설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집행은 국세청이 관장하며, 현행 소득세체계 내에서 개별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신고를 기초로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신청의 경우 2년간,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허위신청의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지된다([그림 IV-1], 최현수(2007)).

12) 근로장려세제의 근본취지는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소득보장의 기능보다 더 크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없는 근로능력 취약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보조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노동공급 증대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1]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체계(재정경제부, 2007)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부양아동 등을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이를 기초로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수준이 결정되고, 다음 해 근로소득 신고 이전에 해당 가구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은 사후적 급여의 성격을 띠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도입초기에는 근로빈곤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이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근로유인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재정경제부, 2007).

#### □ 수급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인데, 첫째 당해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sup>13)</sup>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여야 한다. 이 총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13)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서 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의 50% 이하)수준과 유사하며, 최저생계비(2006년 4인 가족 기준 1,404만원)의 1.2배 수준으로서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sup>14)</sup>

둘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 □ 근로소득 인정범위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므로 어떤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가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가사보조원·자가용 운전원 등) 소득 금액의 검증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산정방식<sup>15)</sup>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구단위 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급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적용범위가 점증구간(phase-in range), 평탄구간(flat range), 점감구간(phase-out range)으로 구분된다는 점인데, 이 구간들은 급여증가율과 급여감소율, 최대급여액 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의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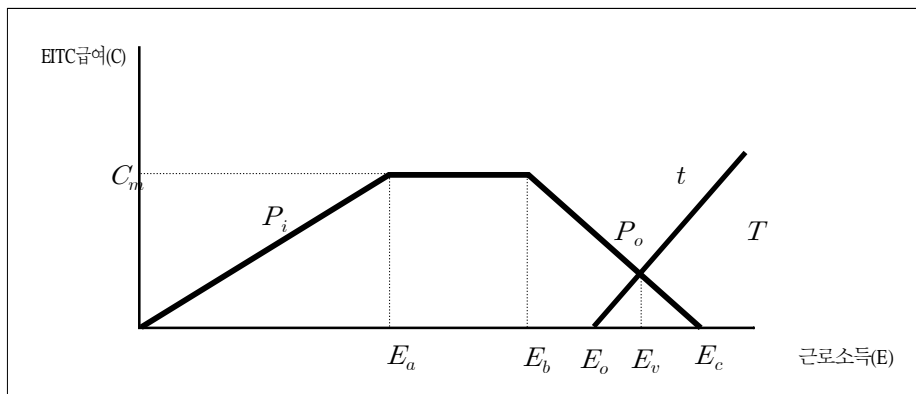
14)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은 그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 “0”으로 보아 경비의 과다 계상을 통한 총소득의 인위적인 조정을 방지하고, 과세 제외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동일하므로 총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함.

15) 최현수(2003, 2004)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점증구간(phase-in range)은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EITC 급여액이 정률(급여증가율)로 증가하는 구간, 평탄구간(flat range)은 근로소득의 증가에 상관없이 최대급여액이 유지되는 구간, 점감구간(phase-out range)은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EITC 급여액이 정률(급여감소율)로 감소하여 0에 도달하는 구간, 급여가 0이 되는 소득수준이 EITC의 최대 적용범위가 되는 구간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급여체계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IV-2>와 같으며, 각 구간별 근로장려급여(근로장려금) 산출식은 <표 IV-1>과 같다.



[그림 IV-2] 근로장려급여 체계

<표 IV-1> 근로장려급여 산출식

$$C = p_i E \quad \text{if } E \leq E_a \quad (1)$$

$$C_m = p_i E_a \quad \text{if } E_a \leq E \leq E_b \quad (2)$$

$$C = C_m - p_o (E - E_b) \quad \text{if } E_a \leq E \leq E_b \quad (3)$$

$$C = 0 \quad \text{if } E \geq E_c \quad (4)$$

$$E_c = \frac{C_m}{p_o} + E_b = \frac{p_i}{p_o} E_a + E_b \quad (5)$$

$E$ : 근로소득,  $E_a$ : 점증구간 경계소득,  $E_b$ : 평탄구간 경계소득

$E_c$ : 점감구간 경계소득,  $p_i$ : 급여증가율,  $p_o$ : 급여감소율

$C$ : 급여수준,  $C_m$ : 최대급여액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먼저 개별가구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이 결정되면, 식(1)-식(4)의 각 구간별 산출식에 따라 근로장려급여를 계산하게 된다. 식(5)는 급여수준(C)이 0이 되는 소득  $E_c$ 를 산출하는 식으로 이 값이 근로장려급여의 최대 적용범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근로장려급여가 모든 개별가구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경우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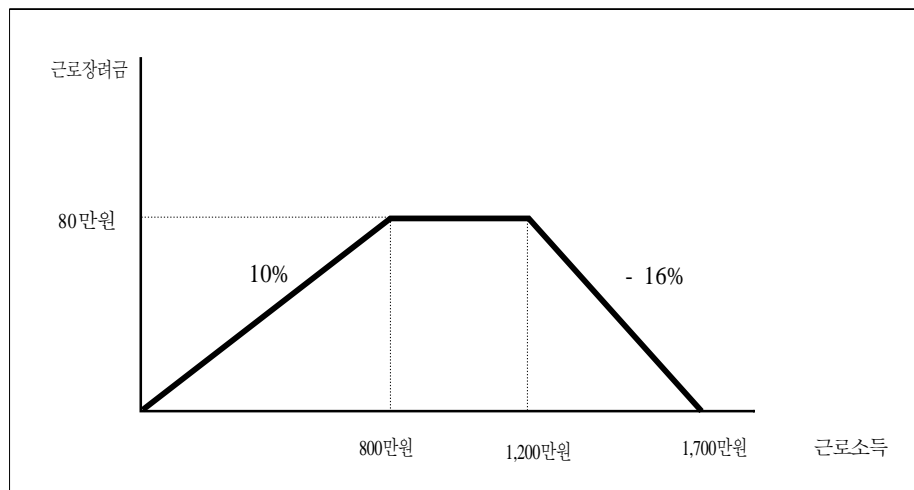
<그림 IV-2>에서  $E_o T$ 의 그래프는 소득세체계를 의미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산출세액을 나타낸다.  $E_o$ 는 산출세액이 0인 소득수준이며,  $E_v$ 는 근로장려급여와 산출세액이 동일한 수지균형점(Break-even point)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급여를 고려하기 이전의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E_v$ 이하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수준이  $E_o$ 부터 수지균형점인  $E_v$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산출된 근로장려급여에서 소득세 산출세액을 모두 공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수지균형점인  $E_v$ 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결정된 근로장려급여와 산출세액이 동일하므로 완전히 상쇄되며, 이 점은 근로장려급여를 고려한 수의 면세점이며, 이에 반해  $E_v$ 부터 EITC 최대 적용범위인  $E_c$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는 근로장려급여와 무관하게 소득세 체계에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구간별 특징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급여와 소득세 납부세액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효한계세율 및 순이전(net transfer)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점증구간의 경우, 유효한계세율은 급여증가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유인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최대급여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은 유효한계세율이 0으로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유인효과가 존재한다. 반면, 수지균형점 이하의 점감구간인  $E_b E_v$ 에서는 급여감소율 또는 급여감소율과 소득세율의 합이 유효한계세율이 되기 때문에 근로의욕 감소에 대한 유인이 나타나지만,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소득은 계속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수지균형점 이상의 점감구간인  $E_v E_c$ 와 근로장려세제 적용범위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급여감소율과 소득세율의 합 또는 소득세율이 유효한계세율이 되기 때문에 근로의욕 감소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며,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는 소득분포 상에 있어서 소득효과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가 강력하게 나타날 정도로 높은 소득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최현수, 2003, 2004).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급여 체계는 이러한 개별 파라미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라미터의 조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감소효과, 소득재분배효과, 근로유인효과, 재정소요의 변화 등을 추정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설계된 것이다.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에 지급될 예정이며 정부추계 예상 수혜 가구는 31만 가구, 지급규모는 약 1,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3]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근로장려금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3]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체계

<표 IV-2>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산식을 나타낸 것인데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 구간별(1만원 단위)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표 Ⅳ-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의 산식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①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표 Ⅳ-3〉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 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점증구간	∴	∴	∴
	100만원	101만원	101천원
	101만원	102만원	102천원
평탄구간	∴	∴	∴
	800만원	1,200만원	800천원
	∴	∴	∴
점감구간	이상	미만	
	1,500만원	1,501만원	320천원
	1,501만원	1,502만원	318천원
	∴	∴	∴

한편, 정부는 차후 근로장려금 지급의 대상요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아동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부양하는 근로자가구로 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적용하고, 2014년에는 영세한 자영업자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할 계획에 있다. 또한 2030년까지는 무자녀가구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가구의 20%에 해당하는 360만 가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다. <표 Ⅳ-4>는 근로장려세제의 향후 확대 방안을 요약하고 있다.

〈표 Ⅳ-4〉 근로장려세제 단계적 확대방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30년까지)
적용 대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 가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 라.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효과 및 쟁점사항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검토해 보고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 1)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 ☐ 근로유인 효과

이론적으로 근로장려세제 하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은 점증구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증구간에 적용되는 점증률(10%)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참가율 제고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EITC 확대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노동참가율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1990년대 점증률과 최대급여액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에 주로 기인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기초생보 수급자의 탈수급효과

우리나라는 기초생보 급여수준이 높아 기초생보 수급자가 근로장려세제 수급을 선택하고 기초생보를 탈수급할 유인이 취약하다. 미국의 경우 공적부조(TANF)의 최대 급여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도 낮은 수준이고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조건 적용으로 노동에 대한 유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TANF 수급자의 탈수급유인이 존재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TANF 최대급여수준은 1인당 GNI의 15%수준에 불과하나 우리나라 기초생보의 경우 최대급여수준은 1인당 GNI의 74%에 육박한다. 미국의 경우, TANF 수급자에 대해 EITC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수급자의 탈수급유인 존재와 문턱효과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전영준, 2004).

#### □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감소 효과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182만 가구 중 기초생보 수급 72만 가구를 제외한 차상위층 가구는 110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 중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 가구는 약 31만 가구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각지대 해소율이 28.2%(35만/110만)에 그침을 의미한다. 한편, 최대급여액이 낮은 수준(80만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빈곤감소효과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은, 2007).

### 2) 도입상의 쟁점 사항

#### □ 제도의 목적

우선 도입상의 쟁점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겠지만, 소득보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소득보전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임금을 받아도 피부양가족을 많이 가진 근로자는 소득보전의 필요성이 커진다. 피부양가족 중 특히 아동에 대한 배려가 강조될 경우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아동수당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는 면도 주요한 목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게 되면 점증구간을 길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사회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보전해줌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급여를 저소득근로자 자산형성(예: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 □ 제도의 성격

근로장려세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다른 쟁점사항이다. EITC 유형 제도의 경우,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미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국세청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고, 그 밖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세청이 운

영주체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운영주체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도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조세제도의 일종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물론 조세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개념적으로 조세란 국민이 국가에 강제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국가로부터 국민이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전통적 의미의 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단순히 그 성격을 부의 조세제도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개방적으로 개념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동일한 기타 사업들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적용대상인 차상위층을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것이다.

#### □ 대상범위와 적용의 우선순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에 있어 대상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쟁점이 된다. 즉, 적용의 대상범위와 적용의 우선순위이다. 이 중에서 대상범위는 저소득층으로 설정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층보다는 상당히 넓은 범위가 될 것이다. 즉, 빈곤선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물론 차상위 계층 혹은 그 이상의 범위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20% 정도가 EITC 수급자이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소득 5분위 중 제1분위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

대상자와 관련하여 두 번째 쟁점은 우선적용대상의 선정이다. 우선적용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원칙은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득보전의 필요성이 큰 집단부터 시작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충실하게 되면 업종이나 직장규모에 관계없이 저임금근로자, 저소득영세자영업자(농어민 포함)부터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시행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과악이 용이하고, 행정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집단부터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이다. 행정적 관리용이성은 과거 4대 사회보험의 시행과정

에서 가장 중시된 원칙이기도 하다. 셋째, 재정적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 원칙은 비교적 합의가 용이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재정부담수준은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이 원칙에 준거한 대상의 범위 역시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첫째 원칙과 둘째 원칙이 상충한다는 점이다. 저임금근로자층을 구성하는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저소득영세자영업자는 소득보전의 욕구는 높지만 행정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시행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집단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유혹이 강하겠지만, 4대 보험의 확대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보전욕구의 긴급성에 초점을 두고 우선대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운영주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관을 운영주체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도입방안이나 지침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맡아 왔으나 그 운영주체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을 기초로 급여수준이 결정되므로 개인의 근로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세무당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소득보장기능이 강조되거나, 다른 목적이 중시된다면 운영주체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자산조사를 거쳐 공공부조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왕에 자산조사를 담당했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방안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활용될 경우 기존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와 국세청이 공동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 운영방식: 급여단위 및 급여주기

사회정책에서 소득을 문제 삼을 때 그 기준은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소득이 된다. 예컨대 개인의 빈곤여부를 판정할 때 개인 당사자 소득만으로 판별하지 않고 개인이 귀속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근로소득보



전세제의 1차적 목적이 저소득근로자의 소득보전이라 할 때도 당연히 가구 소득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가구의 범위설정에서부터 귀속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이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급여를 산정하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어서 종합소득세의 부부합산제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상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다면 법원의 판결과 상처되지 않게 논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벨기에 경우처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급여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구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며, 급여수준 역시 전체적으로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급여주기는 이론적으로 보면 연단위, 분기단위, 월단위 모두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시행초기에는 행정적 업무 부담을 고려한다면 년 1회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가 성숙되고, 자료가 축적되면 좀 더 짧은 주기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 □ 급여체계

급여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 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급여체계의 설정은 근로장려세제의 본질적 목적중 하나인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적절한 급여체계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의욕 또는 실질적인 소득보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적절한 급여체계의 설정을 위해 국민들의 노동공급행태, 소득보장수준의 정책적 목표, 가용한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구간의 범위와 급여증가율 및 급여감소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어떤 목적을 주로 달성한 것인가에 따라서 급여구간의 설정 또는 대상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소득보전목적의 하나로 아동을 가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면 아동 유무에 따라 급여체계를

달리하여야 하며, 저소득계층의 근로동기강화를 강조한다면 점증구간을 가능한 길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 밖에 소득과악에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최저소득요건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모형은 정책목표가 좀 더 구체화되고,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행한 후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여러 측면에서 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 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포괄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는다. 근로소득보전세제 역시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함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두고 두 제도 간에 대상의 경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첫째, 두 제도를 상호 무관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신청을 하고, 동시에 근로소득보전세제에 의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두 제도에서 모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그 가구의 근로소득간의 차액만큼(정확히 표현하면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현금급여기준선과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에서는 그 가구의 근로소득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TANF 급여를 받는 가구가 EITC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과 유사하다.

둘째 방안은 근로능력을 가진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혜택만 받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취업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보전세제에 의한 급여가 전혀 없어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TANF에서 벗어나 있는 미국의 일반 빈곤층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의 경우 둘째 방안을 채택할 정치적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자가 장기간 일을 하지 않고 공공부조제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적 비난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근로능력자에 대한 최소보장을 강구하면서 가능한 근로소득보전세제에 의해 근로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아동을 가진 가구에 대해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급여체계를 가질 경우 현행의 보육료지원제도와 경합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가구에 비해 아동을 가진 가구에 급여를 더 준다는 것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보육료 지원과 경합되는 것이다. 다만 현행 보육료 지원제도는 소득이 없는 가구도 대상이 되지만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만 지원함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보육료 지원제도를 흡수하면 무소득가구의 아동보육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아동보육 혹은 아동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급여는 근로소득보전세제와 연관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과 고찰이 필요하다.

## 2. 근로장려세제와 여성 이슈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근로연계복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 및 2000년 이후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이래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저소득층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라는 명칭 하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sup>16)</sup>은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sup>17)</sup> 이에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16)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일을 하더라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working poor)을 의미한다. 근로빈민·노동빈민으로 번안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EITC가 차상위의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근로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다.

17) 차상위 계층의 임금근로자 87%가 임시·일용직으로,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29%·고용보험 25%로 일반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각50%·99%로 일반층의 75%·10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시행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EITC-4대 보험”의 3중 구조(3-Tier)로 확충된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성, 관할부처의 차이, 효율성과 빈곤완화목적의 균형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충분한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성가구주 및 한부모 가구 등과 관련 여성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빈곤층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 경찰빈곤층 중에서는 51.2%, 근로빈곤층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라고 보고되고 있다(노대명 외, 2004).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설계되어 있는데, 여성가구주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전체 가주의 18.5%, 2005년 19.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성의 근로빈곤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여성근로자 및 여성가구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세제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여성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양성 평등한 근로복지연계제도로써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그 동안 논의되어왔던 사항들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 가. 여성 근로빈곤의 현황과 특성

여성 근로빈곤의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가족체계에서의 성별 노동 분업, 가족 내 자원배분의 문제로 인한 여성의 빈곤, 노동시장의 성차별, 분절성, 여성취업의 형태, 가부장적 복지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근로빈곤계층을 파악하는 데는 가구단위의 빈곤개념, 여성의 근로상태, 가구 내 자원배분의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되므로 이들 각 방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법의 사용은 여성빈곤의 측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종숙 외, 2006).

여성근로빈곤의 개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근로에 대한 정의문제일 것이다. 기존의 근로빈곤에서 노동시장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면 여성의 근로빈곤에서는 필연적으로 근로개념의 확대문제가 제기된다. 박영란 외(2003)에서도 여성빈곤과 가족 내 성간불평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의 자원배분의 불평등, 무급노동에 주로 투입되는 여성의 노동력에 기인한 빈곤화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족 내 자원배분의 문제는 제3세계를 중심으로 여성빈곤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축으로 논의되어 왔다. 가계단위의 빈곤정책이 실질적으로 가계구성원의 성별로 분리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동일한 가구 내에서도 여성과 아동이 보다 더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3세계 연구들에서 가족 내 자원배분을 식별할 수 있었던 데는 보다 용이한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이상인 이른바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계내의 자원배분을 측정할 것인가, 측정의 결과가 과연 개인빈곤상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빈곤은 가족요인, 동시에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는 요인들을 발굴할 때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소 상이한 접근을 보자면 유급노동인가 무급노동인가의 내용보다는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보다 넓게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이해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근로를 한다, 근로를 할 수 있다 등 노동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의 포함여부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문제이다. 실업률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실직빈곤층을 근로빈곤층의 주요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빈곤집단은 경제활동빈곤층으로 취업빈곤층보다는 확대되는 개념이 된다.

최근의 논의들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노대명·최승아, 2004). 근거로는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간의 모호한 경계 및 잦은 지위변화를 들 수 있다. 동태적으로 볼 때 취업상태의 변화와 이로 인한 소득의 변화가 급격하다면 결과적으로

한 시점에서 취업의 여부, 실업의 여부, 비경제활동 상태라는 것이 빈곤집단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분류이다(Matire & Nolan, 2000).

근로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존에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 정책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제도적 틀 내에서 논의가 불가능했던 비경제활동인구를 편입시키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새로운 정책집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근로빈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종숙 외, 2006).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빈곤집단,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빈곤집단,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근로가능빈곤집단(workable and working poor)의 개념이 그것이다(노대명·최승아, 2004).

특히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실업빈곤층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 빈곤 집단의 비중이 커서 주요 정책대상으로 취업빈곤층(working poor)과 비경제활동 빈곤(workable poor) 집단이 주가 될 것이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된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정책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근로빈곤계층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전체 빈곤 및 차상위 집단 중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비중도 적으나 실질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의 빈곤 및 차상위 비중은 남성에 비하여 오히려 높다. 전체 취업자 측면에서 빈곤비중을 살펴봐도 취업자 중 빈곤 및 차상위 비중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 내용은 빈곤 집단 중 여성비중의 증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취업/실업/비경활 인구 중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

취업집단	총 취업인구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10940	7375	877	748	360	252	9700	6374
비율 (단위: %)	100 (59.73)	100 (40.27)	8.02 (53.96)	10.15 (46.04)	3.29 (58.84)	3.42 (41.16)	88.69 (60.34)	86.44 (39.66)
실업집단	총 실업인구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580	490	136	84	42	46	40	360
비율 (단위: %)	100 (54.22)	100 (45.78)	23.47 (61.82)	17.16 (38.18)	7.26 (47.59)	9.47 (52.41)	69.28 (52.79)	73.37 (47.21)
비경활집단	총 비경활인구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5109	9577	1129	1794	209	391	3771	7392
비율 (단위: %)	100 (34.79)	100 (65.21)	22.10 (38.63)	18.73 (61.37)	4.08 (34.82)	4.08 (65.18)	73.81 (33.78)	77.19 (66.22)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각 소득계층별 남녀의 비율, 김종숙 외(2007)에서 재인용함.

또한 혼인상태 중 빈곤비율을 보면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의 빈곤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녀 간에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 중 사별 및 이혼한 집단의 빈곤비율은 24%에 달하는데 반하여 남성은 10%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V-6>).

이처럼 여성의 근로 빈곤율은 매우 높으며, 노동시장의 복합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 근로빈곤집단의 혼인상태 분포

(단위:%)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미혼	18.15	23.18	12.26	15.05	15.02	15.09	22.91	20.09	27.21
유배우	71.73	74.91	68.01	73.60	80.96	63.07	73.71	78.50	66.42
사별·이혼	10.12	1.92	19.73	11.35	4.02	21.84	3.38	1.42	6.3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김종숙 외(2007)에서 재인용함.

## 나. 여성가구주의 빈곤 현황과 특성

근로장려세제의 지급단위는 IV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단위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특히 여성가구주의 빈곤현황과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구주의 빈곤률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이 1996년 16.6%에서 2000년 18.5%로, 2005년 19.5%로 증가한 대신, 남성가구주 비율은 동기간 83.4%에서 81.5%, 80.5%로 감소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점진적 증가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은 1996년 8.3%에서 2000년 16.9%, 2005년 18.4%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가 증가하는 동시에 여성가구주 중 빈곤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빈곤의 여성화를 보여주는 중요 지표이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 역시 1996년 1.8%에서 2000년 6.4%, 2005년 9.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동기간 빈곤의 성적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통계청, 가구 소비 실태조사(1996, 2000) 원자료 및 가계조사자료(2005)<sup>18)</sup>).

2000년 가구 소비 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및 남성가구주 빈곤률을 비교해 보면,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이고,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연령별 빈곤가구 비율을 보면, 20세 미만의 경우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은 9.7%, 10.0%로 유사하나, 20-64세 연령층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는 11.8%, 남성가구주 가구는 5.3%로 20-64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64세 계층이 근로연령 계층이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연령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 연령계층의 빈곤 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특별히 높다는 것은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자활, 사회보장정책에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8) 각 년도 최저 생계비 기준 빈곤률. 가계조사자료(2005)는 1인 가구 및 농어가구는 제외된 자료임.



〈표 IV-7〉 가구주 성별 연령별 빈곤가구 비율 및 빈곤률

(단위: %)

	가구주 연령	여성가구주 가구(A)	남성가구주 가구(B)	전체가구	A/B(배)
가구	20세 미만	9.7	10.0	9.8	1.0
	20-64세	11.8	5.3	6.2	2.2
	65세 이상	56.1	29.3	39.3	1.9
	전 체	21.0	7.0	10.1	3.0
가구원	20세 미만	9.8	9.8	9.8	1.0
	20-64세	11.6	5.4	6.0	2.2
	65세 이상	51.0	25.1	31.2	2.0
	전 체	16.9	6.4	7.9	2.6

자료: 통계청, 가구 소비 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률

또한 성별 빈곤격차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전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3.75배 수준이었는데,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 증가율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최고 2.6배에 이르고 가구주 성별 간의 빈곤위험도 2.34배 수준까지 축소되는 등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위험이 성별 간에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의 3.83배 수준으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위기의 절정이었던 1998년과 그 이후 회복과정에서 보여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간의 빈곤률 전개 양상에 차별성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 빈곤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99년에는 그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빈곤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1998년에 빈곤률이 급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1999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2000년 이후에도 빈곤률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급작스런 경제위기로 실업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가 비교적 빠르게 제자리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가 그 당시뿐 만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그 회복과정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인 1997

년 빈곤률과 경제위기가 회복된 2002년 빈곤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률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보다 거의 3% 포인트 높은 빈곤률을 보이며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다수가 빈곤층에 계속 머물게 되는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의 성적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탈빈곤의 수단을 가지지 못하여, 한번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빈곤계층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노동시장에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고용형태별 빈곤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빈곤률은 정규직의 경우 1996년 7.1%에서 2000년 9.1%로 2% 포인트 증가한데 비하여, 비정규직의 경우 1996년 13.1%에서 2000년 22.5%로 무려 9.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률 증가율 면에서도 동기간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률이 71.8% 증가한 반면, 정규직의 경우 28.2% 증가하였다. 이는 고용지위의 취약성이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빈곤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비정규직의 빈곤률 증가는 여성가구주 중의 비정규직 비중이 동기간 9.1% 증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V-8〉 빈곤 여성가구주의 고용형태별 분포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996(A)	7.1	13.1	7.8
2000(B)	9.1	22.5	12.0
증감율(B/A)	28.2	71.8	53.8
증감폭(B-A)	2.0	9.4	4.2

자료: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률

Millar & Glendinning(1989), Millar(1996)는 빈곤 위험이 양성 간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빈곤의 성 영역(gender dimension of poverty)을 구성하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성별분업에 의한 자원통제력에서 여성들의 상대적 소외는 노동시장 접근, 가족 내 여성역할, 사회보장체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착·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으로 귀결된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라는 성별분업체계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경제적 자원 접근통로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운 점, 그리고 진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진입이나 가족생활로 인한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노동시장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담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사회보장제도로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여성이 사회보장수혜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Millar & Glendinning, 1989; Millar, 1996; 김영란, 1997; 강남식 외, 2001; 이해경 외, 2002; 박영란 외, 2003; 석재은, 2005 재인용).

피어스도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으로 직업의 게토화(Ghettoization)와 임금구조와 같은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자체가 성 분절화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함께 여성빈곤을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은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여성을 주변적, 의존적 존재로 인식하는 복지제도의 가부장성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의 전제는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피부양자인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남편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 독신 등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로 인해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그 정당성의 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Pearce, 1987; 김영란, 1997; 김혜영 외, 2005 재인용).

특히 여성가구주이면서 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 가구의 규모는 1,193.6가구로 여성가구주 중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절대빈곤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주 가구 중

16.6%를 차지하고 있다. 절대빈곤선의 1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여성 한부모 가구주 가구의 37.4%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9〉 여성 한부모의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

구분	빈곤선 이하	빈곤선 120%	빈곤선 150%	빈곤선 180%	빈곤선 200%미만	빈곤선 200%이상	전체
가 구 수	198.08	88.78	160.07	140.6	93.51	512.56	1,193.6
비 율	16.6	7.4	13.4	11.8	7.8	42.9	100.0
누적비율	16.6	24.0	37.4	49.2	57.1	100.0	

#### 다. 여성의 근로빈곤과 한국형 EITC

지금까지는 여성의 근로빈곤의 현황이 어떠하며, 남성의 근로빈곤 현황과 다른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지급단위가 가구단 위인 것과 관련 여성가구주의 빈곤현황과 특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관할부처의 차이, 효율성과 빈곤완화목적의 균형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충분한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 정을 거치는 동안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성가구주 및 한부모 가구, 여 성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가 시 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여성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양성 평등한 근로복지연계 제도로써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그 동안 논의 되었던 사항들을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 1) 최저임금제, 빈곤탈출효과 여부와 급여단위의 문제

우리나라는 절대빈곤층 뿐만 아니라 일하는 빈곤층, 비정규노동자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EITC는 일하는 빈곤층의 빈곤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미국에서 EITC로 인한 아동빈곤 감소효과는 조금 있

었지만 전반적인 빈곤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그 이유는 첫째, EITC가 임금이 있는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 중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감소효과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 1회 80만원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월 평균 약 7만원 정도인데, 이 급여로 빈곤이 탈출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실제 근로빈곤층은 빈곤을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한다. 따라서 EITC처럼 1년에 1회 지급했을 경우 빈곤층의 소득보장정책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급여단위의 문제이다. 상기에서와 같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급여액 수준이 낮고, 적용소득 범위도 좁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2차 소득자(second earner)중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유인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급단위를 과세단위와 일치하게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혼벌금(marriage penalt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실제로 2차 소득자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때 급여수준만 계속 상승할 경우, 급여지급의 시차로 인한 근로유인 제고효과가 미흡할 수도 있으므로 시차를 고려한 급여수준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바로 EITC가 최저임금을 높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과 EITC 급여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EITC 도입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숙련·저임금·불안정한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미국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의 빈곤률은 오히려 증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적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EITC가 도입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은 어쩌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EITC를 지급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빈곤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EITC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ITC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 2) 소득파악률 제고의 측면

EITC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바로 저소득층의 소득파악문제이다. EITC가 근로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실제 EITC는 작동이 어려울 것이다. EITC를 통해 소득파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람들은 EITC 급여 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은 EITC의 전제조건이지 EITC를 통한 효과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EITC의 급여가 높아야만 소득파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EITC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월평균 7만원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집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성지미, 2005).

또한 EITC 도입과 함께 ‘면세점’(법률에 의하여 과세를 면제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한도)의 인하가 동반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면세점이 너무 높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조세전문가들을 통해 이야기되어 왔고 실제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ITC 도입과 함께 논의되는 면세점 인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보다 강력하고, 사실 그래야 EITC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EITC를 통한 소득파악률의 제고보다는 면세점 인하의 효과와 맞물려 소득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 3) 저임금노동의 양산 우려 여부

특히, EITC의 경우에는 빈곤층을 향구적인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이나 미혼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그 이유는 EITC가 부부합산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했을 때, 점감 구간에 속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점증구간이나 평탄구간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반면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던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데는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돌봐야 하는 아동 혹은 노인이 있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EITC와 TANF(공공부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확대됨에 따라 저숙련·저임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격히 증가했다. 즉 EITC와 TANF가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을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게다가 위스콘신주의 빈곤탈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임금은 실제 복지급여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성지미, 2005).

그러나 EITC가 도입초기에 소규모 대상자에 대해 소규모 금액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인해 제약적인 효과만을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로유인제고, 소득과약을 제고 등의 효과를 가질 것이며, EITC로 인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저임금노동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EITC제도는 도입당시 상기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 즉, 근로유인 효과, 기초생보 수급자의 탈수급효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 감소 효과 등의 기대와 논의가 있었으나, 그 논의과정에서 본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여성가주주의 특성, 가구 내 여성가구원으로서의 특성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실제 가구주, 가구원으로서의 여성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노동공급함수 추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V

##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과 여성 노동공급효과

1. 여성 노동공급함수의 도출	81
2. 자료의 특성	85
3. 변수의 설명	116
4.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	120
5. 소결	162



## 1. 여성 노동공급함수의 도출

본 장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주는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II장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의 정책이지만, 여성의 노동공급은 개인단위이므로 가구단위 정책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3단계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체 탄력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였다.<sup>19)</sup>

$$\text{Max } U(l_i, C_i) = [\phi C_i^{-1} + l_i^{-1}]^{-\frac{1}{1}} \quad (1)$$

$$\text{s.t. } C_i = (1 - t_i)wh + vy_i$$

$$T = h_i + l_i$$

$l$ : 여가

$C$ : 소비

$t$ : 세율

$w$ : 임금률

$h$ : 노동시간

$vy$ : 비근로소득

$T$ :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 14시간/day으로 가정

$\phi$ : 개인의 소비와 여가 간의 선호를 결정하는 계수(나이, 학력수준, 자녀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19) 자세한 도출과정은 Lee(2004) 참조. 동일한 CES효용함수를 통해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국내연구로는 Lee & Chun(2005)과 김현숙·성명재(2007), 이병희(2008) 등이 있다.

한편 효용극대화의 문제와  $C$ 의 방정식을 풀고 난 후 대체탄력성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ln\left(\frac{l_i}{C_i}\right) = -\lambda \ln \phi_i - \lambda \ln[(1-t_i)w_i]; \quad \lambda = \frac{1}{1+l} \quad (2)$$

또한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h$ (근로시간),  $E_{rw}$ (비보상임금탄력성),  $E_{hw}^{comp}$ (보상임금탄력성) 도출할 수 있다.

$$h = \frac{T - \phi^{-\lambda}mw^{\lambda}vy}{1 + \phi^{-\lambda}mw^{-\lambda}} \quad (3)$$

$$E_{hw} = \frac{\lambda \phi^{-\lambda}mw^{1-\lambda}vy}{mwT - \phi^{-\lambda}mw^{1-\lambda}vy} - \frac{(1-\lambda)\phi^{-\lambda}mw^{1-\lambda}}{1 + \phi^{-\lambda}mw^{1-\lambda}} \quad (4)$$

$$E_{hw}^{comp} = E_{hw} - mw \frac{\partial h}{\partial vy} = E_{hw} + \left( \frac{\phi^{-\lambda}mw^{1-\lambda}}{1 + \phi^{-\lambda}mw^{1-\lambda}} \right) \quad (5)$$

$vy$ :가상소득, 노동공급이 0인 경우 가구소득.

$mw$ :세후임금률

여기서  $mw$ 는 세후임금률,  $vy$ 는 가상소득으로서 노동공급이 0인 경우의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CES효용함수로부터 실증분석에 필요한 2개의 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ln \phi_i = k_0 + k_1 age_i + k_2 edu_i + k_3 kid_i + \epsilon_i \quad (6)$$

(단,  $\phi_i$ 는 개인의 소비와 여가간의 선호를 결정하는 계수)

$$\ln\left(\frac{l_i}{C_i}\right) = \beta_0 + \beta_1 age_i + \beta_2 edu_i + \beta_3 kid_i + \beta_4 \ln mw_i + \beta_5 \lambda_h + \epsilon_i \quad (7)$$

$$\beta_0 = \lambda k_0$$

$$\beta_1 = -\lambda k_1$$

$$\beta_2 = -\lambda k_2$$

$$\beta_3 = -\lambda k_3$$

$$\beta_4 = -\lambda \quad (\text{CES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할 경우 Slutsky 조  
건을 충족시키는 충분조건을 형성한다.})$$

$\lambda_h$ : Mill's ratio의 역수

$\beta_5$ :  $\lambda_h$ 의 추정계수

다음으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표본선택편의와 노동시간과 임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추정모형을 통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의 가능성에 대한 Probit Likelihood 함수를 도출한다. 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도출된 Probit Likelihood 함수의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노동공급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임금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해를 구한다. 이상의 방식으로 구해진 노동공급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치는 표본선택의 오류와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정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위의 도출된 모형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노동공급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축약형 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text{임금}_i = \beta_0 + \beta_1(\text{연령}_i) + \beta_2(\text{연령}_i^2) + \beta_3(\text{교육연수}_i) + \beta_4(\text{연령}_i \times \text{교육연수}_i) + \epsilon_i \quad (8)^{20}$$

20)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교육연수의 선형함수라고 가정한 Mincer 타입의 임금함수를 이용한 것이다. 최강식(2002)의 연구에서는 '연령-교육연수-6'을 근로자의 경력연수로 정의하고, 이를 임금함수에 사용하였다. 저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정의된 경력변수를 사용하였을 때나 근로자의 연령변수를 사용하였을 때나 그 추정치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위의 경력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과 동시에 임금함수의 설명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

$$\begin{aligned} \text{노동시장참가}_i = & \alpha_0 + \alpha_1(\text{연령}_i) + \alpha_2(\text{연령}_i^2) + \alpha_3(\text{교육연수}_i) \\ & + \alpha_4(18\text{세미만아동수}_i) + \alpha_5(\ln\text{근로소득}_i) + \alpha_6(\ln\text{배우자소득}_i) \\ & + \alpha_7(\ln\text{부부합산소득더미}_i) + \alpha_8(\text{대도시거주여부}_i) + \alpha_9(\text{성별더미}_i) + \eta_i \end{aligned} \quad (9)$$

$$\begin{aligned} \ln(\text{근로시간}_i) = & \gamma_0 + \gamma_1(\text{연령}_i) + \gamma_2(\text{연령}_i^2) + \gamma_3(\text{교육연수}_i) \\ & + \gamma_4(18\text{세미만아동수}_i) + \gamma_5(\ln\text{근로소득}_i) + \gamma_6(\ln\text{배우자소득}_i) \\ & + \gamma_7(\ln\text{부부합산소득더미}_i) + \gamma_8(\text{대도시거주여부}_i) + \gamma_9(\text{성별더미}_i) + \theta_i \end{aligned} \quad (10)$$

실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검정하는데 있어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검정은 쉬운 일이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관측 불가능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관측 가능한 다른 변수의 효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II장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이전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유효 임금(effective wage)의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세율인하로 인한 임금의 상승으로 보는 가정 하에 검정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결국 부의세(negative tax)이므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임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는 아래 모형에서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참여확률(extensive margin)과 노동공급시간(intensive margin)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

로자의 연령변수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애취업기간이 임금수준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기 변수들은 임금함수 추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구성하였으나, 공급측면의 추가변수 및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의 변수도 향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사용가능한 자료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 등이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도시가계조사는 빈곤층의 샘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두 자료를 사용하였다.<sup>21)</sup>

### 가. 한국복지패널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다른 자료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현재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 완료하였고,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이때 저소득층과 일반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선택하였다.

조사기간이 가장 최근이며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가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1차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일반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류 등의 문제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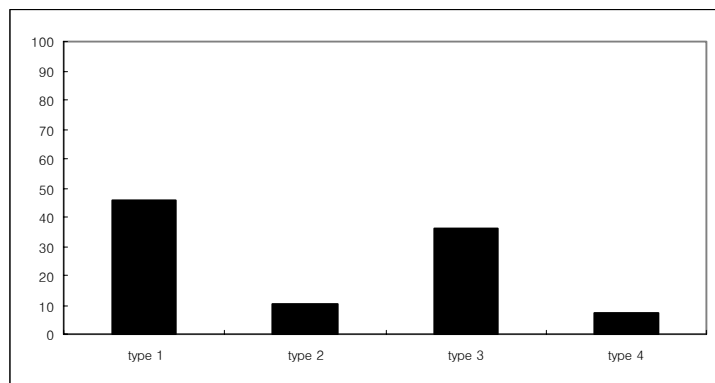
21)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과 소비지출, 저축·부채, 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자산에 대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심층조사이다. 도시가계조사의 경우는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기본조사로 조사대상은 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비혈연 자취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약 7,000가구이며 조사주기는 매월이다. 가구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복지패널을 이용한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은 15-64세에 해당하는 전체 복지패널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배우자의 유무와 성별에 따라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또 다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 가구단위로 데이터를 뽑은 후 가구주와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노동공급함수를 성별로 추정하였다.

〈표 V-1〉 유형별 분포-복지패널

유형		빈도(명)	비율(%)
여성	여성이 배우자 있는 경우 (type 1)	3,149	45.8
	여성이 배우자 없는 경우 (type 2)	715	10.4
남성	남성이 배우자 있는 경우 (type 3)	2,502	36.4
	남성이 배우자 없는 경우 (type 4)	507	7.4
합계		6,873	100



[그림 V-1] 유형별 분포 비율-복지패널

전체 6,873명 중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1)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3) 36.4%,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type 2) 10.4%,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type 4) 7.4% 순이었다. 이에 따른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표 V-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라 그 빈도와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구의 소득이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1,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8.9%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점증구간에 속한 비율도 33%나 되었다. 남성 또한 가구소득이 1,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4.5%로 가장 높았고, 19%가 점증구간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V-2>와 같다.

<표 V-2>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복지패널

(단위: 명, %)

성별	급여구간	빈도	%
여성	점증구간 (0-800만원 미만)	1,276	33.0
	평탄구간 (800-1,200만원 미만)	276	7.1
	점감구간 (1,200-1,700만원 미만)	421	10.9
	1,700만원 이상	1,891	48.9
남성	점증구간 (0-800만원 미만)	572	19.0
	평탄구간 (800-1,200만원 미만)	164	5.5
	점감구간 (1,200-1,700만원 미만)	334	11.1
	1,700만원 이상	1,939	64.5

또한 근로장려세제 수급의 조건이 되는 18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구간 별로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V-3>, <표 V-4>와 같다. 여성의 경우에는 점증구간에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1,700만원 이상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7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수급을 받아야하는 근로

빈곤층이 많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3〉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자녀수 분포: 여성-복지패널  
(단위: 명)

급여구간	18세 미만 자녀수		
	0명	1명	2명 이상
점증구간 (0-800만원 미만)	817	199	260
평탄구간 (800-1,200만원 미만)	151	46	79
점감구간 (1,200-1,700만원 미만)	201	82	138
1,700만원 이상	732	397	762

〈표 V-4〉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자녀수 분포: 남성-복지패널  
(단위: 명)

급여구간	18세 미만 자녀수		
	0명	1명	2명 이상
점증구간 (0-800만원 미만)	440	61	70
평탄구간 (800-1,200만원 미만)	106	26	32
점감구간 (1,200-1,700만원 미만)	169	60	105
1,700만원 이상	759	398	782

다음은 각 유형 집단에 대해 연령 및 학력분포를 알아보았다. 먼저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형에서 30대가 가장 높았으나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type 2)는 40대가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형별 연령분포에 대한 빈도 및 평균은 <표 V-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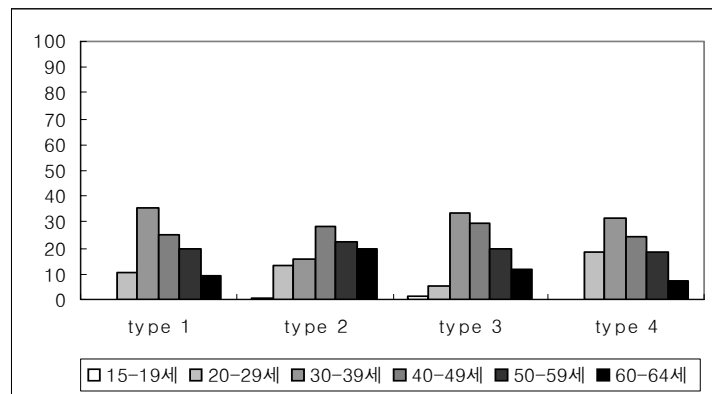


〈표 V-5〉 유형별 연령분포-복지패널

(단위: 명, %)

연령	여성		남성		전체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15-19세	5(0.2)	5(0.7)	1(1.0)	1(0.2)	12(0.2)
20-29세	321(10.2)	92(12.9)	125(5.0)	93(18.3)	631(9.2)
30-39세	1,114(35.4)	112(15.7)	844(33.7)	159(31.4)	2,229(32.4)
40-49세	784(24.9)	202(28.3)	738(29.5)	123(24.3)	1,847(26.9)
50-59세	625(19.8)	161(22.5)	501(20.0)	95(18.7)	1,382(20.1)
60-64세	300(9.5)	143(20.0)	293(11.7)	36(7.1)	772(11.2)
합계	3,149(100)	715(100)	2,502(100)	507(100)	6,873(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2] 유형별 연령분포 비율-복지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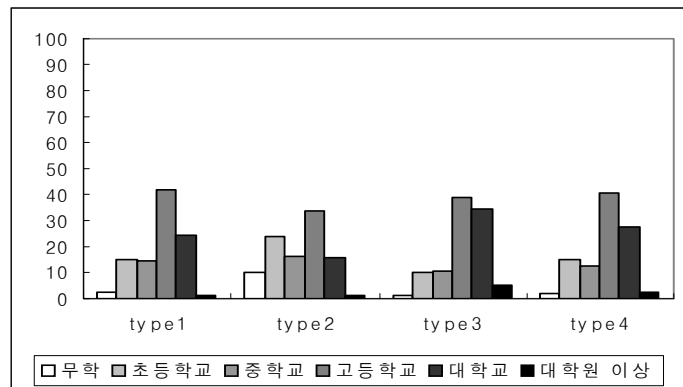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유형별로 학력별 분포를 알아보았다(<표 V-6>). 학력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type 2)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49.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비율(대학교 이상)은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3)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6〉 유형별 학력분포-복지패널

(단위: 명, %)

구분 학력	여성		남성		전체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무학	76(2.4)	70(9.8)	25(1.0)	10(2.0)	181(2.6)
초등학교	481(15.3)	170(23.8)	247(9.9)	77(15.2)	975(14.2)
중학교	455(14.4)	116(16.2)	264(10.6)	63(12.4)	898(13.1)
고등학교	1,324(42.0)	241(33.7)	976(39.0)	206(40.6)	2,747(40.0)
대학교	769(24.4)	110(15.4)	864(34.5)	139(27.4)	1,882(27.4)
대학원 이상	43(1.4)	8(1.1)	125(5.0)	12(2.4)	188(2.7)
모름/무응답	1(0.0)	-	1(0.0)	-	2(0.0)
합계	3,149(100)	715(100)	2,502(100)	507(100)	6,873(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3] 유형별 학력분포 비율-복지패널

<표 V-7>은 유형별로 거주지와 18세 미만 아동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거주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52.9%로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7.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도 이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18세 미만 아동수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았으나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성과 남성(type 2, type 4)에서 각각 70.3%, 84.4%로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type 1, type 3) 2명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비율도 각각 31.2%, 32.9%로 한 명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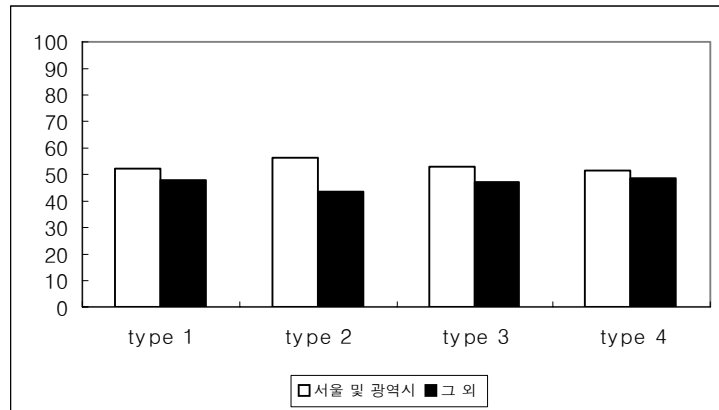
는 경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7〉 유형별 거주지역 및 18세 미만 아동수의 분포-복지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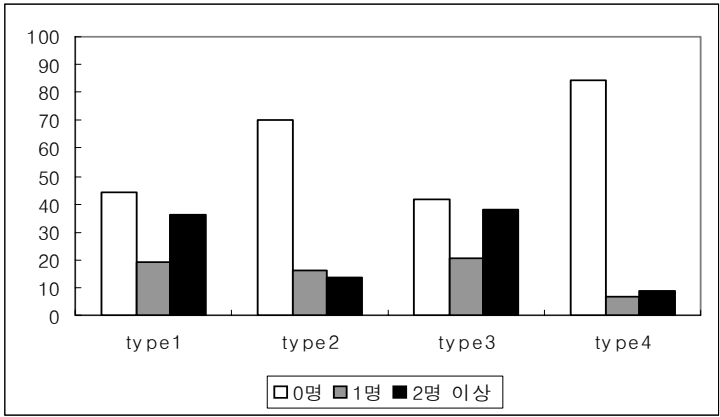
(단위: 명, %)

거주지역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서울 및 광역시		1,647(52.3)	404(56.5)	1,323(52.9)	260(51.3)	3,634(52.9)
그 외		1,502(47.7)	311(43.5)	1,179(47.1)	247(48.7)	3,239(47.1)
18세미만 아동수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0명		1,398(44.4)	503(70.3)	1,046(41.8)	428(84.4)	3,375(49.1)
1명		610(19.4)	114(15.9)	509(20.3)	36(7.1)	1,269(18.5)
2명 이상		1,141(36.2)	98(13.7)	947(37.9)	43(8.5)	2,229(32.4)
합계		3,149(100)	715(100)	2,502(100)	507(100)	6,873(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4] 유형별 거주지역 분포 비율-복지패널



[그림 V-5] 유형별 18세 미만 아동수 분포 비율-복지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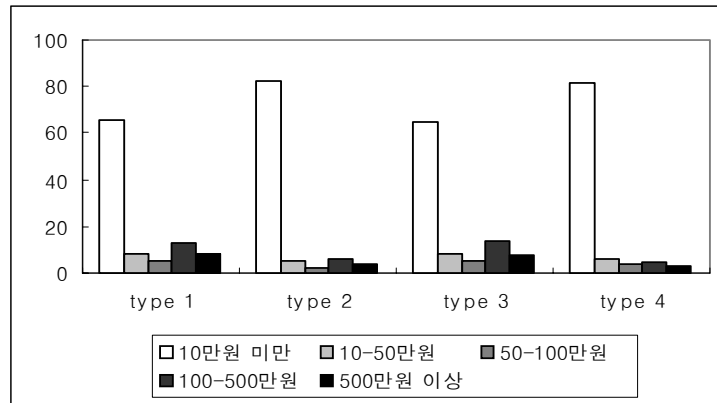
다음은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에 대한 분포이다(<표 V-8>). 가구의 비근로소득의 경우 전체의 68.2%가 10만원 미만으로 비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근로소득이 10만원 미만인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8>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의 분포-복지패널

(단위: 명, %)

가구의 연비근로소득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10만원 미만		2,060(65.5)	589(82.4)	1,620(64.8)	414(81.7)	4,683(68.2)
10-50만원		256(8.1)	41(5.7)	218(8.7)	31(6.1)	546(7.9)
50-100만원		157(5.0)	14(2.0)	126(5.0)	21(4.1)	318(4.6)
100-500만원		411(13.1)	43(6.0)	339(13.6)	25(4.9)	818(11.9)
500만원 이상		262(8.3)	28(3.9)	198(7.9)	16(3.2)	504(7.3)
합계		3,149(100)	715(100)	2,502(100)	507(100)	6,873(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6]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 분포 비율-복지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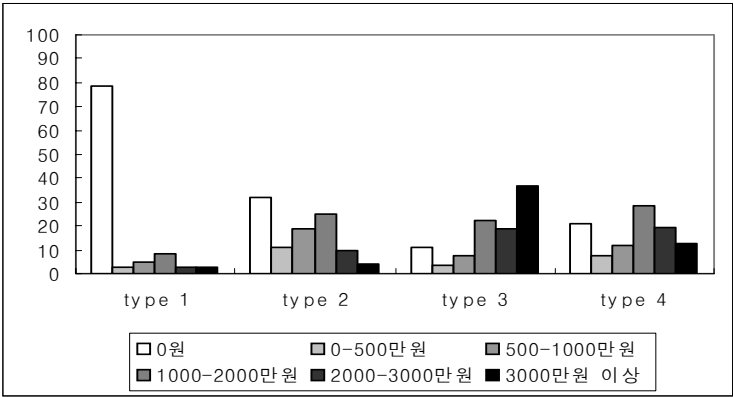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간 근로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이 0원인 경우가 거의 절반(45.0%)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특히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1)가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78.6%),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3)는 3,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이와 대비되는데,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1)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비율이 28.8%로 가장 높았고,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3)는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결혼한 남성의 배우자 75%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별 본인의 연간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분포는 각각 <표 V-9>와 <표 V-10>에 제시하였다.

&lt;표 V-9&gt; 연근로소득 분포-복지패널

(단위: 명, %)

연간 근로소득	여성		남성		전체
	배우자O (type1)	배우자X (type2)	배우자O (type3)	배우자X (type4)	
0원	2,474(78.6)	266(31.6)	285(11.4)	106(20.9)	3,091(45.0)
0-500만원	86(2.7)	81(11.3)	87(3.5)	38(7.5)	292(4.2)
500-1000만원	160(5.1)	134(18.7)	197(7.9)	59(11.6)	550(8.0)
1000-2000만원	261(8.3)	177(24.8)	551(22.0)	144(28.4)	1,133(16.5)
2000-3000만원	83(2.6)	69(9.7)	470(18.8)	98(19.3)	720(10.5)
3000만원 이상	85(2.7)	28(3.9)	912(36.5)	62(12.2)	1,087(15.8)
합계	3,149(100)	715(100)	2,502(100)	507(100)	6,873(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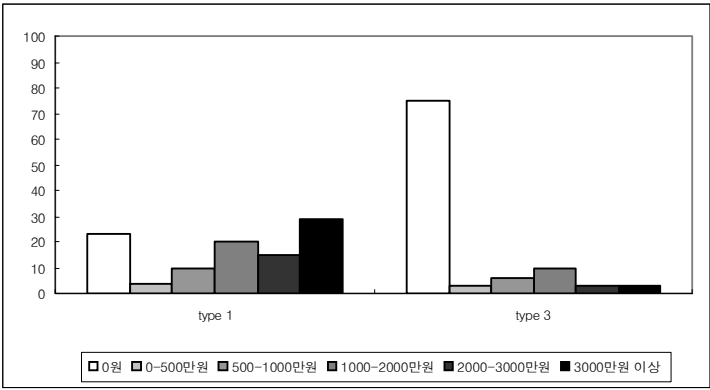
[그림 V-7]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복지패널

〈표 V-10〉 배우자의 연근로소득 분포-복지패널

(단위: 명, %)

연배우자근로소득	여성(type1)	남성(type3)	전체
0원	728(23.1)	1,876(75.0)	2,604(46.1)
0-500만원	121(3.8)	77(3.1)	198(3.5)
500-1000만원	292(9.3)	147(5.9)	439(7.8)
1000-2000만원	636(20.2)	238(9.5)	874(15.5)
2000-3000만원	465(14.8)	81(3.2)	546(9.7)
3000만원 이상	907(28.8)	82(3.3)	989(17.5)
합계	3,149(100)	2,501(100)	5,650(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 응답한 가구만 대상으로 함



[그림 V-8] 배우자의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복지패널

다음은 연부부합산근로소득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부부합산근로소득의 범주는 EITC의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근로소득의 1700만원을 기준으로 EITC급여체계에 따라 점증구간(0-800만원), 평탄구간(800-1200만원), 점감구간(1200-1700만원), 1700만원 이상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포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1,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5.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유형별로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0-8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type 2)는 0-800만원 미만이 52.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V-11>). 이는 편모인 경우 소득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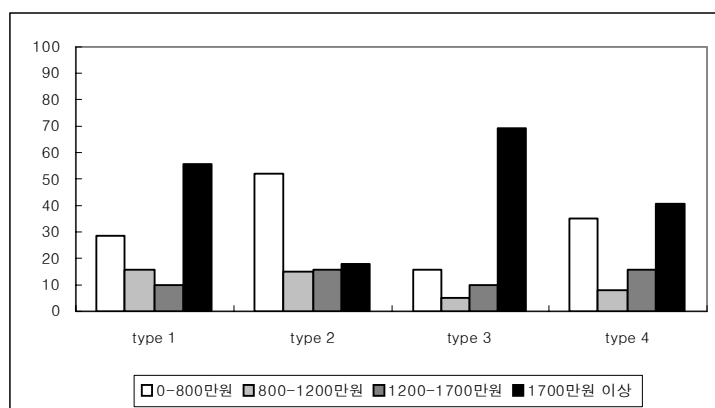
〈표 V-11〉 부부합산 연근로소득의 분포-복지패널

(단위: 명, %)

구분 연부부 합산근로소득	여성		남성		전체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0-800만원	903(28.7)	373(52.2)	393(15.7)	178(35.1)	1,847(26.9)
800-1200만원	171(5.4)	105(14.7)	123(4.9)	41(8.1)	440(6.4)
1200-1700만원	311(9.9)	110(15.4)	253(10.1)	81(16.0)	755(11.0)
1700만원 이상	1,764(56.0)	127(17.8)	1,732(69.3)	207(40.8)	3,830(55.7)
합계	3,149(100)	715(100)	2,501(100)	507(100)	6,872(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 응답한 가구만 대상으로 함



〔그림 V-9〕 부부합산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복지패널

<표 V-12>에 제시되어 있는 연간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 1,942시간에서 최고 1,988시간 사이였으며, 1,960-1,980시간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었다(67.5%). 유형 간의 확연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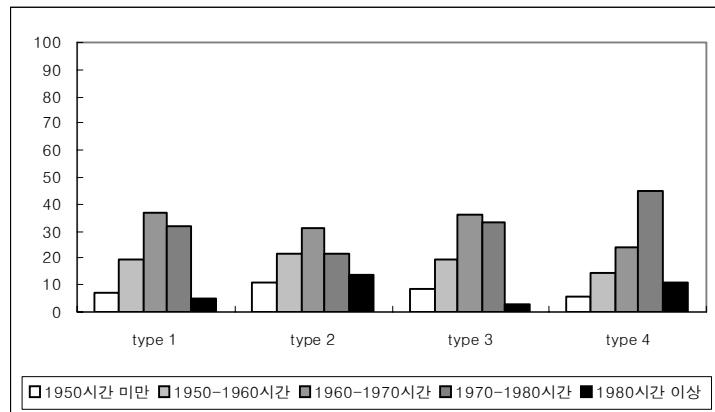
〈표 V-12〉 연근로시간의 분포-복지패널

(단위: 명, %)

연간 근로시간	여성		남성		전체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1950시간 미만	77(7.5)	46(11.0)	167(8.4)	20(5.6)	310(8.2)
1950-1960시간	197(19.3)	90(21.4)	385(19.3)	52(14.6)	724(19.1)
1960-1970시간	374(36.7)	132(31.4)	727(36.4)	86(24.1)	1,319(34.8)
1970-1980시간	322(31.6)	93(22.1)	665(33.3)	161(45.1)	1,241(32.7)
1980시간 이상	50(4.9)	59(14.0)	51(2.6)	38(10.6)	198(5.2)
합계	1,020(100)	420(100)	1,995(100)	357(100)	3,792(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 응답한 가구만 대상으로 함



[그림 V-10] 연근로시간 분포 비율-복지패널

지금까지 제시한 사항을 <표 V-13>, <표 V-14>, <표 V-15>에 정리하였다.



〈표 V-13〉 복지패널 전체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전체
연령	15-19세	12(0.2)
	20-29세	631(9.2)
	30-39세	2,229(32.4)
	40-49세	1,847(26.9)
	50-59세	1,382(20.1)
	60-64세	772(11.2)
학력	무학(만8세 이상)	181(2.6)
	초등학교	975(14.2)
	중학교	898(13.1)
	고등학교	2,747(40.0)
	전문대학	561(8.2)
	대학교	1,321(19.2)
	대학원(석/박사)	188(2.7)
거주지역	모름/무응답	2(0.0)
	서울 및 광역시	3,634(52.9)
18세 미만 아동 수	그 외	3,239(47.1)
	0 명	3,375(49.1)
	1 명	1,269(18.5)
	2 명	1,927(28.0)
	3 명 이상	302(4.4)
근로소득	0원	3,091(45.0)
	0-500만원	292(4.2)
	500-1000만원	550(8.0)
	1000-2000만원	1,133(16.5)
	2000-3000만원	720(10.5)
	3000만원 이상	1,087(15.8)
배우자의 근로소득	0원	2,604(46.1)
	0-500만원	198(3.5)
	500-1000만원	439(7.8)
	1000-2000만원	874(15.5)
	2000-3000만원	546(9.7)
	3000만원 이상	989(17.5)
부부합산 근로소득	0-800만원	1,847(26.9)
	800-1200만원	440(6.4)
	1200-1700만원	755(11.0)
	1700만원 이상	3,830(55.7)
가구의 비근로소득	10만원 미만	4,683(68.2)
	10-50만원	546(7.9)
	50-100만원	318(4.6)
	100-500만원	818(11.9)
연간 근로시간	500만원 이상	504(7.3)
	1950시간 미만	310(8.2)
	1950-1960시간	724(19.1)
	1960-1970시간	1,319(34.8)
	1970-1980시간	1,241(32.7)
합계	1980시간 이상	198(5.2)
		6,873(100%)

〈표 V-14〉 복지패널 여성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여성	
		type 1	type 2
연령	15-19세	5(0.2)	5(0.7)
	20-29세	321(10.2)	92(12.9)
	30-39세	1,114(35.4)	112(15.7)
	40-49세	784(24.9)	202(28.3)
	50-59세	625(19.8)	161(22.5)
	60-64세	300(9.5)	143(20.0)
학력	무학(만8세 이상)	76(2.4)	70(9.8)
	초등학교	481(15.3)	170(23.8)
	중학교	455(14.4)	116(16.2)
	고등학교	1,324(42.0)	241(33.7)
	전문대학	261(8.3)	40(5.6)
	대학교	508(16.1)	70(9.8)
	대학원(석/박사)	43(1.4)	8(1.1)
	모름/무응답	1(0.0)	-
거주지역	서울 및 광역시	1,647(52.3)	404(56.5)
	그 외	1,502(47.7)	311(43.5)
18세 미만 아동 수	0 명	1,398(44.4)	503(70.3)
	1 명	610(19.4)	114(15.9)
	2 명	982(31.2)	86(12.0)
	3 명 이상	159(5.0)	12(1.7)
근로소득	0원	2,474(78.6)	266(31.6)
	0-500만원	86(2.7)	81(11.3)
	500-1000만원	160(5.1)	134(18.7)
	1000-2000만원	261(8.3)	177(24.8)
	2000-3000만원	83(2.6)	69(9.7)
	3000만원 이상	85(2.7)	28(3.9)
배우자의 근로소득	0원	728(23.1)	-
	0-500만원	121(3.8)	-
	500-1000만원	292(9.3)	-
	1000-2000만원	636(20.2)	-
	2000-3000만원	465(14.8)	-
	3000만원 이상	907(28.8)	-
부부합산 근로소득	0-800만원	903(28.7)	373(52.2)
	800-1200만원	171(5.4)	105(14.7)
	1200-1700만원	311(9.9)	110(15.4)
	1700만원 이상	1,764(56.0)	127(17.8)
가구의 비근로소득	10만원 미만	2,060(65.5)	589(82.4)
	10-50만원	256(8.1)	41(5.7)
	50-100만원	157(5.0)	14(2.0)
	100-500만원	411(13.1)	43(6.0)
	500만원 이상	262(8.3)	28(3.9)
연간 근로시간	1950시간 미만	77(7.5)	46(11.0)
	1950-1960시간	197(19.3)	90(21.4)
	1960-1970시간	374(36.7)	132(31.4)
	1970-1980시간	322(31.6)	93(22.1)
	1980시간 이상	50(4.9)	59(14.0)
합계		3,149(45.8%)	715(10.4%)

〈표 V-15〉 복지패널 남성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남성	
		type 3	
연령	15-19세	1(1.0)	1(0.2)
	20-29세	125(5.0)	93(18.3)
	30-39세	844(33.7)	159(31.4)
	40-49세	738(29.5)	123(24.3)
	50-59세	501(20.0)	95(18.7)
	60-64세	293(11.7)	36(7.1)
학력	무학(만8세 이상)	25(1.0)	10(2.0)
	초등학교	247(9.9)	77(15.2)
	중학교	264(10.6)	63(12.4)
	고등학교	976(39.0)	206(40.6)
	전문대학	221(8.8)	39(7.7)
	대학교	643(25.7)	100(19.7)
	대학원(석/박사)	125(5.0)	12(2.4)
	모름/무응답	1(0.0)	-
거주지역	서울 및 광역시	1,323(52.9)	260(51.3)
	그 외	1,179(47.1)	247(48.7)
18세 미만 아동 수	0 명	1,046(41.8)	428(84.4)
	1 명	509(20.3)	36(7.1)
	2 명	823(32.9)	36(7.1)
	3 명 이상	124(5.0)	7(1.4)
근로소득	0원	285(11.4)	106(20.9)
	0-500만원	87(3.5)	38(7.5)
	500-1000만원	197(7.9)	59(11.6)
	1000-2000만원	551(22.0)	144(28.4)
	2000-3000만원	470(18.8)	98(19.3)
	3000만원 이상	912(36.5)	62(12.2)
배우자의 근로소득	0원	1,876(75.0)	-
	0-500만원	77(3.1)	-
	500-1000만원	147(5.9)	-
	1000-2000만원	238(9.5)	-
	2000-3000만원	81(3.2)	-
	3000만원 이상	82(3.3)	-
부부합산 근로소득	0-800만원	393(15.7)	178(35.1)
	800-1200만원	123(4.9)	41(8.1)
	1200-1700만원	253(10.1)	81(16.0)
	1700만원 이상	1,732(69.3)	207(40.8)
가구의 비근로소득	10만원 미만	1,620(64.8)	414(81.7)
	10-50만원	218(8.7)	31(6.1)
	50-100만원	126(5.0)	21(4.1)
	100-500만원	339(13.6)	25(4.9)
	500만원 이상	198(7.9)	16(3.2)
연간 근로시간	1950시간 미만	167(8.4)	20(5.6)
	1950-1960시간	385(19.3)	52(14.6)
	1960-1970시간	727(36.4)	86(24.1)
	1970-1980시간	665(33.3)	161(45.1)
	1980시간 이상	51(2.6)	38(10.6)
합계		2,502(36.4%)	507(7.4%)

## 나. 한국노동패널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의 8차년도(2005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빈도와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제시함으로써 대상 집단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자료의 분석은 15-64세에 해당하는 전체 한국노동패널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우자의 유무와 성별에 따라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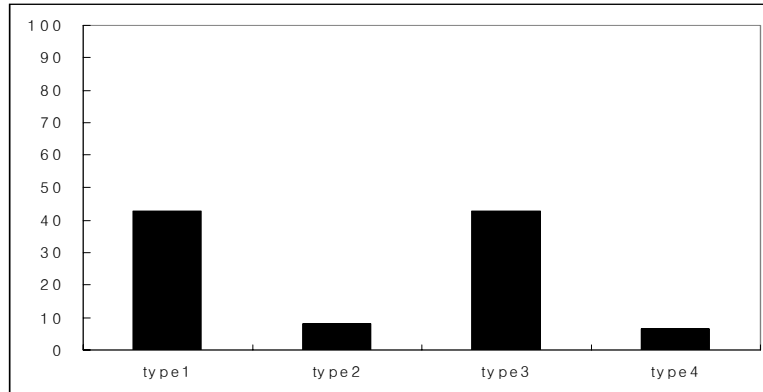
이 자료를 성별과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표 V-16>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V-16〉 유형별 분포-노동패널

유형		빈도(명)	비율(%)
여성	여성이 배우자 있는 경우 (type1)	1,788	42.6
	여성이 배우자 없는 경우 (type2)	344	8.2
남성	남성이 배우자 있는 경우 (type3)	1,789	42.6
	남성이 배우자 없는 경우 (type4)	278	6.6
합계		4,199	100

여성유배우자의 비율은 전체에서 42.6%로 남성유배우자 비율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여성이 8.2%, 남성은 6.6%이었다.

22)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type2),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type4)는 이혼 혹은 사별을 했거나 미혼인 경우이다.



[그림 V-11] 유형별 분포 비율-노동패널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라 그 빈도와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V-17>과 같다. 여성의 경우 가구의 소득이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1,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3.6%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점증구간에 속한 비율이 17.9%, 점감구간 10.9%, 평탄구간 7.6%순이었다. 남성 또한 가구소득이 1,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9.5%로 가장 높았고, 12.9%가 점증구간에 속해있었다.

&lt;표 V-17&gt;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성별	급여구간	빈도	%
여성	점증구간 (0-800만원 미만)	376	17.9
	평탄구간 (800-1,200만원 미만)	159	7.6
	점감구간 (1,200-1,700만원 미만)	229	10.9
	1,700만원 이상	1,333	63.6
남성	점증구간 (0-800만원 미만)	263	12.9
	평탄구간 (800-1,200만원 미만)	130	6.4
	점감구간 (1,200-1,700만원 미만)	227	11.2
	1,700만원 이상	1412	69.5

\* 응답한 가구만 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18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구간 별로 빈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가구소득이 1,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수급조건(자녀 2명 이상, 가구소득이 1,700만원 이하)에 속한 수급자는 비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결과는 <표 V-18>, <표 V-19>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8>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자녀수 분포: 여성-노동패널  
(단위: 명)

급여구간	18세 미만 자녀수		
	0명	1명	2명 이상
점증구간 (0-800만원 미만)	299	34	43
평탄구간 (800-1,200만원 미만)	112	21	26
점감구간 (1,200-1,700만원 미만)	125	48	56
1,700만원 이상	414	362	557

\* 응답한 가구만 대상으로 함.

<표 V-19>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간에 따른 자녀수 분포: 남성-노동패널  
(단위: 명)

급여구간	18세 미만 자녀수		
	0명	1명	2명 이상
점증구간 (0-800만원 미만)	203	26	34
평탄구간 (800-1,200만원 미만)	83	25	22
점감구간 (1,200-1,700만원 미만)	129	45	53
1,700만원 이상	478	373	561

\* 응답한 가구만 대상으로 함.

다음은 각 유형 집단에 대해 연령 및 학력분포를 알아보았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type1)의 경우 30대 37.5%, 40대 29%, 50대 19% 등으로 주로 3, 40대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유배우 남성(type3)의 경우도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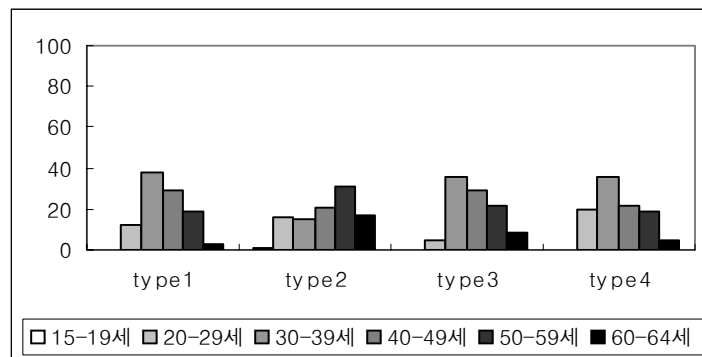
반면 배우자 없는 여성(type2)의 경우 40대가 20.4%, 50대 31.4%, 60대 16.9%로 대부분 4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배우자 없는 남성(type4)은 40대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0>).

〈표 V-20〉 유형별 연령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연령 \ 구분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15-19세	0(0.0)	2(0.6)	0(0.0)	0(0)
20-29세	213(11.9)	55(16.0)	82(4.6)	54(19.4)
30-39세	671(37.5)	51(14.8)	641(35.8)	99(35.6)
40-49세	519(29.0)	70(20.4)	518(29.0)	60(21.6)
50-59세	339(19.0)	108(31.4)	389(21.7)	53(19.1)
60-64세	46(2.6)	58(16.9)	159(8.9)	12(4.3)
합계	1,788(100)	344(100)	1,789(100)	278(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12] 유형별 연령분포 비율-노동패널

각 유형별 학력별 분포는 <표 V-21>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type1)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43.1%로 가장 많고, 2년제 대학 이상의 고학력이 31.3%,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이 25.6%를 차지하고 있다. 유배우 남성(type3)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의 고학력이 44.4%, 고등학교 학력이 37.7%,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이 17.9%로 유배우 집단에서 남성의 학력 다소 높은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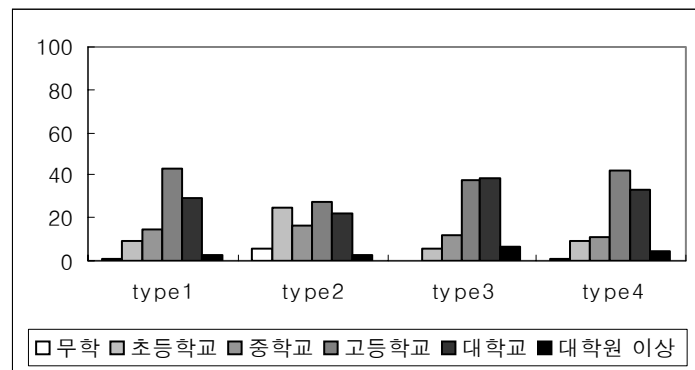
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이 46.8%인데 반해 남성은 20.5%에 불과해 남녀의 학력차이가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V-21〉 유형별 학력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구분 \ 학력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무학	18(1.0)	18(5.2)	7(0.4)	2(0.7)
초등학교	170(9.5)	86(25.0)	100(5.6)	25(9.0)
중학교	270(15.1)	57(16.6)	212(11.9)	30(10.8)
고등학교	770(43.1)	96(27.9)	675(37.7)	118(42.5)
대학교	517(28.9)	76(22.1)	686(38.3)	91(32.8)
대학원 이상	43(2.4)	11(3.2)	109(6.1)	12(4.3)
합계	1,788(100)	344(100)	1,789(100)	278(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13] 유형별 학력분포 비율-노동패널

〈표 V-22〉는 유형별로 거주지와 18세 미만 아동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거주지는 여성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53.4%(type1), 54.1%(type 2)로 그 외의 지역보다 약간 높았고, 남성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18세 미만 아동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배우 여성(type1)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가 37.5%, 1명 25.3%, 2명 37.2%의 분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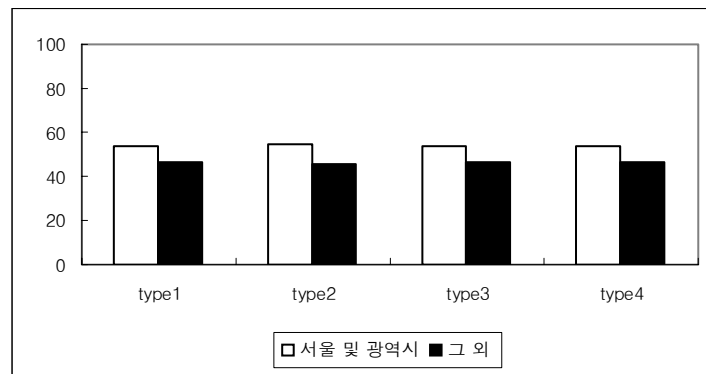


보였으며,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경우 0명인 경우가 86.9%로 대부분이었고 남성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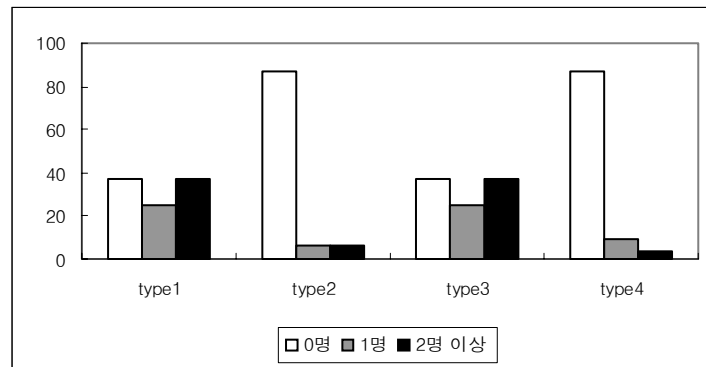
〈표 V-22〉 유형별 거주지역 및 18세 미만 아동수의 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거주지역 \ 구분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서울 및 광역시	954(53.4)	186(54.1)	961(53.7)	150(54.0)
그 외	834(46.6)	158(45.9)	828(46.3)	128(46.0)
18세미만 아동수 \ 구분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0명	670(37.5)	299(86.9)	668(37.3)	241(86.7)
1명	453(25.3)	22(6.4)	454(25.4)	26(9.4)
2명 이상	665(37.2)	23(6.7)	667(37.3)	11(4.0)
합계	1,788(100)	344(100)	1,789(100)	278(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14] 유형별 거주지역 분포 비율-노동패널



[그림 V-15] 유형별 18세 미만 아동수 분포 비율-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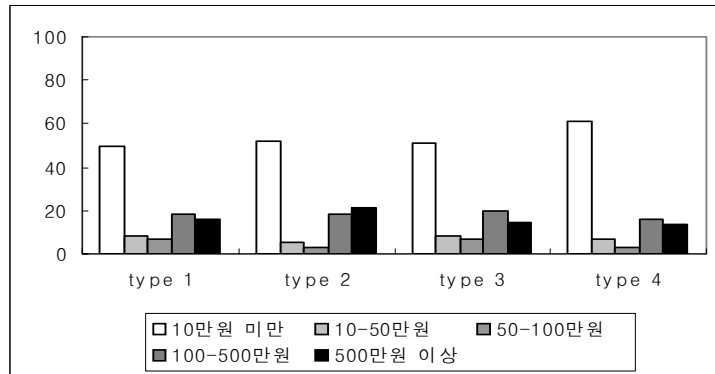
<표 V-23>은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의 분포를 알아본 것이다. 거의 모든 유형에서 가구 비근로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없는 남성의 경우는 6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배우 여성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9.1%, 500만원 이상은 14.7%의 분포를 보였고, 배우자 없는 여성은 500만원 이상이 21.5%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V-23〉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의 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가구의 연비근로소득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10만원 미만	892(49.9)	178(51.7)	964(53.9)	169(60.8)
10-50만원	165(9.2)	19(5.5)	102(5.7)	18(6.5)
50-100만원	128(7.2)	11(3.2)	82(4.6)	8(2.9)
100-500만원	341(19.1)	62(18.0)	339(18.9)	44(15.8)
500만원 이상	262(14.7)	74(21.5)	302(16.9)	39(14.0)
합계	1,788(100)	344(100)	1,789(100)	278(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16] 가구의 연 비근로소득 분포 비율-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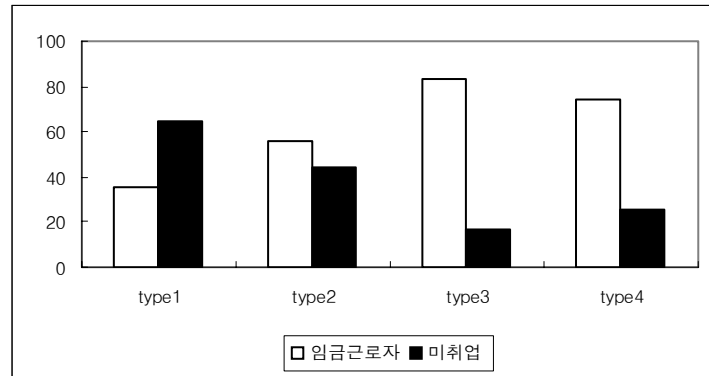
다음으로 취업상태,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분포, 연근로시간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형별 취업상태의 분포는 <표 V-24>와 같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type1)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전체에서 35.3%로 인 반면 유배우 남성(type2)의 경우는 83.2%가 취업상태에 있어서 상당수의 유배우 여성이 가사나 출산 및 양육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경우도 여성은 43.9%가 미취업상태인 반면 남성은 25.9%가 미취업상태로 역시 남성에게 있어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유형별 취업상태 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구분 \ 취업상태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임금근로자	632(35.3)	193(56.1)	1,488(83.2)	206(74.1)
미취업	1,156(64.7)	151(43.9)	301(16.8)	72(25.9)
합계	1,788(100)	344(100)	1,789(100)	278(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17] 유형별 취업상태 분포 비율-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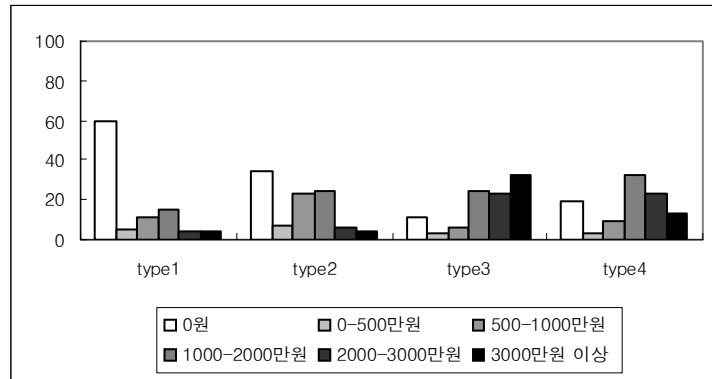
다음은 각 유형별로 연근로소득의 분포를 알아보았다(<표 V-25>). 앞에서 보았듯이 유배우 여성의 경우 대부분 미취업상태인 까닭으로 연근로소득이 없는 여성이 전체에서 60%에 달한다. 연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중에 대부분은 근로소득이 500에서 2,000만원 사이에 분포해 있고, 이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유배우 남성의 경우는 연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체에서 55.2%에 달해 여성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의 경우 연근로소득이 있는 219명 중 약 40%가 1,000만원대의 근로소득을 벌고 있고, 14.6%는 1,000만원 미만, 45.7%는 2천만원 이상을 근로소득을 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25〉 연근로소득 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연근로소득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0원	1,055(59.9)	117(34.7)	203(11.5)	53(19.5)
0-500만원	96(5.5)	24(7.1)	47(2.7)	7(2.6)
500-1000만원	201(11.4)	80(23.7)	110(6.3)	25(9.2)
1000-2000만원	259(14.7)	81(24.0)	428(24.3)	87(32.0)
2000-3000만원	79(4.5)	21(6.2)	405(23.0)	64(23.5)
3000만원 이상	70(4.0)	14(4.2)	567(32.2)	36(13.2)
합계	1,760(100)	337(100)	1,760(100)	272(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18]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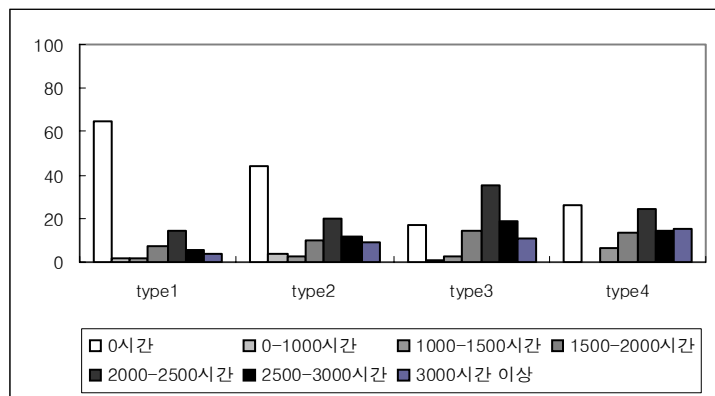
다음은 각 유형별로 연근로시간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미취업자인 까닭으로 근로시간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연근로시간이 2,000-2,500 시간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여성유배우자(type1)의 경우 0시간을 제외한 631명중 41.7%, 여성무배우자(type2)는 193명 중 34.7%, 남성유배우자(type3)는 1,483명중 42.4%, 남성무배우자(type4)는 204명 중 32.4%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50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유배우자(type1)의 경우 26.9%, 여성무배우자(type2)는 37.3%, 남성유배우자(type3)는 35.8%, 남성무배우자(type4)는 40.7%로 남성무배우자가 가장 높았고, 여성유배우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근로를 하는 여성유배우자의 경우 근로와 함께 육아나 가사의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다.

〈표 V-26〉 연근로시간 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연근로시간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0시간	1,156(64.7)	151(43.9)	301(16.9)	72(26.1)
0-1000시간	28(1.6)	11(3.2)	22(1.2)	1(0.4)
1000-1500시간	34(1.9)	9(2.6)	41(2.3)	17(6.2)
1500-2000시간	136(7.6)	34(9.9)	260(14.6)	37(13.4)
2000-2500시간	263(14.7)	67(19.5)	629(35.5)	66(23.9)
2500-3000시간	102(5.7)	40(11.6)	332(18.6)	40(14.5)
3000시간 이상	68(3.8)	32(9.3)	199(11.2)	43(15.6)
합계	1,787(100)	344(100)	1,784(100)	276(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19] 연근로시간 분포 비율-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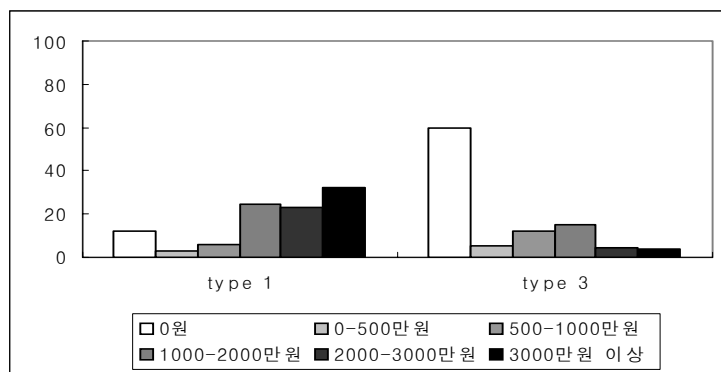
한편 <표 V-27>에서 배우자의 연근로소득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11.6%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59.9%를 차지하였다. 이는 결혼한 주부의 59.9%가 전업주부임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표 V-27〉 배우자 연근로소득 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연배우자근로소득	여성(type1)	남성(type3)
0원	207(11.6)	1072(59.9)
0-500만원	48(2.7)	97(5.4)
500-1000만원	110(6.2)	208(11.6)
1000-2000만원	434(24.3)	263(14.7)
2000-3000만원	416(23.3)	79(4.4)
3000만원 이상	573(32.1)	70(3.9)
합계	1,788(100)	1,789(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20] 배우자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노동패널

마지막으로 연부부합산근로소득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부부합산근로소득의 범주는 EITC의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근로소득의 1700만원을 기준으로 EITC급여체계에 따라 점증구간(0-800만원), 평탄구간(800-1200만원), 점감구간(1200-1700만원), 1700만원 이상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포를 알아보았다. 부부의 합산소득이므로 동일한 분포를 보인 유배우 그룹인 type1과 type3를 제외하고 배우자가 없는 그룹만을 살펴보면 여성무배우자그룹은 80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남성무배우의 경우 800만원 이하는 26.1%에 불과하고, 1,700만원 이상은 46.7%에 달한다.

무배우자상태의 사유가 대부분 이혼 혹은 사별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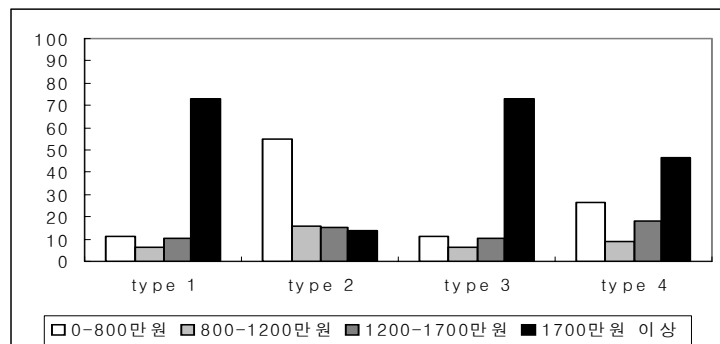
현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EITC제도가 여성 특히 근로를 하지만 빈곤상태에 놓인 무배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보전 및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측면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유배우가구에 있어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27%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V-28〉 부부합산 연근로소득의 분포-노동패널

(단위: 명, %)

부부 합산연근로소득	구분	여성		남성	
		배우자 O (type1)	배우자 X (type2)	배우자 O (type3)	배우자 X (type4)
0-800만원		192(10.9)	184(54.6)	192(10.9)	71(26.1)
800-1200만원		105(6.0)	54(16.0)	105(6.0)	25(9.2)
1200-1700만원		178(10.1)	51(15.1)	178(10.1)	49(18.0)
1700만원 이상		1,285(73.0)	48(14.2)	1,285(73.0)	127(46.7)
합계		1,760(100)	337(100)	1,760(100)	272(100)

\* 괄호 안은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비율



[그림 V-21] 부부합산 연근로소득 분포 비율-노동패널

<표 V-29>와 <표 V-30>, <표 V-31>에서는 지금까지의 사항을 요약하였다.



〈표 V-29〉 노동패널 전체의 일반적 특징

(단위: 명, %)

항목	전체
연령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거주지역	서울 및 광역시
	그 외
18세 미만 아동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가구 연비근로소득	10만원 미만
	10-50만원
	50-100만원
	1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연근로소득	0원
	0-500만원
	500-1000만원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만원 이상
연근로시간	0시간
	0-1000시간
	1000-1500시간
	1500-2000시간
	2000-2500시간
	2500-3000시간
	3000시간 이상
배우자의 연근로소득	0원
	0-500만원
	500-1000만원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만원 이상
부부합산 연근로소득	0-800만원
	800-120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 이상
합계	

〈표 V-30〉 노동패널 여성의 일반적 특징

(단위: 명, %)

항목		여성	
		type1	type2
연령	15-19세	0(0.0)	2(0.6)
	20-29세	213(11.9)	55(16.0)
	30-39세	671(37.5)	51(14.8)
	40-49세	519(29.0)	70(20.4)
	50-59세	339(19.0)	108(31.4)
	60-64세	46(2.6)	58(16.9)
학력	무학	18(1.0)	18(5.2)
	초등학교	170(9.5)	86(25.0)
	중학교	270(15.1)	57(16.6)
	고등학교	770(43.1)	96(27.9)
	2년제 대학	237(13.3)	30(8.7)
	4년제 대학	280(15.7)	46(13.4)
	대학원 이상	43(2.4)	11(3.2)
거주지역	서울 및 광역시	954(53.4)	186(54.1)
	그 외	834(46.6)	158(45.9)
18세 미만 아동수	0명	670(37.5)	299(86.9)
	1명	453(25.3)	22(6.4)
	2명	592(33.1)	21(6.1)
	3명 이상	73(4.1)	2(0.6)
가구 연비근로소득	10만원 미만	892(49.9)	178(51.7)
	10-50만원	165(9.2)	19(5.5)
	50-100만원	128(7.2)	11(3.2)
	100-500만원	341(19.1)	62(18.0)
	500만원 이상	262(14.7)	74(21.5)
연근로소득	0원	1,055(59.9)	117(34.7)
	0-500만원	96(5.5)	24(7.1)
	500-1000만원	201(11.4)	80(23.7)
	1000-2000만원	259(14.7)	81(24.0)
	2000-3000만원	79(4.5)	21(6.2)
	3000만원 이상	70(4.0)	14(4.2)
연근로시간	0시간	1,156(64.7)	151(43.9)
	0-1000시간	28(1.6)	11(3.2)
	1000-1500시간	34(1.9)	9(2.6)
	1500-2000시간	136(7.6)	34(9.9)
	2000-2500시간	263(14.7)	67(19.5)
	2500-3000시간	102(5.7)	40(11.6)
	3000시간 이상	68(3.8)	32(9.3)
배우자의 연근로소득	0원	207(11.6)	-
	0-500만원	48(2.7)	-
	500-1000만원	110(6.2)	-
	1000-2000만원	434(24.3)	-
	2000-3000만원	416(23.3)	-
	3000만원 이상	573(32.1)	-
부부합산 연근로소득	0-800만원	192(10.9)	184(54.6)
	800-1200만원	105(6.0)	54(16.0)
	1200-1700만원	178(10.1)	51(15.1)
	1700만원 이상	1,285(73.0)	48(14.2)
합계		1,788(100)	344(100)

〈표 V-31〉 노동패널 남성의 일반적 특징

(단위: 명, %)

항목		남성	
		type3	type4
연령	15-19세	0(0.0)	0(0)
	20-29세	82(4.6)	54(19.4)
	30-39세	641(35.8)	99(35.6)
	40-49세	518(29.0)	60(21.6)
	50-59세	389(21.7)	53(19.1)
	60-64세	159(8.9)	12(4.3)
학력	무학	7(0.4)	2(0.7)
	초등학교	100(5.6)	25(9.0)
	중학교	212(11.9)	30(10.8)
	고등학교	675(37.7)	118(42.5)
	2년제 대학	233(13.0)	31(11.2)
	4년제 대학	453(25.3)	60(21.6)
	대학원 이상	109(6.1)	12(4.3)
거주지역	서울 및 광역시	961(53.7)	150(54.0)
	그 외	828(46.3)	128(46.0)
18세 미만 아동수	0명	668(37.3)	241(86.7)
	1명	454(25.4)	26(9.4)
	2명	594(33.2)	10(3.6)
	3명 이상	73(4.1)	1(0.4)
가구 연비근로소득	10만원 미만	964(53.9)	169(60.8)
	10-50만원	102(5.7)	18(6.5)
	50-100만원	82(4.6)	8(2.9)
	100-500만원	339(18.9)	44(15.8)
	500만원 이상	302(16.9)	39(14.0)
연근로소득	0원	203(11.5)	53(19.5)
	0-500만원	47(2.7)	7(2.6)
	500-1000만원	110(6.3)	25(9.2)
	1000-2000만원	428(24.3)	87(32.0)
	2000-3000만원	405(23.0)	64(23.5)
	3000만원 이상	567(32.2)	36(13.2)
연근로시간	0시간	301(16.9)	72(26.1)
	0-1000시간	22(1.2)	1(0.4)
	1000-1500시간	41(2.3)	17(6.2)
	1500-2000시간	260(14.6)	37(13.4)
	2000-2500시간	629(35.5)	66(23.9)
	2500-3000시간	332(18.6)	40(14.5)
	3000시간 이상	199(11.2)	43(15.6)
배우자의 연근로소득	0원	1072(59.9)	-
	0-500만원	97(5.4)	-
	500-1000만원	208(11.6)	-
	1000-2000만원	263(14.7)	-
	2000-3000만원	79(4.4)	-
	3000만원 이상	70(3.9)	-
부부합산 연근로소득	0-800만원	192(10.9)	71(26.1)
	800-1200만원	105(6.0)	25(9.2)
	1200-1700만원	178(10.1)	49(18.0)
	1700만원 이상	1,285(73.0)	127(46.7)
합계		1,789(100)	278(100)

### 3. 변수의 설명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한국 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15세 이상 64세 이하<sup>23)</sup>의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의 정책이지만, 여성의 노동공급은 개인단위이므로 가구단위의 정책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근로장려세제가 여성과 남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지역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근로소득(임금)의 대수치, 가구의 18세미만 아동수, 배우자의 근로소득의 대수치, 부부합산근로소득(부부합산근로소득이 연간 1700만원 이하와 1700만원 초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가구의 비근로소득을 사용하였다.<sup>24)</sup>

피설명변수는 노동시장참가여부(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연간총급여액을 사용하였다), 근로시간(연간 총 근로시간의 대수치를 사용하였다)을 사용하였다. 이들 설명변수에 관한 기초통계자료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 가. 한국복지패널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는데, 그 기초 통계치는 <표 V-32>, <표 V-33>, <표 V-3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자료의 평균 연령은 43.5세였는데 유형별로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type 2) 46.2세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type 4)에 40.9세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교육연수에서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3)가 12.5년으로 대학교 중퇴 정도의 가장 고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배우자가 없

23) 분석대상을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임금근로자로 제한한 이유는 이들이 노동공급의 주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24)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의 지원한도가 당해 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가구여야 하므로 부부합산 근로소득 변수를 1,700만원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는 경우(type 2) 9.5년으로 가장 교육연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자료의 연간 근로소득 평균은 1,281만 2천원이었으나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3)에 2,544만 4천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type 1)는 332만 8천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한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유형별 연령 평균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의 주부양자가 남성임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의 경우,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type 1, type 3) 각각 2,402만 8천원, 2,939만 4천원으로 비교적 많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type 2, type 4)는 각각 908만 3천원, 1,464만 3천원에 지나지 않았다. 가구의 연간 비근로소득은 전체 평균 206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아동 수는 전체 평균 0.9명으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유형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type 1, type 3)에 1.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과 남성(type 2, type 4)은 각각 0.5명, 0.3명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1,965.2시간이었으며 각 유형 모두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V-32〉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복지패널 전체

(단위: 명, %)

구분	전체
연령(세)	43.5
교육연수(년)	11.5
근로소득(만원)	1,281.2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원)	1,215.6
부부합산 근로소득(만원)	2,518.8
가구의 비근로소득(만원)	206.3
18세 미만 아동수(명)	0.9
연간 근로시간(시간)	1,965.2

〈표 V-33〉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복지패널 여성

(단위: 명, %)

구분	여성	
	type1	type2
연령(세)	42.7	46.2
교육연수(년)	11.3	9.5
근로소득(만원)	332.8	908.3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원)	2,070.0	-
부부합산 근로소득(만원)	2,402.8	908.3
가구의 비근로소득(만원)	282.3	78.1
18세 미만 아동수(명)	1.0	0.5
연간 근로시간(시간)	1,965.2	1,965.2

〈표 V-34〉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복지패널 남성

(단위: 명, %)

구분	남성	
	type3	type4
연령(세)	44.3	40.9
교육연수(년)	12.5	11.6
근로소득(만원)	2,544.4	1,464.3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원)	394.0	-
부부합산 근로소득(만원)	2,939.4	1,464.3
가구의 비근로소득(만원)	300.5	182.9
18세 미만 아동수(명)	1.0	0.3
연간 근로시간(시간)	1,964.6	1,968.6

#### 나. 한국노동패널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변수의 기초 통계치는 <표 V-35>, <표 V-36>, <표 V-37>에 제시되어있다. 평균연령은 대체로 40세에서 45세 사이에 위치하고, 평균 교육연수는 남성유배우자가 12.8년으로 가장 높고, 여성무배우자가 10.0년으로 가장 낮다. 18세 미만 아동수는 유배우자의 경우 1.0명, 무배우자의 경우 0.2명으로 나타났고, 가구의 비근로소득은 여성무배우자가 평균 434.4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남성무배우자가 267.7만원으로 가장 낮

았다. 평균 연근로소득은 남성유배우자의 경우 2,330만원, 남성무배우자는 1,594만원, 여성유배우자는 532만원, 여성무배우자는 836만원으로 미취업자의 비율이 적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근로시간 역시 남성유배우자가 가장 길고, 여성유배우자가 가장 짧았는데 이 역시 미취업자가 여성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여성무배우자와 남성무배우자를 비교했을 때 평균 연근로소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근로시간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균 연부부합산근로소득은 유배우자는 2,932만원, 여성무배우자는 836만원, 남성무배우자는 1,594만원이다.

〈표 V-35〉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노동패널 전체

(단위: 명, 연, 만원)

구분	전체
연령	43.1
교육연수	12.0
18세미만아동수	0.9
가구비근로소득	395.1
연근로소득	1,348.5
연근로시간	1,245.5
연배우자근로소득	26
연부부합산근로소득	1,309

〈표 V-36〉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노동패널 여성

(단위: 명, 연, 만원)

구분	여성	
	type1	type2
연령	42.2	45.9
교육연수	11.6	10.0
18세미만아동수	1.0	0.2
가구비근로소득	430.6	434.4
연근로소득	532.8	836.1
연근로시간	776.2	1346.8
연배우자근로소득	2,353.0	-
연부부합산근로소득	2,932.6	836.1

〈표 V-37〉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노동패널 남성

(단위: 명, 연, 만원)

구분	남성	
	type3	type4
연령	44.2	40.0
교육연수	12.8	12.2
18세미만아동수	1.0	0.2
가구비근로소득	360.0	267.7
연근로소득	2,330.5	1594.4
연근로시간	2011.8	1835.3
연배우자근로소득	571.7	-
연부부합산근로소득	2,932.6	1594.4

#### 4.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

##### 가. 개요

본 절에서는 복지패널과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노동시장 참가여부와 근로시간으로 대변되는 노동공급함수는 임금을 비롯해 연령, 교육연수, 대도시 거주 여부 등 전통적으로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본 취지인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자녀수, 배우자의 근로소득, 부부합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근로소득을 변수로 추가해 성별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먼저 복지패널과 노동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성별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임금방정식, 노동시장 참가여부,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는데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남녀별로 각각 데이터 셋을 나누어 상기와 같이 방법으로 분석한 후 성별에 대해 효과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각각 성별에 따른 데이터셋을 배우자의 유무 및 배우자의 소득 유무 등으로 나누어 근로소득과 관련한 가구의 형태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남녀별로 배우자가 있는 그룹(앞 장에서의 type1과 type3) 그렇지 않은 그룹(앞 장에서의 type2과 type4)으로 나누고 배우자가 있는 그룹은 다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그룹(group1, group2)과 그렇지 않은 그룹(group3)으로 나누어 총 3개의 그룹별로 제도의 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sup>25)</sup>

그룹에 관하여 부연 설명하면, 여성의 경우 그룹1은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그룹2는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임, 그룹3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를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그룹1은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그룹2는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남성이고 남성이 1차 소득자이면 가장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임, 그룹3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남성, 편부가구나 남성단독가구를 의미한다.

〈표 V-38〉 분석유형 구분(여성)

	그룹의 특징		그룹
여성	배우자가 있는 유형 (type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group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group2
	배우자가 없는 유형(type2)		group3

〈표 V-39〉 분석유형 구분(남성)

	그룹의 특징		그룹
남성	배우자가 있는 유형 (type3)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group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group2
	배우자가 없는 유형(type4)		group3

25) 실증분석에서는 type1은 여성의 그룹1과 그룹2로 분리하였으며, type3을 남성의 그룹1과 그룹2로 분리하였다. type2는 여성의 그룹3, type4는 남성의 그룹3을 나타낸다.

실증분석방법으로는 ‘프로빗 모형’과 ‘2SLS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노동시장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임금을 비롯한 설명변수에 대해 단순 로짓(logit) 또는 프로빗(probit)분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설명변수인 임금이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이므로 단순한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통해 분석된 결과가 불편성과 일치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2단계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연립방정식 모델은 일치성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참가여부를 추정하기위해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고, 근로시간을 추정하기위해 ‘2SLS’를 사용하였다.

#### 나. 한국복지패널의 추정결과

본 절에서는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해 임금함수, 노동시장참가여부(경제활동참가여부), 노동공급시간(근로시간)을 추정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 1) 임금함수 추정결과

먼저 성별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전체집단에 대하여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전체집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교육연수 등 모든 설명변수가 임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일수록 임금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낮아지는 임금함수 추정에서의 전통적인 결과들이 본 분석에서도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V-40>).

여성의 경우는 연령만이 임금을 설명하고 교육연수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남성은 연령과 교육 모두 유의하게 임금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41>, <표 V-42>).

〈표 V-40〉 전체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전체
상수항		-0.5635 (0.4537)
성별더미(여성:1 남성:0)		-1.9553*** (0.0319)
연령		0.1408*** (0.0155)
연령 <sup>2</sup>		-0.0015*** (0.0001)
교육연수		0.1267*** (0.0223)
연령*교육연수		-0.0024*** (0.0004)
$R^2$		0.3911
Adj $R^2$		0.3907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41〉 여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여성
상수항		-0.4075 (0.6803)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0615*** (0.0236)
연령 <sup>2</sup>		-0.0007*** (0.0002)
교육연수		0.0334 (0.0334)
연령*교육연수		0.0007 (0.0007)
$R^2$		0.0060
Adj $R^2$		0.0049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42〉 남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남성
상수항	-0.6293 (0.5701)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1614*** (0.0192)
연령 <sup>2</sup>	-0.0020*** (0.0002)
교육연수	0.0926*** (0.0285)
연령*교육연수	-0.0010* (0.0006)
$R^2$	0.2023
Adj $R^2$	0.201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다음으로 <표 V-43>, <표 V-44>에서는 남녀별 및 그룹별로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유배우자이면서(기혼여성이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집단(그룹1)에 대한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모든 변수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높아지다가 일정한 연령대를 넘어서면 임금이 낮아지는 비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교육연수는 남녀모두 높을수록 유의하게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기혼여성의 경우 교육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집단(그룹2)에 대해서는 연령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경우 여성의 경우 연령제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보인것 외에는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V-43〉 여성의 그룹별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2.5332*** (0.8815)	-0.9625 (1.0343)	1.7627 (1.2957)
연령	0.1149*** (0.0318)	0.0759** (0.0341)	0.0315 (0.0439)
연령 <sup>2</sup>	-0.0009*** (0.0003)	-0.0010*** (0.0003)	-0.00070* (0.0004)
교육연수	0.1211*** (0.0433)	-0.0529 (0.0494)	0.0612 (0.0652)
연령*교육연수	-0.0025*** (0.0009)	0.0009 (0.0009)	-0.0003 (0.0012)
$R^2$	0.0075	0.0302	0.1813
Adj $R^2$	0.0059	0.0249	0.1767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44〉 남성의 그룹별 임금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0.5738 (1.0262)	-1.3661* (0.7365)	2.6180* (1.3910)
연령	0.0753** (0.0350)	0.2198*** (0.0247)	0.0072 (0.0493)
연령 <sup>2</sup>	-0.0007** (0.0003)	-0.0029*** (0.0002)	-0.0005 (0.0005)
교육연수	0.1237** (0.0477)	0.0532 (0.0365)	0.0874 (0.0698)
연령*교육연수	-0.00170* (0.0010)	-0.0004 (0.0007)	-0.0013 (0.0015)
$R^2$	0.0674	0.0674	0.2046
Adj $R^2$	0.0614	0.0614	0.198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유무에 미치는 효과(extensive margin)

다음은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유무에 미치는 효과를 프로빗(probit)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집단, 남녀별 각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V-45>, <표 V-46>, <표 V-47>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참가여부의 의사결정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본인의 임금 및 배우자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노동시장참가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EITC의 효과를 세율인하로 인한 임금상승으로 볼 때, 남녀를 모두 포함한 전체집단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시장참가를 증가시키고자하는 정책목표에 맞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경우 유의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동시에 배우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18세 미만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노동시장참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5〉 전체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전체	
상수항	-3.8811*** (0.9136)	
log(임금)	1.8357*** (0.5384)	
성별더미(여성:1 남성:0)	1.4941** (0.7598)	
연령	-0.0265 (0.0498)	
연령 <sup>2</sup>	0.0003 (0.0007)	
교육연수	0.0210 (0.0156)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1565*** (0.0513)	
18세미만아동수	0.2060** (0.0833)	
log(배우자임금)	0.3975*** (0.1481)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4331** (0.1976)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근로장려세제 제도시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주로 2차 소득자이며,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다면 일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46>, <표 V-47>).

〈표 V-46〉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여성
상수항	-3.3391*** (0.9355)
log(임금)	2.4092* (1.3893)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0731 (0.1307)
연령 <sup>2</sup>	0.0011 (0.0018)
교육연수	0.0361 (0.0408)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2330 (0.1499)
18세미만아동수	0.4656 (0.3575)
log(배우자임금)	0.8344 (0.5121)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7545 (0.483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47〉 남성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남성
상수항	-5.5989 (23.843)
log(임금)	3.8547 (14.305)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1718 (0.6735)
연령 <sup>2</sup>	0.0023 (0.0109)
교육연수	0.0402 (0.1612)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1608 (0.4641)
18세미만아동수	0.0020 (0.2915)
log(배우자임금)	0.1043 (0.3067)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1.1348 (5.852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다음으로 성별 및 가구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표 V-48>, <표 V-49>).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유배우 여성(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참가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EITC의 효과를 세율인하로 인한 실질소득의 증가로 볼 때, EITC 제도의 실시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그룹은 남성인 배우자의 임금이 높을수록 오히려 여성의 근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합산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취지가 가장 잘 반영되는 그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중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거나(그룹2), 편모가구(그룹3)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근로장려세제는 경

제활동참가와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EITC제도의 실시로 인해 기혼여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성이 구주 홀벌이 가구내의 여성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룹1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수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근로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18세 미만의 아동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에 적용되는 EITC제도가 동 그룹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성의 그룹1과 그룹3은 대도시에 사는 여성일수록 근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모든 그룹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남성에게는 노동공급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48〉 여성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6.9497*** (2.3151)	-13.2251 (12.7523)	-2.3389 (2.6554)
log(임금)		1.4301*** (0.4718)	-8.2480 (12.2836)	0.7931 (1.5480)
연령		0.0420 (0.0582)	0.7172 (0.8261)	0.0467 (0.0638)
연령 <sup>2</sup>		-0.0006 (0.0007)	-0.0080 (0.0094)	-0.0008 (0.0011)
교육연수		-0.0225 (0.0166)	-0.1229 (0.1581)	0.0044 (0.0426)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979** (0.0493)	-0.3254 (0.5071)	0.2558*** (0.0752)
18세미만아동수		0.1926** (0.0976)	0.2643 (0.3807)	0.1174 (0.2391)
log(배우자임금)		1.8992* (1.0416)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6110** (0.2539)	8.3227 (11.4781)	-0.0092 (0.6110)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49〉 남성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11.3510 (7.9595)	135.2412 (7872.8)	-7.7656 (47.5861)
log(임금)	-1.6962 (2.0192)	-149.523 (8773.6)	3.0170 (16.0676)
연령	-0.1446 (0.1160)	13.2908 (780.46)	0.0127 (0.0934)
연령 <sup>2</sup>	0.0007 (0.0012)	-0.1888 (11.053)	0.0005 (0.0056)
교육연수	0.0174 (0.0354)	-2.0010 (117.83)	0.0034 (0.2126)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1125 (0.1057)	-3.7023 (221.65)	0.1381 (1.3696)
18세미만아동수	-0.0101 (0.1340)	-1.7245 (104.41)	-0.0343 (1.3577)
log(배우자임금)	-0.9639 (0.9351)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1.0165 (0.7771)	62.8502 (3602.0)	-0.6091 (5.9465)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여성의 그룹2와 그룹3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효과가 적은 이유가 고 연령층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여 대상연령을 15세부터 55세<sup>26)</sup>까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표 V-50>). 그 결과 상기의 15세부터 64세까지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와 추정계수의 부호가 거의 유사하였다. 그룹1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유배우 여성(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참가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26)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평균은퇴연령을 계산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남성의 평균은퇴연령은 약63세, 여성의 경우 약55세로 계산되었다(전병힐, 2008).

나타났으며, 그룹2와 그룹3의 경우는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경제활동참가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그룹1의 경우 부부의 합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경제활동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2의 경우는 연령, 대도시거주여부, 18세미만아동수가 경제활동참가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51>).

〈표 V-50〉 여성의 그룹별 경제활동참가 추정결과-복지패널:15-55세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6.279842*** (2.342968)	-8.897515* (5.060726)	10.49862 (20.95425)
log(임금)		0.9026017** (0.3734434)	-1.554868 (5.110881)	-3.238093 (7.226106)
연령		0.2038389*** (0.0469529)	0.3942773 (0.3616457)	-0.1892117 (0.3827001)
연령 <sup>2</sup>		-0.0026486*** (0.0005813)	-0.0043265 (0.0042044)	0.0015002 (0.0039724)
교육연수		-0.0128975 (0.0172284)	-0.0277124 (0.1049155)	0.1099879 (0.2397233)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314696 (0.0418396)	-0.2834171 (0.5348062)	0.0579283 (0.3201207)
18세미만아동수		0.0543337 (0.0724743)	0.2021167 (0.2505677)	0.8439662 (1.233622)
log(배우자임금)		0.7090035 (0.8575956)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3043083 (0.2004643)	2.000307 (4.70838)	1.536536 (2.59037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51〉 남성의 그룹별 경제활동참가 추정결과-복지패널:15-55세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30.47327* (17.37183)	2.467518 (2.992626)	4.431377 (19.71108)
log(임금)		-5.407596 (3.76724)	1.128653 (1.470977)	-2.750062 (17.46553)
연령		-0.5720416 (0.4146962)	-0.2555685** (0.1066883)	0.3151339 (1.958844)
연령 <sup>2</sup>		0.0055979 (0.0048216)	0.0027981** (0.0013893)	-0.0057261 (0.0336639)
교육연수		0.041532 (0.081142)	0.0230279 (0.0237797)	-0.104607 (0.3758459)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2367152 (0.2034837)	0.1312838** (0.061244)	-0.2621381 (0.5958752)
18세미만아동수		0.248063 (0.2832442)	0.1571306** (0.0674809)	0.4101815 (1.36455)
log(배우자임금)		-1.947398 (1.394986)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2.322825* (1.376465)	0.1069051 (0.5210871)	1.492667 (5.98937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3)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효과(intensive margin)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2SLS방법을 이용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표 V-52〉, 〈표 V-53〉, 〈표 V-54〉). 근로시간에 대한 성별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녀를 각각 나누어서 추정한 결과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근로시간과의 관계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를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한 세율인하의 효과로 연간 임금이 1%증가하면, 근로시간이 연간 121시간 늘어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표 V-52>).

또한 임금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18세 미만 아동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반면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집단의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2〉 전체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전체
상수항	-1.0100* (0.5609)
log(임금)	1.2143*** (0.3292)
성별더미(여성:1 남성:0)	0.6507 (0.4651)
연령	0.0119 (0.0306)
연령 <sup>2</sup>	-0.0002 (0.0004)
교육연수	0.0040 (0.0095)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837*** (0.0316)
18세미만아동수	0.0917* (0.0511)
log(배우자임금)	0.2057** (0.0906)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2120* (0.121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53〉 여성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여성
상수항		-1.2592* (0.6518)
log(임금)		1.7977* (0.9641)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0258 (0.0911)
연령 <sup>2</sup>		0.0004 (0.0012)
교육연수		0.0198 (0.0285)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1568 (0.1041)
18세미만아동수		0.2935 (0.2483)
log(배우자임금)		0.5685 (0.3554)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5179 (0.3356)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54〉 남성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남성
상수항		11.544 (39.583)
log(임금)		-5.7923 (23.780)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3075 (1.1209)
연령 <sup>2</sup>		-0.0052 (0.0181)
교육연수		-0.0739 (0.2655)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1777 (0.7723)
18세미만아동수		0.1432 (0.4838)
log(배우자임금)		-0.1060 (0.5095)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2.7156 (9.7287)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다음으로 남녀 각각에서 그룹별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V-55〉, 〈표 V-56〉).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유배우 여성(그룹 1)의 경우 즉, 맞벌이 여성의 경우 본인의 임금과 배우자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즉,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한 세율인하의 효과로 연간 임금이 1%증가하면, 근로시간이 연간 138시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V-55〉 참조).

그러나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부부합산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근로를 줄임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일수록 근로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그룹3) 즉, 편모가구와 미혼가구내 여성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근로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집단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남성 집단 모두(즉,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 근로소득이 본인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나, 맞벌이 가구의 남성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효과가 맞벌이 가구 내 여성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본인의 소득을 공동 소비하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할 때, 배우자 소득의 증가는 통상 본인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배우자 소득의 크기에 더욱 탄력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증가가 맞벌이 남성 본인에겐 근로시간 감소로, 맞벌이 여성 본인에겐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한 자료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EITC의 효과에서 볼 때, 가구단위의 정책집행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성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책적 요구에 제도가 맞추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표 V-55〉 여성 그룹별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4.7675** (2.1241)	-4.4547 (5.5960)	-0.2468 (1.6334)
log(임금)		1.3880*** (0.4378)	-3.2150 (5.4379)	0.7889 (0.9400)
연령		0.0560 (0.0553)	0.2953 (0.3638)	0.0302 (0.0393)
연령 <sup>2</sup>		-0.0008 (0.0006)	-0.0033 (0.0041)	-0.0005 (0.0007)
교육연수		-0.0235 (0.0158)	-0.0534 (0.0700)	0.0025 (0.0265)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896* (0.0467)	-0.1423 (0.2249)	0.1640*** (0.0479)
18세미만아동수		0.1717* (0.0916)	0.1117 (0.1686)	0.0834 (0.1462)
log(배우자임금)		1.6115* (0.9678)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5507** (0.2356)	3.6515 (5.0815)	-0.0424 (0.3689)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56〉 남성 그룹별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복지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4.9979* (2.8297)	-49.5419 (5.5960)	-7.3595 (48.6339)
log(임금)		-0.4492 (0.7927)	56.9661 (5.4379)	3.5089 (16.4144)
연령		0.0202 (0.0455)	-5.0207 (0.3638)	-0.0029 (0.0960)
연령 <sup>2</sup>		-0.0006 (0.0005)	0.0708 (0.0041)	0.0009 (.0.0057)
교육연수		0.0178 (0.0188)	0.7618 (0.0700)	0.0163 (0.2185)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411 (0.0477)	1.4710 (0.2249)	0.2113 (1.3980)
18세미만아동수		-0.0107 (0.0587)	0.6815 (0.1686)	-0.1350 (1.3860)
log(배우자임금)		-0.6768* (0.3745)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4671 (0.3037)	-23.0278 (5.0815)	-0.9300 (6.074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또한 여성의 그룹2와 그룹3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효과가 없는 이유가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여 대상연령을 15세부터 55세까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표 V-57>). 그 결과 상기의 15세부터 64세까지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와 추정계수의 부호가 거의 유사하였다. 그룹1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유배우 여성(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2와 그룹3의 경우는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근로시간이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15-64세까지 분석한 결과와 달리 그룹2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2는 남성이 기

혼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이며 실제 가장 많은 표본을 차지하고 있다. 15-64세의 결과와 비교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남성가장가구의 근로시간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표 V-58>).

〈표 V-57〉 여성의 근로시간 추정결과-복지패널:15-55세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3.59063* (2.086388)	-1.86123 (1.808822)	7.849488 (13.27606)
log(임금)	0.8349715** (0.3410363)	-0.0525946 (2.065446)	-1.740803 (4.577081)
연령	0.1982027*** (0.0447369)	0.108936 (0.1365417)	-0.1192773 (0.2427617)
연령 <sup>2</sup>	-0.0025418*** (0.0005519)	-0.0011574 (0.0015943)	0.0009454 (0.002523)
교육연수	-0.0117998 (0.0165477)	-0.003403 (0.0434855)	0.0658505 (0.1517985)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197271 (0.0396215)	-0.1021992 (0.2176429)	0.0368218 (0.2025592)
18세미만아동수	0.0366228 (0.0685586)	0.0812429 (0.1032916)	0.546391 (0.781721)
log(배우자임금)	0.3646953 (0.7875065)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2331474 (0.1835308)	0.6621086 (1.905138)	0.9229765 (1.64014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58〉 남성의 그룹별 근로시간 추정결과-복지패널:15세-55세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5.785418* (3.463519)	0.7250729 1.387749	3.47051 9.539204
log(임금)		-0.442909 (0.8420277)	1.487496** 0.6272591	-0.9335456 8.445338
연령		-0.0331825 (0.0844707)	-0.1056221** 0.0425033	0.1432455 0.9468392
연령 <sup>2</sup>		0.0000631 (0.0010196)	0.0011699** 0.0005568	-0.0026823 0.0162726
교육연수		0.0151784 (0.0221038)	-0.0011604 0.0099127	-0.0601931 0.1811826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440984 (0.0491902)	0.0357364 0.025922	-0.1230916 0.2896326
18세미만아동수		0.0389958 (0.0674122)	0.0515994 0.0314377	0.2177259 0.6609343
log(배우자임금)		-0.5537367* (0.3254118)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4117787 (0.306612)	-0.1771055 0.2229907	0.6872895 2.8954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다. 한국노동패널의 추정결과

다음으로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임금함수, 노동시장참가여부, 노동공급시간 등을 추정하였다.

### 1) 임금함수 추정결과

먼저 성별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전체집단에 대해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분석한 복지패널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

별, 연령, 교육연수 등 모든 설명변수가 임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일수록 임금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낮아지는 임금함수 추정에서의 전통적인 결과들이 본 분석에서도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V-59>).

〈표 V-59〉 전체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전체
상수항	-3.3673** (1.4955)
성별더미(여성:1 남성:0)	-3.6407*** (0.0962)
연령	0.5688*** (0.0515)
연령 <sup>2</sup>	-0.0060*** (0.0005)
교육연수	0.4011*** (0.0718)
연령*교육연수	-0.0076*** (0.0015)
$R^2$	0.3135
Adj $R^2$	0.3127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그러나 남녀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모든 설명변수가 임금을 유의하게 설명한 반면, 남성은 연령만 유의하게 임금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0>, <표 V-61>).

〈표 V-60〉 여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여성
상수항	-9.8827*** (2.5831)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4755*** (0.0922)
연령 <sup>2</sup>	-0.0044*** (0.0009)
교육연수	0.5483*** (0.1228)
연령*교육연수	-0.0111*** (0.0026)
$R^2$	0.0270
Adj $R^2$	0.025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61〉 남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남성
상수항	-5.6492*** (1.6993)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5991*** (0.0586)
연령 <sup>2</sup>	-0.0074*** (0.0005)
교육연수	0.1231 (0.0811)
연령*교육연수	-0.0011 (0.0017)
$R^2$	0.2016
Adj $R^2$	0.2000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유배우 여성(그룹1)(즉, 맞벌이 가구의 여성)의 경우 앞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모든 설명변수가 유의하게 임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그룹1)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없는 남성(그룹2)(즉, 홀벌이 가구 내 남성)은 교육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대부분의 그룹에서 연령은 유의하게 선형 혹은 비선형으로 임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2〉 여성 그룹별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13.4650*** (3.3700)	-5.8210 (8.7444)	-3.0564 (4.5313)
연령	0.5763*** (0.1256)	0.4754 (0.2912)	0.4830** (0.1514)
연령 <sup>2</sup>	-0.0052*** (0.0012)	-0.0054** (0.0026)	-0.0065*** (0.0014)
교육연수	0.6257*** (0.1591)	0.3973 (0.3975)	0.1776 (0.2306)
연령*교육연수	-0.0120*** (0.0036)	-0.0107 (0.0075)	-0.0038 (0.0044)
$R^2$	0.0218	0.1572	0.2698
Adj $R^2$	0.0193	0.1402	0.2610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63〉 남성 그룹별 임금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2.4655 (3.2271)	-8.4854*** (2.2249)	3.1389 (5.0190)
연령		0.4569*** (0.1124)	0.7388*** (0.0765)	0.2431 (0.1805)
연령 <sup>2</sup>		-0.0060*** (0.0010)	-0.0087*** (0.0007)	-0.0041** (0.0017)
교육연수		0.0304 (0.1456)	0.1811* (0.1080)	-0.1140 (0.2474)
연령*교육연수		0.0017 (0.0031)	-0.0030 (0.0021)	0.0032 (0.0055)
$R^2$		0.1567	0.2942	0.0834
Adj $R^2$		0.1518	0.2915	0.0697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유무에 미치는 효과(extensive margin)

다음은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probit 분석을 하였다.

전체집단 및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거의 유사하였다. 본인의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참가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시장참가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집단에 있어 배우자 근로소득이나 부부합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부합산소득, 거주지역 등은 개인의 노동시장참가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복지패널자료의 분석결과와 다른 점이다. 오직 18세 미만 아동 수 및 본인의 임금액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참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4>).

〈표 V-64〉 전체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전체
상수항	-1.9961*** (0.7108)
log(임금)	0.5770*** (0.1334)
성별더미(여성:1 남성:0)	0.3720 (0.4315)
연령	-0.0425 (0.0776)
연령 <sup>2</sup>	0.0006 (0.0010)
교육연수	-0.0141 (0.0140)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239 (0.0612)
18세미만아동수	0.1782*** (0.0678)
log(배우자임금)	0.0199 (0.0196)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0089 (0.011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주로 2차 소득자이며,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시장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65>, <표 V-66>). 18세 미만 아동 수 및 본인의 임금액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참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5〉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여성
상수항		-3.7015*** (0.9827)
log(임금)		0.5418*** (0.1289)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0510 (0.0753)
연령 <sup>2</sup>		-0.0004 (0.0010)
교육연수		-0.0151 (0.0193)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258 (0.0822)
18세미만아동수		0.2413** (0.1221)
log(배우자임금)		0.0248 (0.0286)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0285 (0.0196)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66〉 남성의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남성
상수항	3.1380 (5.8065)
log(임금)	1.0357 (1.5986)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4356 (0.8449)
연령 <sup>2</sup>	0.0052 (0.0107)
교육연수	-0.0303 (0.0877)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874 (0.1140)
18세미만아동수	0.0700 (0.1835)
log(배우자임금)	0.0248 (0.0309)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0250 (0.1140)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다음은 여성 집단 전체를 배우자의 유무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유무로 나누어 그룹별로 분석을 실시하고, 그룹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룹1은 여성이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이다. 즉,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맞벌이 가구내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2는 여성이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기혼이면서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 가구 내 가장인 여성을 의미한다. 그룹3은 편모가구이거나 미혼인 가구의 여성이다.

<표 V-67>, <표 V-68>는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의 probit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일하는 그룹(그룹1)은 18세미만의 아동수가 많을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가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모가구인 경우는 복지패널의 결과와 달리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가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과 달리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참가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TC제도의 대상이 되는 요건이 부부합산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과 18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ITC제도가 자녀수가 많은 저소득 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반면 배우자의 임금이나 연령, 교육연수 등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여성(그룹2)의 경우는 노동시장참가를 연령만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이 주소득자인 가구내의 여성, 즉 기혼여성이면서 홀벌이인 여성가장에게는 근로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표 V-67〉 여성 그룹별 노동시장참가 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8.5406*** (2.1630)	-9.3205*** (3.3872)	-2.8930** (1.2876)
log(임금)		0.6811*** (0.2119)	-0.1825 (0.4122)	0.5374** (0.2305)
연령		0.0561 (0.1196)	0.3377** (0.1517)	0.0461 (0.0671)
연령 <sup>2</sup>		-0.0007 (0.0015)	-0.0038** (0.0018)	-0.0004 (0.0009)
교육연수		-0.0468 (0.0426)	0.0376 (0.0652)	-0.0143 (0.0408)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325 (0.1098)	0.2613 (0.3852)	0.1398 (0.1957)
18세미만아동수		0.3106* (0.1673)	0.0505 (0.2925)	-0.0108 (0.1882)
log(배우자임금)		0.6291 (0.4361)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2308** (2.1630)	0.5951 (0.3776)	-0.1276 (0.144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68〉 남성 그룹별 노동시장참가여부 분석결과(프로빗분석)-노동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1: 임금근로자 0: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5.4413 (10.1140)	-1.6783 (4.9102)	2.9359 (2.9391)
log(임금)		1.2875 (1.6897)	0.0928 (0.6316)	-0.2957 (3.2670)
연령		-0.3386 (0.3803)	0.1775 (0.4642)	0.0279 (0.8949)
연령 <sup>2</sup>		0.0039 (0.0046)	-0.0026 (0.0058)	-0.0011 (0.0129)
교육연수		0.0077 (0.0732)	-0.0033 (0.0428)	0.0116 (0.3200)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1560 (0.2562)	0.0998 (0.1400)	-0.1002 (0.5238)
18세미만아동수		0.1350 (0.1671)	-0.0561 (0.1163)	0.8810 (1.4431)
log(배우자임금)		0.5870 (0.7281)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6024 (1.0751)	0.0048 (0.0831)	0.0979 (0.8129)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여성의 그룹2와 그룹3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경제활동참가가 무관한 이 유가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대상연령을 15세부터 55세까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표 V-69>). 그 결과 상기의 15세부터 64세까지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와 추정계수의 부호가 거의 유사하였다. 그룹1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유배우 여성(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참가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2와 그룹3의 경우는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경제활동참가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도 상기의 15세부터 64세까지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와 추정계수의 부호가 거의 유사하였다(<표 V-70>).

〈표 V-69〉 여성의 그룹별 경제활동참가 추정결과-노동패널:15-55세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9.03562*** (2.353976)	-7.40943 (5.232993)	0.3711076 (3.439061)
log(임금)	0.674188*** (0.1886547)	0.5145781 (0.4242338)	1.108097 (0.9616863)
연령	0.0754197 (0.1156226)	0.2969499 (0.290208)	-0.2202564 (0.3075413)
연령 <sup>2</sup>	-0.0009257 (0.0014231)	-0.0032909 (0.0037896)	0.0033628 (0.0044092)
교육연수	-0.0477118 (0.040944)	-0.1308203 (0.1010405)	-0.1325442 (0.1785322)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317671 (0.1096709)	-0.075898 (0.4239112)	0.5397692 (0.6299668)
18세미만아동수	0.2963914** (0.1504292)	0.0538881 (0.3765522)	0.2553716 (0.4873345)
log(배우자임금)	0.6565607 (0.4088632)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2346781** (0.1004193)	0.0057335 (0.3428294)	-0.4108469 (0.4747576)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70〉 남성의 그룹별 경제활동참가 추정결과-노동패널:15-55세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67.24397 (285.9327)	0.1764361 (3.046518)	2.286933 (3.400744)
log(임금)		-12.10519 (55.91132)	0.3723341 (0.7147037)	0.8528557 (0.5875237)
연령		2.80997 (14.21325)	0.0087495 (0.2228642)	-0.2445498 (0.2532391)
연령 <sup>2</sup>		-0.0348593 (0.1752408)	-0.0006142 (0.0027145)	0.0028903 (0.0033991)
교육연수		0.7637487 (3.237669)	-0.0411532 (0.0712965)	-0.0926102 (0.0827947)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7378704 (2.367962)	0.0565257 (0.1639188)	-0.2581146 (0.3081201)
18세미만아동수		1.02779 (3.604003)	-0.0253576 (0.1081491)	0.4066301 (0.4130689)
log(배우자임금)		-5.422457 (25.36854)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8.19607 (36.84765)	-0.0555399 (0.0505993)	-0.1911472 (0.123033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3)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효과(intensive margin)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SLS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별 더미변수가 근로시간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은 증가하였지만 특히 하계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임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한 세율인하의 효과로 연간 임금이 1%증가하면, 근로시간이 연간 92시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V-72>).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에게는 근로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전체집단과 여성 집단에 있어서 부부합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 노동공급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남성이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V-71〉 전체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전체
상수항		-0.3309 (0.8365)
log(임금)		0.9232*** (0.1541)
성별더미(여성:1 남성:0)		-0.0791 (0.5026)
연령		0.0442 (0.0904)
연령 <sup>2</sup>		-0.0005 (0.0012)
교육연수		-0.0289* (0.0161)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201 (0.0714)
18세미만아동수		0.1252 (0.0787)
log(배우자임금)		0.0036 (0.0225)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0350** (0.0136)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72〉 여성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여성
상수항		-3.0364 (1.2304)
log(임금)		0.9791*** (0.01617)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1286 (0.0960)
연령 <sup>2</sup>		-0.0013 (0.0013)
교육연수		-0.0247 (0.0232)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308 (0.1094)
18세미만아동수		0.2815* (0.1563)
log(배우자임금)		0.0017 (0.0359)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0536** (0.025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73〉 남성의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남성
상수항	-1.3659 (9.0297)
log(임금)	-0.6484 (2.4534)
성별더미(여성:1 남성:0)	-
연령	0.6700 (1.3007)
연령 <sup>2</sup>	-0.0089 (0.0164)
교육연수	0.0589 (0.1379)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1017 (0.1762)
18세미만아동수	0.2740 (0.2824)
log(배우자임금)	-0.0058 (0.0463)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1.1025 (0.172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다음은 남녀 각각 그룹별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V-74>, <표 V-75>).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유배우 여성(그룹1)의 경우 즉, 맞벌이 가구 내 여성의 경우 본인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동일 그룹의 여성 중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여성은 부부합산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한 세율인하의 효과로 연간 임금이 1%증가하면, 근로시간이 연간 111시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V-74> 참조).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둔 여성의 경우(그룹2)는 연령만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그룹3), 본인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 내 여성의 경우와 편모가구의 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여성가장인 가구인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와 근로시간의 관계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가구 내 근로하는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자료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패널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세제가 남성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주요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가 복지급여대신 취업을 하도록 유인하는데 기여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의 특성이 다름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V-74〉 여성 그룹별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7.6656*** (2.6207)	-9.6928*** (3.1632)	-0.8768 (1.8988)
log(임금)		1.1156*** (0.2576)	0.2928 (0.3814)	1.0221*** (0.3344)
연령		0.1549 (0.1460)	0.4526*** (0.1394)	0.0516 (0.1036)
연령 <sup>2</sup>		-0.0027 (0.0018)	-0.0049*** (0.0016)	-0.0005 (0.0014)
교육연수		-0.0517 (0.0508)	0.0073 (0.0536)	-0.0286 (0.0571)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469 (0.1405)	0.2609 (0.3253)	0.2190 (0.2965)
18세미만아동수		0.3620* (0.2055)	0.2131 (0.2573)	0.0348 (0.2881)
log(배우자임금)		0.5135 (0.5322)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2373* (0.1316)	0.5567 (0.3398)	-0.1108 (0.2077)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75〉 남성 그룹별 근로시간(노동공급함수)추정결과-노동패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근로시간)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11.8125 (11.466)	-3.1027 (5.8283)	6.8320*** (3.2436)
log(임금)		-0.5012 (1.9118)	0.0135 (0.7269)	0.2388 (3.5001)
연령		0.0937 (0.4301)	0.5589 (0.5417)	-0.0653 (0.9621)
연령 <sup>2</sup>		-0.0014 (0.0052)	-0.0075 (0.0067)	-0.00003 (0.0138)
교육연수		0.0630 (0.0879)	0.0125 (0.0538)	-0.0089 (0.3407)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4023 (0.2856)	0.0978 (0.1571)	-0.1115 (0.5485)
18세미만아동수		0.2719 (0.1859)	-0.1240 (0.1359)	0.8312 (1.5238)
log(배우자임금)		-0.4279 (0.8236)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8240 (1.2229)	0.1100 (0.0975)	0.0740 (0.874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또한 여성의 그룹2와 그룹3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근로시간의 관계가 무관한 이유가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여 대상연령을 15세부터 55세까지로 한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표 V-76>). 그룹1과 그룹2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유배우 여성(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3의 경우는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근로시간이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15-64세까지 분석한 결과와 달리 그룹3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77>).

〈표 V-76〉 여성의 근로시간 추정결과-노동패널:15-55세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여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9.237743*** (3.104779)	-9.934035** (4.829506)	4.574291 (6.016963)
log(임금)		1.166319*** (0.2507216)	0.7941491** (0.3739418)	2.160081 (1.675018)
연령		0.1790262 (0.1571187)	0.507045* (0.263362)	-0.4203324 (0.5418309)
연령 <sup>2</sup>		-0.0021018 (0.0019386)	-0.0055519 (0.0033895)	0.0062839 (0.0077723)
교육연수		-0.0653424 (0.0541009)	-0.0975966 (0.0699613)	-0.2611359 (0.3107324)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0602635 (0.148322)	0.0230076 (0.3639686)	0.9517344 (1.086)
18세미만아동수		0.3745461 (0.201856)	0.1515441 (0.3186263)	0.516351 (0.8603044)
log(배우자임금)		0.6664654 (0.547947)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0.2743333** (0.1342203)	0.1167561 (0.3130563)	-.6732204 (0.8272036)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V-77〉 남성의 그룹별 근로시간 추정결과-노동패널:15-55세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log(임금) Coefficient(Std. Err.)		
		남성		
		group1	group2	group3
상수항		33.89303 (111.313)	2.503609 (3.674158)	5.907691 (3.991969)
log(임금)		-3.92189 (21.59013)	1.978825 (2.153328)	1.28136* (0.6599828)
연령		0.7098612 (5.454967)	-0.3892061 (0.6576819)	-0.2983595 (0.2838257)
연령 <sup>2</sup>		-0.0089983 (0.0671776)	0.0042338 (0.0081224)	0.0034024 (0.0038203)
교육연수		0.265186 (1.242474)	-0.1338716 (0.1466725)	-0.1042758 (0.0929075)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0.4814083 (0.7871846)	0.0492476 (0.1895075)	-0.2047683 (0.3571565)
18세미만아동수		0.5931283 (1.323337)	0.0120447 (0.1368677)	0.3923016 (0.4477297)
log(배우자임금)		-1.986214 (9.841221)	-	-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3.103834 (14.32935)	0.0668671 (0.1301159)	-0.1970109 (0.137258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5. 소결

이상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 정책이지만 정책의 효과분석은 가구 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단위 정책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임금, 노동시장 참가유무, 근로시간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노동시장참가유무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나 편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에는 중립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분석의 대상을 15세에서 55세까지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편모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했다는 다수의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대도시거주여부, 18세미만의 아동 수, 배우자의 임금 등은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임금이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1% 증가할 때, 연간근로시간이 약 138시간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나 편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에는 중립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 또한 편모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했다는 다수의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를 줄임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대도시거주여부, 18세미만의 아동 수, 배우자의 임금 등은 맞벌이 가구 여성

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경제활동참가의 측면에서 남성의 노동공급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도 남성의 경우는 남성의 근로시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연령을 15세부터 55세까지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그룹2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2는 남성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이며 실제 가장 많은 표본을 차지하고 있다. 15-64세의 결과와 비교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남성이 가장가구의 근로시간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노동시장참가유무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과 그룹3(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인 그룹2에는 중립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룹3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국복지패널과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여성가장인 경우는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18세미만의 아동 수, 부부합산소득1700만원여부 등은 말벌이 가구 여성 및 편모 또는 단독여성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우,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과 그룹3(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의 근로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인 그룹2에는 중립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룹3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국복지패널과 다른 결과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말벌이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7)</sup> 이는 저소득층이 샘플링이

27)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경우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부부합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말벌이 가구의 여성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를 줄임으로서 기초생

많이 된 한국복지패널과 도시간계조사를 원자료로 샘플링한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의 차이라고 보여 진다. 이 밖에 18세미만의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가구 여성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경제활동참가의 측면에서 남성의 노동공급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도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15-55세까지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그룹3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내용을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복지패널과 노동패널의 결과를 <표 V-78>와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 측면에서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의 탄력성의 정도가 복지패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패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여부를 결정하는 데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8>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의 경제활동참가 비교

구분	복지패널 전체	노동패널 전체
근로장려세제시행시	근로장려시행시 경제활동참가(1.8357***)	근로장려시행시 경제활동참가증가(0.5770***)
성별차이	경제활동참가에 성별차이있음 (전반적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참가)(1.4941**)	X
대도시거주여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0.1565***)	X
18세미만아동수	18세미만 아동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0.2060**)	18세미만 아동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증가(0.1782***)
배우자임금의 대수치	배우자임금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0.3975***)	X

주: X는 종속변수와 독립적인 관계임을 나타냄.

활수급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V장의 2절 근로장려세제와 여성이슈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이며,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이르며, 가구원을 감안한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6.3%,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의 2.7배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표 V-79>의 실증분석 결과도 여성가구주 및 2차 소득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0% 수준으로 유사하나, 20~64세 연령층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으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1.9배 높아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많은 20~64세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위험에 놓일 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특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IV장의 2절), 근로장려세제 개선시 편부모가구에 대해 고려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 복지패널의 경우 그룹1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패널의 경우 그룹1과 그룹3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두 자료 모두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와 독립적인 관계로 보여진다. 이는 실제 근로장려세제의 목표가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계된 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경제활동참가나 근로시간을 제고시키는 것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여성그룹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빈곤층의 편모가구나 여성가장인 가구에게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여 진다.

〈표 V-79〉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의 경제활동참가 비교: 여성그룹별

구분	복지패널자료: 여성			노동패널자료: 여성		
	group1	group2	group3	group1	group2	group3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경제활동 참가증가 1.4301***	X	X	경제활동 참가증가 0.6811***	X	경제활동 참가증가 0.5374**

주: X는 종속변수와 독립적인 관계임을 나타냄.

group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2차 소득자로서의 여성)

group2: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여성(1차 소득자로서의 여성)

group3: 배우자가 없는 여성(1차 소득자로서의 여성)

다음은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는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 모두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변화시키는 탄력성의 정도가 복지패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0〉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의 근로시간의 비교

독립변수 \ 종속변수	복지패널 전체	노동패널 전체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근로시간증가 1.2143***	근로시간증가 0.9232***
성별차이	X	X
연령	X	X
연령 <sup>2</sup>	X	X
교육연수	X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감소
대도시거주여부 (1:대도시 0:그 외)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증가	X
18세미만아동수	18세미만의 아동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증가	X
log(배우자임금)	배우자임금 높을수록 근로시간증가	X
log(부부합산근로소득)*D (D=1: 부부합산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 D=0: 그 외)	부부합산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사람들이근로시간감소	부부합산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사람들이근로시간증가

주: X는 종속변수와 독립적인 관계를 나타냄.

여성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 복지패널의 경우 그룹1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패널의 경우 그룹1과 그룹3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두 자료 모두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성에게 있어서는 대상을 15세에서 55세로 한정하였을 때만 복지패널의 경우는 그룹2에 노동패널의 경우는 그룹3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효과를 미치는 집단은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연간 임금이 1%증가할 때, 근로시간은 연간 약 138시간, 111시간, 102시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저소득 편부모가구나 여성가장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보육이나 방과후 학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여성의 경제활동 및 근로시간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순효과가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81〉 복지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의 근로시간의 비교: 여성그룹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복지패널자료: 여성			노동패널자료: 여성		
		group1	group2	group3	group1	group2	group3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근로시간 증가	1.3880***	X	X	근로시간 증가	X	근로시간 증가
					1.1156***		1.0221***

주: X는 종속변수와 독립적인 관계임을 나타냄.

group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2차 소득자로서의 여성)

group2: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여성(1차 소득자로서의 여성)

group3: 배우자가 없는 여성(1차 소득자로서의 여성)

# VI

## 여성친화적 근로장려세제(EITC)로의 발전방안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171
2. 정책 과제	177



2008년 급여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효과, 행정비용 절감효과, 소득과악률 제고와 신외도 향상 등을 목표로 하며 시행의 첫 발을 내딛었다.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중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근로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즉,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를 소득분배보다는 저소득층 여성의 근로유인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의 지급단위는 가구단위로 설계되어있다. 따라서 가구단위의 정책집행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여성 가구주 및 '2차 소득자로서의 여성'의 노동공급(노동시장 참가 및 근로시간)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촉진 및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소득지원제도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자료사용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유무에 미치는 효과(extensive margin)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경제활동참가의사 결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주로 2차 소득자이며,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노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가구단위의 정책이 개인단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을 그룹별(그룹1: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 그룹2: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임/ 그룹3: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인 가구나 편모가구, 여성단독가구에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편모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했다는 다수의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대도시거주여부, 18세미만의 아동 수, 배우자의 임금 등은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그룹별(그룹1: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 그룹2: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남성이고 남성이 1차 소득자이면 가장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임/ 그룹3: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남성, 편부가구나 남성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남성의 노동공급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자료사용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intensive margin)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근로시간결정에 대해 의사결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여성이 주로 2차 소득자이며,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단위의 정책이 개인단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을 그룹별(그룹1: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그룹2: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임/ 그룹3: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나 편모가구, 여성단독 가구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모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했다는 다수의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를 줄임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대도시거주여부, 18세미만의 아동 수, 배우자의 임금 등은 맞벌이 가구 여성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그룹별(그룹1: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 그룹2: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남성이고 남성이 1차 소득자이면 가장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임/ 그룹3: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남성, 편부가구나 남성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남성의 근로시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대상을 15세에서 55세로 한정하였을 때만 그룹2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자료사용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extensive margin)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한국복지패널자료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참가의사 결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주로 2차 소득자이며,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노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가구단위의 정책이 개인단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을 그룹별(그룹1: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그룹2: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임/ 그룹3: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과 그룹3(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소득자)인 그룹2에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그룹3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국복지패널과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여성가장인 경우는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18세미만의 아동 수,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여부 등은 말별이 가구 여성 및 편모 또는 단독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그룹별(그룹1: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 그룹2: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남성이고 남성이 1차 소득자이면 가장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임/ 그룹3: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남성, 편부가구나 남성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남성의 노동공급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자료사용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intensive margin)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근로시간결정에 대해 의사결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

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에게는 근로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여성이 주로 2차 소득자이며,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가구단위의 정책이 개인단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을 그룹별(그룹1: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 그룹2: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임/ 그룹3: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 근로소득이 있음. 즉, 기혼여성이고 맞벌이임)과 그룹3(배우자와 이혼사별하거나 미혼인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의 근로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인 그룹2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3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국복지패널과 다른 결과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이는 저소득층이 많이 샘플링된 한국복지패널과 도시가계조사를 원자료로 샘플링한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의 차이라고 보여 진다. 이 밖에 18세미만의 아동 수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가구 여성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그룹별(그룹1: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 그룹2: 배우자가 있고(기혼남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즉, 기혼남성이고 남성이 1차 소득자이면 가장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임/ 그룹3: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남성, 편부가구나 남성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남성의 근로시간은 영향을 받지 않

28)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경우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부부합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를 줄임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대상을 15세에서 55세로 한정하였을 때만 그룹3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구 내 남, 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그룹별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효과도 그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의 다수 선행연구결과들인 편모가구와 여성가장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 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9)</sup>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이전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실효임금(effective wage)의 증가를 이유로 하여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와 동시에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 않는 이유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장가구(그룹2)와 편모가구(그룹3)에 대해서는 추정모형에서 고려되지 못한 다양한 제약요인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시장 참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의 효과가 미약한 것은 적용대상자를 일부 근로빈곤층으로 제한(부부합산연간소득 1700만원 미만)하면서 최대적용소득구간과 점증률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결과로 보여 진다.<sup>30)</sup> 그러나, 그룹2와 그룹3에 대한 결과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소한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등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효임금을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직접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9) 외국의 많은 연구들은 가구당 소득자가 한 명인 홀벌이 가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II장의 1. 가. 참조.

30) 현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제도 간 부정합이 노출되어 탈수급시 상실되는 급여가 크며, 근로장려급여 자체는 적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는 유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정책 과제

앞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강화 및 복지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최대적용소득구간을 연장하여 수급가구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탈빈곤 수단을 가지지 못하여 한 번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빈곤계층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보여주므로 수급가구를 세분화하여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전제로 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은 근로장려세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 □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액 현실화 및 선급 가능화

근로장려세제가 현재처럼 초보적 단계의 제도가 아니라 보다 발전된 제도(full-blown)로 발전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규모가 커져야 저소득층, 특히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효과가 미약한 것은 적용대상자를 일부 근로빈곤층으로 제한(부부합산연간소득 1,700만원 미만)하면서 최대적용소득구간과 점증률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결과로 보여진다. 현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제도 간 부정합이 노출되어 탈수급시 상실되는 급여가 크며, 근로장려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는 유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등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효임금을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직접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ITC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시 상실되는 교육·의료·자활·해산·장제의 현물급여 등 가치 이상의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실질적인 근로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초기 급여 상한액인 연 80만원의 현금 급여는 탈빈곤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므로 빈곤감소와 소득재분배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이 일정액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빈곤감소 효과·빈곤감소 효율성·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급여액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면 해당자녀가 있고 소득기준에 부합한 경우 근로소득공제대상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 대신 매달 해당 세액공제에 따른 환급금을 선불로 월급에 가산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 □ 가구의 유형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급여체계를 차등화

본문의 실증분석을 위해 여성과 남성을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가구 내 여성의 경우, 그룹1은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집단이고, 그룹2는 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근로소득이 없는 집단 즉, 기혼여성이고 여성이 1차 소득자이면서 가장이며, 그룹3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인 집단이다. 남성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나누었다. 이 때, 그룹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기혼여성이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그룹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소득자)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와 중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이 1차 소득자인 가구주나 저소득 편부모 가구의 근로유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세부설계와 관련하여서는 실증분석에서 그룹을 나눈 것과 같이 가구의 유형 및 개인의 유형(예, 맞벌이 가구 내 여성, 홀벌이 가구 내 여성, 편모인 여성 등)에 따라서 급여체계를 차등화하여 이들 가구의 2차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감소효과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31) III장의 1절 라.를 참조할 것.



### □ 개인 단위의 소득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

이와 아울러 2차 소득자로서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인 단위의 소득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운영사례에서 보았듯이 벨기에의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급여액 수준이 낮고, 적용소득 범위도 좁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Credit d'impôt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자영업 및 농업소득도 모두 적용된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대상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설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수급단위가 과세단위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marriage penalty)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2차 소득자(second earner)중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유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층의 기혼여성을 지원하는 소득분배의 역진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구소득에 제한을 가하는 조건 등이나 기타 절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

### □ 기존의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또한 상기 실증분석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로장려세제가 여성 한부모 가구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보육이나 방과 후 학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여성의 경제활동 및 근로시간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순효과가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등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효임금을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직접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 노동수요측면에서 경제·사회적 측면의 지원의 병행 추진 필요

근로장려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다.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현재 사회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의 바우처 사업으로는 노인돌보미, 중증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종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이러한 저소득 여성근로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등 경제·사회적 측면의 지원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 기타 정책과제들

본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석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해보면 다음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중 일반근로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보육이나 방과후 학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여성의 경제활동 및 근로시간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순효과가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차상위층 가운데 장기실직자의 경우 소득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연장급여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장기실직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취약계층이 직면하는 개인 및 가구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직업훈련과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근로장려세제가 바람직한 제도로써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1).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후견기관 프로그램 만족실태 및 정책제언”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빈곤 깨뜨리기Ⅱ 빈곤없는 사회 만들기 토론자료집.
- 강승복(2005).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5월호, p43-54.
- 경남발전연구원(2007).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의미와 기대효과”, *경남정책 브리프*, 제4호.
- 고영선·김광호·김기완·김종일·김현옥·박창균·연태훈·유한옥·윤희숙·이영(2007).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및 지급조서 제출제도」, 2007.
- 김미곤(2003). “EITC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포럼*, vol. 78, p39-49.
-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제31집.
- 김영순 외(2003).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재진·박능후(2005).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재정포럼 정책토론회리포트*.
- 김중숙·이선행·윤병욱(2006). “여성 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현숙·성명재(2006).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 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_\_\_\_\_ (2007).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경제*, 제12집 제1호, p75-117.
- 김현숙·원종학(2004).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혜영·이은주·윤홍식(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세아 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남재량(2007).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노대명·최승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능후(2003).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vol. 78, p515.
- 박성배·김완석·이전오·홍기용·이기화·서희열·정덕주·박성배·송동섭·고은경(2004).

- “여성관련세제의 개편방안”, 여성부 연구보고서.
- 박영란·정진주·황정임(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형수(2004).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재정포럼*, 2004년 6월호, p30-57.
- 박형수·류덕현(2006).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석재은(2005).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 *보건복지포럼*, 제100호, p16-25.
- 안중범·송재창(2000). “저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재분배효과와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제15집 제1호.
- \_\_\_\_\_ (2006). “한국형 EITC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재정논집* 제20집 제2호.
- 안중범·임병인·석상훈(2006). “경기변동과 분배 및 빈곤간 동태적 관계”, *경제학연구*, 제54집 제4호, p5-31.
- 안중범·원윤희·임병인·구창모(2006), 소득공제제도의 정책모의 실험, *공공경제* 제11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 안중석(2004). “경제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시사점”, *재정포럼*, 2004년 5월호, p22-35.
- 안중석(2005).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재정포럼*, 2005년 4월호, p6-33.
- 여성가족부(2005). “분권화와 빈곤을 중심으로 한 2005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 오정진·문미경(2002).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조세제도의 분석과 평가-소득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원윤희(200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 방안”,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제15집 제2호.
- 유지영·정영순(2007). “미국 EITC의 근로유인 및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저학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337-342.
- 유태균(2000). “미국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와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유한욱·박창균(2007).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제도 정비방안,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 이병희·정진호·이승렬·강병구·홍경준(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

구원 연구보고서.

이상은(2007).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제23집 3호.

이혜경·유태균·이선우(2002).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임봉욱(2006).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미국의 EITC를 참고로”,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p167-206.

재정경제부(2007). “근로장려세제 해설” 자료집.

재정경제부,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이야기”, 2008.

전병목,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07.11.

전병목·이상은(2006).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EITC 정책토론회.

전병목·장용성(2005).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전병철(2008). “평균은퇴연령에 대하여”,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전영준(2004).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경제*, 제9권 제1호, p179-225.

\_\_\_\_\_(2007). “비자발적 실업위험 존재시 근로촉진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한국의 공적부조제도 개편 효과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제12집 제1호, p1-37.

조선주(2008). “일하는 여성에게 희망을: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 *젠더리뷰*, 봄호.

\_\_\_\_\_. 김영옥(2008).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최강식(2002). “교육투자의 경제적 수익률 분석”. 『응용경제』 4권 2호, 5-29.

최현수(2003). “EITC제도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 *보건복지포럼*, vol.78, p16-29.

\_\_\_\_\_(2004a). “EITC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_\_\_\_\_(2004b).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_\_\_\_\_(2007). “근로장려세제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134호.

한국조세연구원(2007).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재정포럼* vol. 130, p82-97.

한국조세연구원(2007).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재정포럼*, vol. 130, p82-97.

한국조세연구원(2007). “2007년 경제운용방향”, 경제점검회의자료.

한도숙(2000).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황덕순(2000).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Averett, Susan L., H. Elizabeth Peters, and Donald M. Waldman(1997). “Tax Credits, Labor Supply, and Child Ca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9, No. 1, p125-135.

Bishop, Kelly C., Heim, Bradley T. and Mihaly, Kata, “Single Women’s Labor Supply Elasticities: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Blank, R., Card, D. and Robins, P.(1999). “Financial Incentives for Increasing Work and Income among Low-income Families,” NBER working paper 6998.

Blank, Rebecca M., David Card, and Philip K. Robins(2000). “The Labor Market Impact of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Fiscal Studies*, p65-74.

Blundell, Richard(2006). “Earned Income Tax Credit Policies: Impact and Optimality, The Adam Smith Lecture, 2005,” *Labor Economics*, Vol. 13, p423-443.

Blundell, Richard, Alan Duncan, Julian McCrae, and Costas Meghir(2000). “The Labour Market Impact of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Fiscal Studies*, 21(1), p75-103.

\_\_\_\_\_(1999). “Evaluating In-Working Benefit Reform: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in the UK”, paper presented at the Institute for Poverty Research Conference, North Western University, November.

Browning, Edgar K.(1995).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ome and Welfare.” *National Tax Journal*, 48: 23 - 43.

Dickert-Conlin, S. and Houser, S.(2002). “EITC and Marriage,” *Stanford Law Review*, Vol. LV, No.1, p25-40.

Dickert, Stacey, Scott Houser, and John Karl Scholz(1994). “Taxes and the Poor: A Micro-simulation Study of Implicit and Explicit Taxes.” *National Tax*

Journal Vol. 47 No. 3

- \_\_\_\_\_(1999). "Texas and Transfers: Their Effects on the Decision to End a Marriag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 Eardley, T. ET AT.(1996).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ies", Vol.1: Synthesis Report. HMSO.
- Edgerton, J.(2002).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Stanford University. May 2002.
- Eissa, N. and H. W. Hoynes.(1998).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NBER Working Paper. #6856.
- \_\_\_\_\_(2005). "Behavioral Responses to Taxes: Lessons from the EITC and Labor Supply," NBER Working Paper 11729.
- Eissa, Nada and Hoynes, Hilary Williamson(1999).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194-99
- Eissa, Nada, and Jeffrey B. Liebman.(1996).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 605 - 637.
- Ellwood, D.T.(2000).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Policy Reforms on Work, Marriage, and Living Arrangements," *National Tax Journal*, Vol. LIII, No. 4, part 2, p1063-1105.
- Friedman, M.(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uber(1994). "The incidence of mandated maternity benefits,"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p622-641.
- Hotz, V. J. and J. K. Scholz(2001).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NBER working paper 8078.
- \_\_\_\_\_(2002).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ugust 29.
- Hotz, V. J., C. H. Mullin, and J. K. Scholz(2006). "Examining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Families on Welfare," NBER Working Paper 11968.
- Korenman, Sanders D. and David Neumark(1992). "Marriage, Motherhood and Wag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p 233-255.

- Lee, Chul-In(2004). "The Effects of the Korean Income Taxation on Labor Supply and Welfare: A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Approach Combined with IV Estimat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20, No. 2.
- Lee, Myungheon and Young Jun Chun, "The Effect of EITC on Labor Supply", University of Incheon.
- Leigh, Andrew(2005). "Optimal Design of Earned Income Tax Credits: Evidence from a British Natural Experiment," CEPR Discussion Paper No. 488.
- Liebman, Jeffrey B.(1998).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entives and Income Distribu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12, MIT press.
- Meyer, Bruce, and Daniel Rosenbaum(1998). "Welfar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Single Mothers." Mimeo, Northwestern University.
- Meyer, Bruce D.(2002). "Labor Supply at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The EITC, Welfare, and Hours Worke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2, p373-379.
- Millar, J. and C. Glendinning(1989). "Gender and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8(3), p363-381.
- Millar, J.(1996) "Women, Poverty and Social Security", in C. Hallett ed. *Women and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London: Prentice Hall; Harvester Wheatsheaf.
- Moffitt, R.(2002). "Economic Effects of Means-Tested Transfers in the U.S.," NBER working paper 8730.
- \_\_\_\_\_(2003a). "Introduction," *In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ed. R. Moffit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2003b). "The N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NBER working paper 9751.
- Reuben Gronau(1998). "A Useful Interpretation of  $R^2$  in Binary Choice Models (Or, Have We Dismissed the Good Old  $R^2$  Prematurely)," Working Papers 776.
- Scholz, J. K.(1996). "In-Work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 Economic Journal*, 106(434), p156-169.
- \_\_\_\_\_(1997). "Testimony for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May 8.



Ventry D.(2000). "The Collision of Tax and Welfare Politics: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1969-1999." *National Tax Journal*, 53(4) (part 2), pp. 983-1026.

<http://www.irs.gov/index.html>

<http://www.hmrc.gov.uk/index.htm>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2882.xhtml>

## Abstract

#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emale Labor Supply: Empirical Analysis and Policy Agenda

Sun-joo Cho  
Young-ock Kim  
Sun-haeng Lee

2009 EITC payment-applicable households based on their income in 2008 are total 310,000 households and it is estimated that 150 billion won will be need for it every year. However, introduction of the current EITC faced many problems in connection with other social welfare system as well as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poverty reduction objectives. In this situation, it is not too much say that EITC was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on single childless women, single mothers and the connection with female labor market.

Since the EITC payments have not yet been generate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fluence of EITC implementa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supply decision making and labor supply hours.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study applied '2SLS Method' and 'Probit Method'. Korean welfare panel data suggest and analyzed the impact of EITC on labor supply responses on the participation and hours worked. Since EITC is provided by household unit, the case that the spouse does not have any income and the case that the spouse does not exist are separat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if EITC is implemented,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hours worked would be increasing. However, after separating female group as I mentioned above, there is a tendency that women whose couple's aggregating income is under 17 million won enlarg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hours worked while EITC does not show any effectiveness when a spouse does not have any income and single childless wome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household unit should be segmented as single childless women, single mothers and two-paycheck couple and provision of payments should be differential.

2008 연구보고서-3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

2008년 12월 29일 인쇄

200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ISBN 978-89-8491-243-4 93330

<정가 13,000 원>